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 —

목 차

01	유엔의 지난 권고 및 견해 이행 현황은?	07
02	2015년 이후 인권 증진·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발전은?	11
03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는?	16
04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는?	17
05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20
06	성소수자(LGBTI)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조치는?	24
07	여성의 사회생활 참여와 여성 리더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27
0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30

목 차

09	테러방지법이 엄격하게 ‘테러’에만 적용되는지?.....	41
10	사형제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45
11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46
12	고문, 가혹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는?.....	48
13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54
14	인신매매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58
15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는?	64

목 차

16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66
17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을 접견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69
18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는?	73
19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77
20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사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는?	82
2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84
22	명예훼손 비범죄화 ·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에 대한 입장은?	87
23	공무원, 교사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89

목 차

24	정당해산·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수용자의 선거권 제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은?.....	92
25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95
26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는?	99
27	보편적 출생등록제 및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노력은?.....	103

질의 01

위원회의 지난 최종견해(CCPR/C/KOR/CO/4)에 포함된 권고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또한 규약 선택의정서에 의거한 위원회의 견해(View)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마련했는지, 당사국과 관련해 채택된 각 견해,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많은 견해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 정부는 2018년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이하 'NAP')을 수립하였다.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2차례의 공청회와, 정책과제별로 유관 시민단체 및 정부부처가 참여한 총18회의 간담회를 거쳐 수립된 제3차 NAP에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다수 수록되었다. 주요 과제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검토,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책임성 제고 및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을 통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등이 있다. 아울러 제3차 NAP는 위원회를 포함한 국제협약기구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발표한 최종견해들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각 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할 때 이를 널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의 전 쟁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 최종견해 이행에 대한 정보

2. 최종견해 제17(c)항 관련, 정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및 위탁형 교육제도 운영을 통한 학습권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미혼모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높여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고자 ‘교사용 청소년 한부모 상담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다. 또한 미혼모 등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과 학업 및 자립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만 25세 이상인 미혼모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전세 및 매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에게는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집중케어를 제공하는 주거복지동 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역시 부여된다. (자세한 지원 실적은 **부록 <표-1> 참조**)

3. 최종견해 17(c) 중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정부는 미혼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2018년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4. 최종견해 제35(c) 관련, 현재 구분수용(제8조), 보호장비 사용(제33조), 징벌원칙(제30조), 위생(제12조~제14조) 등 대부분의 「유엔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하 ‘만델라규칙’)규정이 교정 관련 법령에 반영되어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다. 그 밖에 2015년 이후 정부가 만델라규칙에 부합하는 수감제도 마련을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 (a) 만델라규칙 제58조(외부와의 교통)관련, 2016년 2월부터 민원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형자와 편리하게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을 시행하여, 수형자의 외부교통권을 확대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향후 서버 증설 등을 통해 미결수용자까지 스마트접견을 확대할 예정이다.
 - (b) 만델라규칙 제11조(피구금자의 분리) 관련, 2017년 7월부터 구인을 위한 구

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이하 ‘구인피의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수용동 내 별도 유치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인권을 보호하며, 간소복을 착용하게 하여 일반 미결수용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 만델라규칙 제24조~제35조(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현재 42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1회 22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검진항목을 31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다. 연간 건강검진 실시 인원은 2005년 20,643명에서 2018년 38,943명으로 증가하였다.

(d) 만델라규칙 제12조~제17조(거주설비)와 관련해서는 전국 교정시설 LED조명 설치, 난방 개선, 화장실 양변기 설치 등 시설·생활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18조(개인위생), 제19조(의류 및 침구)와 관련해서도 공동세탁기 설치, 반팔티셔츠 지급, 개인용 식판 보급 등 위생증진 및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후로도 현행 법령, 수용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엔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교정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선택의정서에 따른 위원회의 견해 이행을 위한 조치

5. 규약 선택의정서에 의거한 위원회의 견해(View)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05년 이후 위원회의 견해를 번역하여 모두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견해의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자유권 선택의정서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존중 및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국정과제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위원회의 견해를 포함한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매커니즘 수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기한 진정을 포함하여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가 내려진 때에는 단순히 위원회의 견해만으로 확정판결을 무효화하기는 어려워, 견해에 포함된 권고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

6.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견해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이행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질의21에 대한 답변과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형사보상에 관한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자는 법원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부는 피해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질의 02

국내 법원이 자유권규약 조항을 인용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 최종견해 채택 및 당사국의 후속보고 이후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의 발전에 대해 보고하기 바란다.

일의 세계에서 노동자의 권리 및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발전

A. 직장 내 괴롭힘 방지

7. 대한민국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 7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고용노동부는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전국 8개소의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의 진정은 2020. 3. 31. 현재 총 3,347건이 접수되었고 2,739건이 처리되었다. 자세한 접수 및 처리 통계는 **부록 <표-2> <표-3> 참조**. 한편, 정부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조사 및 조치 등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B.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8. 대한민국 정부는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18.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하였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C. 산업안전보건조치 확대

9. 근로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2018. 12월 법의 보호대상 확대, 원청의 책임확대, 유해작업의 도급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였다.
10. 개정 법률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1. 또한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위험 작업들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으며,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원청 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로 한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은 원청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2. 그 외에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2018년 8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폭염, 한파 등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자를 위한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2천만원 미만 무면허건설공사’ 등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 시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승인요건을 개선하였다.
13.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전에 위험요인(추락, 충돌, 끼임 등) 중점으로 실습, 사례 중심의 맞춤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통역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6개국 언어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 이주여성 지원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통역인 양성 계획 중에 있다.

D.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개선 노력

14. 농축산·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농축산업 2015년 10월, 어업 2017년 4월)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 1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 숙소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전 기숙사 시설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임시숙소 등 기숙사 시설기준 개선을 계획중에 있다.
15. '20.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 제도를 개편하여, 농축산·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장에는 가점(advantage)을 많이 부여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및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사업장에는 감점(disadvantage)을 많이 부여하여 중대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은 향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이 어렵도록 하여 사업주의 인권보호 노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였다.

국내 법원이 「자유권규약」 조항을 인용한 구체적 사례

16. 국제인권조약의 규범적 지위가 국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이 적용·원용된 판결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 (a) 2018. 11. 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General Comments No.22)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음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10912).
 - (b) 2018. 9. 21.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에 실시되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것은 추가시험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제19조)와 종교의 자유(제20조)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8조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계 법령이나 대학교 학칙 등도 최대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2018누3005).
 - (c) 2016. 2. 18. 제주지방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문제된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하여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자유권규약」 제19조에 정한 표현의 자유 및 제21조에 정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력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4노589).

그 밖에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 워크의 발전 중, 심의 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사항

17. 대한민국 법원은 2016. 2. 3.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다양한 사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각종 법률구조 및 공익지원 활동까지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One Stop Platform)으로 이른바 ‘사법접근센터’를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이어 2019. 12. 2.자로 개원한 전주지방법원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8. 정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조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의 기관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질의 03

지난 최종견해(9번 문단)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지명 및 임명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19.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였다.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였다. 자격기준에는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도 포함하여, 인권옹호자 역시 경력을 인정받아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였다.

질의 04

지난 최종견해(11번 문단)와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당사국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기업이 그 활동에 있어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되는 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에 의한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하길 바란다.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 일반

20.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NAP를 수립하면서 기업과 인권 분야를 다루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장에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확보,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의 구체적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현재 이들 과제를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제4차 NAP 수립 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들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 NAP 수립 시 포괄적 NAP에 비해 다양한 인권정책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므로, 필요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예정이다.
21. 정부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 기업에 안내하는 ‘인권경영 길라잡이’를 개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피해자 구제 등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활동(이하 ‘인권경영’)에 대한 정부의 기대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비재무정보 공시의 단계적 제도화 등 기업들의 인권경영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맥락에서, 정부는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했던 집단소송제도를 소비자 피해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을 국

정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5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법령·정책 개선 연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

22. 또한 정부는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사회·환경적 요소에 대한 책임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업의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정책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수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별로 부진한 항목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교육 및 국제 기준 등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12월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리경영 관련 정책

23. 또한 정부는 2005년부터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를 제작하여 기업과 경제단체 소속 7,400명에게 최신 국내외 청렴 및 윤리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ISO 37001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기업의 청렴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해 왔으며, 2017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에 배포하였다. 또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 임직원이 기업윤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업청렴경영 e-러닝센터’ 웹페이지를 2017년에 구축하여 애니메이션·동영상 등 13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NCP 관련 개선사항

24. 한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NCP(국내연락사무소) 운영 규정을 2017. 2월, 2018. 1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2017. 2월 개정에서는 위원수를 확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고, 2018. 11월 개정에서는 NCP위원 추천절차를 명문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NCP는 당연직 정부위원 4인, 민간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기업책임경영을 다 할 수 있도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해외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 사례를 알리기 위한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에 의한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취한 조치

25. 나아가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현지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한 데에 따라 기업의 정당한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을 증진하고자 2019. 12월 정부합동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진출국 공관에서 '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현지 공관이 해외진출기업의 노무·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CSR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며, 현지 노동법 등 노무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26.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장려하며 인권경영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 여부를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서 인권경영 지표를 신설하여 2019년 실적(2020년 평가 시행)부터 적용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114개 지방공기업 직영기업도 인권경영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조치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 및 확대할 것,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다.

질의 05

지난 최종견해(13번 문단)와 관련해,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특히 소수인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하기를 바란다. 또한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며, 인종과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같은 맥락에서 공적 또는 사적 행위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가해지는 제재와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알려주길 바란다.

소수인종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27.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대중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된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에 따라,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차별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 관계자를 제재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리고 있다. 차별·비하, 잔혹·혐오, 욕설 등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통계는 **부록<표-4>**와 같다.

28. 정부는 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 문화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근절하고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무지개다리사업’을 통해 소수계층의 문화적 표현기회 확대, 다양한 문화주체 간 상호 소통·교류 촉진 프로그램(다양성연극제, 디아스포라영화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26개 지역에서 224개의 프

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9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정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단위 주간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29.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국내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후 하나원 입소 시부터 기초 사회 적응교육 및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초기 정착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거주지 전입 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며, 23개 정부부처·지자체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인 정착지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생활안정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각종 심리·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30.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학교 편입학, 교육과 생활 적응을 위한 1:1 멘토링, 진로·직업교육 및 전문상담 등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정책의 결과, 탈북학생의 초·중등교육 학업중단율은 2008년 10.8%에서 최근 3% 이내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이해 교육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밖에 모든 유형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31. 2016년 여성가족부와 방송 심의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성별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차별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 관계자를 제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상파·케이블TV와 같은 전통적인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

체 등 뉴미디어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관점의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성평등 의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32. 장애인이 일의 세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2018. 5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법정 의무화하였다. 법정 의무화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해당 교육이 의무화된 대상 사업체 수는 402만 개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근로자 수는 2,162만 7천명에 달한다.
33. 또한 대한민국 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여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매년 2~6곳씩 순차 설치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인 민원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적인 상담 및 사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각급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 내의 양성평등 문화진작을 위하여 2016. 3월부터 경력별 법관연수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검토 경과

34. 대한민국 「헌법」 및 다수의 국내 개별법이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정부가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사실은 제4차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CCPR/C/KOR/4, para. 376-377). 2013년에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4차례 개최하였다. 2018년 수립된 제3차 NAP에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가 추진과제로 포함되었다. 한편 2020. 6. 29. 국회에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등 23개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직접·간접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의원발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6. 30. 유사한 내용의 ‘평등법’

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이를 입법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입법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법과의 법체계적 조화 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차별금지 법제 정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 구제

35.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법원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적 행위자가 위법한 차별행위를 한 때 피해자는 법원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모든 사람은 다른 사인(私人)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권리를 침해받고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법한 차별행위를 저지른 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6. 그 외에도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규정한 개별 법률을 위반한 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악의적인 장애인차별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해당 법률을 위반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차별행위를 한 자가 차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료·심리·사법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질의 06

지난 최종견해(15번 문단) 및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CCPR/C/124/2, 10-12쪽)와 관련하여, 군대 내를 포함하여,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인(LGBTI)에 대한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주길 바란다. 당사국이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제출한 첫 번째 부속문서에서 당사국이 제시한 정보 (CCPR/C/KOR/CO/4/Add.1, 3-9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을 위해 취한 조치를 명시하라.

- (a) 공식 행사 등에서 LGBTI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전환 치료'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 (b) LGBTI 보호를 위한 법적 틀 강화
- (c)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 건수를 알려주기를 바람.
- (d) 성전환의 법적 인정에 대한 접근(access) 개선
- (e) 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성(性) 및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성정체성에 대한 통합적이고 정확하며 나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과정 개발

LGBTI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38. 차별, 혐오표현, 폭력이 모욕·명예훼손·폭행 등 범죄에 이를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 행위가 차별에 기인한 점은 사법부의 양형기준에서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명예훼손정보”와 “반복적인 공포심·불안감 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39. 나아가, 특정 성별이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대중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된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등은 방송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성별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차별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 관계자를 제재하고 있다.
40. 정부는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애자 병사가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규정하여 제반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부대관리훈령」은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모욕·욕설·성희롱·성폭력 등을 금지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각 보고하고 해당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병사에 대한 강제 전역조치나, 그린캠프나 병원 입원을 부대에서 동성애자 병사를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나아가 지휘관은 이 훈령에 따라 장병 인권교육에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1. 나아가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성(性) 관련 고충을 겪고 있는 군인, 군무원 대상 성폭력 상담 지원을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상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군내 성소수자도 여타 장병들과 차별없이 피해자 신상 및 사건 관련 비밀이 엄수된 가운데, 상담 인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성폭력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안내,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상담관 동행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42. 정부는 교정시설에서도 「유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조(기본 원칙)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수용처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7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용자 본인의 의견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성적체성, 신체적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위 방안의 내용을 개선하여 2020년 4월 전국 교정기관에 재차 시달하였다.

성전환의 법적 인정에 대한 접근 개선

43. 대한민국 법원은 종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성별정정 신청 시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던 부모 동의서를 삭제하여 성전환의 법적 인정 절차를 개선하였다.

군형법 관련 조치

44. 한국군은 장병들의 동성애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253조) 다만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의 경우 군 기강을 저해하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장병들의 동성애 성향에 따른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화하여 유의하고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253조)
45. 최근 5년간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수사한 통계는 아래와 같다.

구분 연도	총계	불 기소	기타 (수사중, 민간이송)	기 소						기타 (재판중)
				실형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이송	
2015	6				2		2		2	
2016	8				1		2		5	
2017	28	16		1	5		1		1	4
2018	11	9			2					
2019	4	4								

46.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수차례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바20, 2011. 3. 31. 2008헌가21, 2016. 7. 28. 2012헌바258) 다만 추행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와 군은 과잉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 및 기소 시에 추행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추행죄 기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질의 07

지난 최종견해(17문단)와 관련해, 여성의 사회생활 참여를 증가시키고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여성 지도자 및 여성 의사결정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일의 세계에서 성차별 근절 노력

47.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가 최종견해 16문단에서 우려를 표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민간 및 공공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첫째, 채용시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2018년 공공기관·금융권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차별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2018년 9월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절차 보완 및 처벌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2018년 9월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시정절차를 노동위원회에 도입하여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정 배상(손해액 3배 범위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중에 있다.

48. 둘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 등 근로조건에서의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성별임금격차가 다양하고 복합적 이유로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출산, 육아기 경력단절,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높은 비중, 불합리한 임금차별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AA대상 사업장 전체에 임금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AA는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는 제도이나, 해당 사업장의 현황 보고 등을 강제하기 위해 행정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2020년부터 AA 이행부진사업장 중 명단공표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CEO 인터뷰가 포함된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남녀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적용 대상을 종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 중이다. 나아가 민간 기업의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기업규모·산업 등 ‘기업특성별 임금 분포현황 공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조치

49.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시·도 광역의회의원이 증가하였음은 제3차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69). 이에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대(’00년) 5.9%에서 20대(’16년) 17.0%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역대 여성 국회의원 통계는 부록 **부록 <표-5> 참조**)
50. 나아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양성 간 평등 확보를 위하여 남녀 채용비율을 설정하여 목표치에 달성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하여 2017년 11월 도전적 목표치와 실질적 이행력을 갖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고위직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여성인재 DB’를 확충하고, 정부위원회·개방형 직위 등 추천에 활용하였다. 이에 2019년 추진실적 점검에서 12개 분야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 여성임원(21.1%), 중앙 부처 과장급 공무원(20.8%) 등 6개 분야는 ’22년 목표까지 조기 달성하였다. (구체적 성과에 대한 통계는 부록 <표> 참조.) 그 외에도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도입, 주요 정부 평가에 ‘여성 의사결정 권한’ 지표 반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표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19년 분야별 이행현황 〉

추진 분야	’18년 실적(%)	’19년			’20년 목표(%)	’21년 목표(%)	’22년 목표(%)
		목표(%)	실적(%)	달성률(%)			
① 고위공무원	6.7	7.2	7.9	109.7	8.2	9.6	10.0

추진 분야	'18년 실적(%)	'19년			'20년 목표(%)	'21년 목표(%)	'22년 목표(%)
		목표(%)	실적(%)	달성률(%)			
② 본부과장급(4급 이상)	17.5	18.4	20.8	113.0	21.0	22.5	25.0
③ 지방 과장급(5급 이상)	15.6	15.9	17.8	111.9	18.6	20.0	21.0
④ 공공기관 임원	17.9	18.4	21.1	114.7	21.8	22.4	23.0
⑤ 공공기관 관리자	23.8	24.1	25.1	104.1	25.4	26.6	28.0
⑥ 지방공기업 관리자*	6.9	8.1	9.1	112.3	9.3	9.6	10.0
⑦ 국립대 교수	16.6	17.0	17.3	101.8	17.5	18.1	19.0
⑧ 교장·교감	42.7	43.0	44.1	102.6	44.3	44.7	45.0
⑨ 군인 간부	6.2	6.7	6.8	101.5	7.4	8.1	8.8
⑩ 일반경찰	11.7	12.6	12.6	100.0	13.4	14.2	15.0
⑩-1 관리직(신규)	5.9	6.1	6.1	100.0	6.3	6.6	7.0
⑪ 해양경찰	12.0	12.6	12.7	100.8	13.2	13.8	14.4
⑪-1 관리직(신규)	2.2	2.3	2.5	108.7	2.6	2.7	2.8
⑫ 정부위원회*	41.9	40.0	43.0	107.5	40.0	40.0	40.0

*('18년) 300인 이상(25개)→('19년) 전체(151개)로 확대

51. 한편, 민간 부문은 2020년 1분기 기준 상장법인 전체(2,148개)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은 4.5%에 불과했고, 여성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은 33.5%에 그쳤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을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10개 경제단체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공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여성 임원확대 목표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업과의 자율협약 체결 캠페인을 전개하여 '20년 7월까지 71개 기업과 19개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기업 CEO 대상으로 성별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제공해 기업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상장법인 전체 임원 성별 현황, 주요 산업별 여성 임원 확대 장애 요인을 조사하는 종합 연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2019년 11월부터 기업 내 성별 균형 확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19년도에 27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에서의 성별 다양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질의 08

지난 최종견해(19번 문단)와 관련해,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수사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며, 피해 여성이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 접수 건수, 수사 개시 건수, 기소 건수, 선고된 판결에 대한 통계와, 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된 구제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길 바란다.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경찰·사법부·검찰·지역대표·남녀 모두에 대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택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피해자들이 대안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택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직장 내 성희롱과 여성 사생활 침해 목적의 공공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택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합법화 결정 준수를 위해 택한 절차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조치

52. 2015. 7. 정부는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검찰은 가정폭력 상습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 3년 이내 가정폭력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

5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범의 기소에 대한 통계는 아래와 같다.

구분 연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가정보 호사건 송치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 하		
2015	47,007	46,545	1,748	2,222	1,245	4,802	63	17,316	11	18,207	931
2016	54,191	53,237	1,793	2,734	1,500	4,510	67	21,185	11	20,311	1,126
2017	47,036	46,912	1,609	2,880	1,450	3,779	57	17,998	14	17,184	1,941
2018	39,183	39,188	1,550	2,618	1,440	2,852	73	14,584	13	14,253	1,805
2019	53,364	53,238	1,840	3,153	2,178	3,798	69	19,380	16	19,818	2,986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5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 통계는 아래와 같다.

구분 연도	접수건수 (인원수)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결정 등
2015년	25	22	4	4	9		—	—	5
2016년	56	49	4	20	20		1	—	3
2017년	41	42	7	12	20		—	1	2
2018년	63	51	10	17	18	2	2	—	2
2019년	63	64	17	19	21	—	—	1	6

주 : 1. 제1심 형사공판 특별법범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자료임. 2. 집행유예(벌금형)의 경우, 2018.1. 이후 시행됨

〈 표: 가정보호사건〉

구분 연도	접수	처리			
		합계	보호처분	불처분	기타
2015년	20,131	16,868	8,917	7,319	632
2016년	22,482	21,802	11,368	9,792	642
2017년	18,971	20,622	11,562	8,802	258
2018년	19,739	18,448	10,936	7,310	202
2019년	23,699	23,139	13,360	9,579	20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조치

A. 법적 프레임워크의 발전

55.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5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9년 1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57. 2018년 10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추행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특수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58. 2020년 3월 소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B.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정책

59.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이 대두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권력관계의 성범죄 등 기존 체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던 여성폭력 유형이 사회 문제로 등장한 데 따라, 젠더폭력에 대한 수사 전문성 강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도 강화되었다.

60. 대검찰청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검찰 내부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범죄 전담 검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젠더 폭력 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 및 교육하였다. 또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단을 위하여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2020. 4. 9.시행)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관련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부록 <표-6> 참조)

61. 경찰 역시 치안수요자인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경찰청은 2019년 5월 여성대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성안전기획관” 조직을 신설하였다. 2018년 상반기에는 전국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및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2018년 상반기에 불법촬영,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對)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을 강력 추진하였다. 하반기에는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오프라인 촬영자 및 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에 대한 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3,847명을 검거하였고, 음란사이트 150개의 DNS 접속을 차단하고 92개를 폐쇄하였다. 2019년에는 1월부터 ‘웹하드카르텔 근절 집중단속’을 계속하여,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웹하드 62개를 단속하고, 운영자 119명 및 헤비업로더 등 898명을 검거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담수사팀 인력을 지속 확대해 집중수사를 전개하고, 수사관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하며, 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

A.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

62. 정부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를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2018년 11월말에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상세 개선내용 **부록 <표-7> 참조**)
63.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상담, 임시보호, 치료회복 지원, 법률지원, 피해자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하고자 2019년 현재 전국 128개소의 상담소에 정부예산 84억원을 지원하였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내용별 실적은 **부록 <표-8> 참조**)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정된 공간에서 보호를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8년 현재 전국에 66개소의 보호시설(쉼터)을 운영 중이며, 314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공동생활 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1인당 5백만원의 자립지원금과 의료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등을 통해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및 지원 실적은 **부록 <표-9, 10> 참조**)
64. 또한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고(「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민자에 대해 자녀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B.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 보호 정책

(a) 법적 프레임워크

65. 대한민국이 2010년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사실은 제4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CCPR/C/KOR/4, para. 70, 77.)

66. 정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8월 31일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 피해자 지원 정책

67.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각종 지원시설에서 상담, 임시보호, 의료·치료회복 지원, 법률지원, 피해자 수사기관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8. 정부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다.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또는 신체적 치료비를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정신적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도 지원한다. 또한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치유 기관으로서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3개소를 전액 국고보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 중에 있다.

69.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39개소의 해바라기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2019년 전국 39개 해바라기센터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별 접수건수는 26,585건이었다. 서비스 지원 건수는 413,177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해바라기센터 이용 실적 현황은 **부록 <표-11> 참조**)

70. 또한 피해자 및 피해유형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자립·자활 교육,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확대하였다. 2015년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대상의 동행서비스 지원범위를 치료·수사·교육·문화 등 동행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71. 정부는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담, 수사지원(채증),

삭제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까지 지원하는「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의사소통의 어려움, 폭력피해 노출, 임금체불, 체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쉬운 이주여성을 위하여 2019년에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를 5개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72.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피해자 의료기관·보호시설로의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및 수사·재판 등 동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으로 정상적인 학업·사회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 취업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은 **부록 <표-12, 13> 참조**)

73. 또한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 구제를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민사·가사·형사사건 관련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통계는 **부록 <표-14, 15> 참조**) 나아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구조, 전국 65개 지역에 배치된 법률상담터(변호사)를 통한 1차적 법률상담 역시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정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실적은 **부록 <표-16> 참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74. 정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항을 2013. 7. 30. 일부 개정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기관이 국가기관까지 확대하였다.

75. 특히 법집행 공무원에 관하여, 법무연수원은 검사를 대상으로 '여성·아동 범죄 수사 전문가과정'에 '가정폭력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매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급 법원 또한 2014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집합교육뿐 아니라 영상교육자료를 내부 네트워크에 게시하여 개인별로 시청하게 하고 있다.

76. 또한 정부는 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정서적 폭력, 경제적 통제도 가정폭력에 해당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 : 매월 8일), 가정폭력 추방주간(매년 11.25.~12.1.)등을 계기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영상물의 대중매체 및 유튜브 송출 등을 실시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77. 2018년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시행되었다. 이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여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 목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18년 수립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78. 나아가, 기존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던 스토킹범죄 등 다양한 젠더 기반 폭력 범죄가 대두된 데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2월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관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0년 출범한 제21대 국회에서 위 법률의 제정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치

A. 법적 프레임워크

79. 대한민국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방지조치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근거하여 착실히 수행하여 왔다. 특히 대한민국은 201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19년 근로자참여법 개정(2019. 4. 16.) 등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 신설,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있다. 2018년 3월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활성화 및 피신고사업장 조치 강화를 위해 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2019년 10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신고자가 사건경과 및 2차 피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B. 정책 및 조치

80.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미투 운동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2017년 1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018년 3월에는 정부기관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지속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 5월에는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였다. 또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18년부터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증대(15→21개소)하여 운영중에 있다.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정절차

를 노동위원회에 도입하여 불이익 행위의 중지, 적정 배상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나아가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내부 징계조치 등 간접 제재는 받으나 사업주로서의 처벌은 부과되지 않는 것과 관련, 법인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81. 또한 2019. 9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무료 강사지원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사업장을 확대·시행해 왔다.
82. 공공부문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성희롱 전담창구 설치·운영 등 각종 성희롱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은 2018년 말 기준 17,581개 전체 공공기관 중 99.9%가 실시하였으며, 조직 내 성희롱 등 고충상담 사건처리를 위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99.9%), 고충상담 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다수의 기관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외부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기관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 사생활 침해 목적의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83. 2017년 9월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으로써 성적 목적으로 공공화장실을 침입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

였다. 2018년 12월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불법 촬영 및 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상습범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임신중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84. 2019년 4월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국가가 헌법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절을 금지 및 처벌함이 모든 경우에 위헌은 아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침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고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유관기관 토론회, 각계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다. 현재까지 여성계,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가 실시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수렴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토대로 임신중절 허용 시기·사유·절차요건 등을 포함한 안을 마련하여 입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85.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합법적 범위 내 임신중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후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전문상담센터 내 전문 상담인력 확충을 추진 중에 있다. 나아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성인 등 대상으로 피임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법이 인공임신중절 수술만을 허용하므로 자연유산유도약물의 법적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질의 09

지난 최종견해(21번 문단)와 관련해, 현 법률상 테러와 사이버 테러의 정의를 보고하고, 대테러법 및 실무가 자유권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오직 테러에만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86. 2016.3.3 제정·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에서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정의는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관련된 UN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의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가 지난 최종견해에서 언급한 ‘대테러조치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16/51) 제28항과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66호(2004년)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운항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87. 사이버테러는 현행 「테러방지법」의 정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에 사이버테러를 특정하여 가중처벌하거나,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일반적인 범죄수사 관련 법령을 벗어난 처분을 허용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88.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범죄 역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규약에 부합하는 피의자 권리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제2편 제1장 등에 체포·구속·구금과 관련된 적법절차 원칙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변호인 조력권, 무죄추정의 원칙,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43조의2, 제326조 제1호, 제338조 이하 등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2조가 테러·테러단체·테러위험인물·대테러활동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테러법률 및 실무는 엄격하게 테러 분야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 정보제공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른 요건 및 절차에 따라서 수집하도록 하여 법률에 따른 통제를 받고 있다.

89. 더불어,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정보·수사기관 공무원이 테러단체구성죄 등에 대한 무고·위증·증거날조 등의 행위 시 가중처벌 조항을 두는 등 인권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의적 간섭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복합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질의 10

지난 최종견해(23번 문단)와 관련해, 당사국이 자유권 규약의 제2선택의 정서에 가입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사형제의 법률상 폐지 및 사형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길 바란다.

90.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가 인간의 천부적 존엄 및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제2선택의정서의 취지에 공감하며,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는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해외 추세, 국제기구의 관련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질의 11

지난 최종견해(25번 문단)와 관련해, 당사국 내 군대 등에서의 자살 건수에 대한 최신 분리통계를 제시하길 바란다. 자살 예방, 특히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

91.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자살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2.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19개 부처·청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 현재 6개 분야 총 62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5년간 발생한 자살사망자 7만 명의 전수조사에 기반하여 구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100만 명 양성,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과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강화,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 확대,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등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온라인 상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확대, 실직자·퇴원정신질환자·특수직렬 공무원 등 자살위험이 높은 대상별·연령별 자살예방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2019년 9월에는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지원을 구체화한 국가행동계획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93.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효과적인 범부처 정책 대응을 위해 2019년 9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자살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촉진 정책, 소득 부양 정책 등 각종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 차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1차:

'13~'17년 자살사망자 6.5만명, 2차: '18~'19년 2.6만명)의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 분석 결과에 따라, 자살 위험요인 및 취약 대상별 위기개입을 집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살에 대한 통계

94. 자살에 대한 최신 분리통계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의 자살사망자 통계는 다음 연도 9월에 확정되어 발표되므로, 본 보고서의 제출 시점에서 최신 통계는 2019년 9월 발표된 2018년 통계이다.

〈2018년 성별, 연령별 자살률 및 자살사망자 수〉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자살률	26.6	38.5	14.8	0.0	5.8	17.6	27.5	31.5	33.4	32.9	48.9	69.8
자살 사망자 수	13,670	9,862	3,808	0	301	1,192	1,998	2,676	2,812	1,880	1,664	1,147

95. 군대 내 자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54	51	56	62
성별	남	52	50	56	60
	여	2	1		2
연령별	20~29세	34	37	37	43
	30~39세	12	6	9	10
	40세이상	8	8	10	9

질의 12

지난 최종견해(27번 문단)와 관련해, 정신적 고문을 포함한 모든 고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을 독립적 범죄로 성문화하기 위해 취한 법적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밤샘 조사의 활용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고문 또는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고소 접수, 조사 시행, 기소, 유죄 판결 선고를 비롯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상 재활, 보상 등의 구제 관련 통계 자료도 제공하길 바란다.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보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

고문 및 가혹행위의 처벌

96. 현행 「형법」 제125조는 특별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처벌하고,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제12조제2항)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규정으로 모든 고문행위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로 의율하여 처벌 가능하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가혹행위’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모든 형태의 고문을 포함한다. 따라서 현재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형법」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등에 의하여 모든 형태의 고문은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정의 규정 신설 필요성은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97.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문 또는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고소 등 접수되어 수사, 기소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고문 또는 가혹행위와 관련한 고소 등 접수 및 기소 현황〉

(2014~2018)

연도	구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 식	불기 소	기타
				구 속	불구 속			
2014	직권남용, 체포감금	403	399	0	3	0	392	4
	독직폭행, 가혹행위	970	955	0	1	0	885	69
	특가법(체포·감금)	0	0	0	0	0	0	0
	특가법(독직폭행, 가혹행위)	171	190	0	0	0	178	12
2015	직권남용, 체포감금	402	450	0	0	0	443	7
	독직폭행, 가혹행위	853	877	0	1	0	798	78
	특가법 (체포·감금)	0	0	0	0	0	0	0
	특가법(독직폭행, 가혹행위)	123	153	0	0	0	153	0
2016	직권남용, 체포감금	463	451	0	0	0	442	9
	독직폭행, 가혹행위	885	881	0	2	0	811	68
	특가법(체포·감금)	3	3	0	0	0	3	0
	특가법(독직폭행, 가혹행위)	165	157	0	2	0	144	11
2017	직권남용, 체포감금	564	595	0	0	0	572	23
	독직폭행, 가혹행위	1,017	1,043	0	1	0	923	119
	특가법(체포·감금)	0	0	0	0	0	0	0
	특가법(독직폭행, 가혹행위)	103	124	0	1	0	112	11
2018	직권남용, 체포감금	703	721	0	0	0	650	71
	독직폭행, 가혹행위	1,021	1,051	0	2	0	911	138
	특가법(체포·감금)	5	5	0	0	0	5	0
	특가법(독직폭행, 가혹행위)	119	122	0	1	0	117	4

밤샘 조사의 활용 제한

98. 경찰청은 수사절차 상 조사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조사(자정~06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검찰 역시 수사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9. 10. 7.부터 ‘오후 9시 이후 조사(조서 열람 제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가 ‘서면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심야조사 개선방안」을 시행하였고, 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019. 10. 31.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였고, 2019. 12.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문범죄 피해자의 재활, 보상 등 구제와 지원

99. 대한민국 「헌법」과 개별 법률에서는 고문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 및 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고문 및 부당한 대우 피해자는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형사보상청구, 범죄피해 구조금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거나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고문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100. 그 밖에도 고문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절차에 따라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구조, 전국에 배치된 법률홈닥터를 통한 1차적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범죄피해자 지원 통계 외에 고문피해자 지원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101. 또한 고문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정에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02. 이에 더하여, 2017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고문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

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7년 고문방지협약 등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주요 해외 국가 법률, 국내법 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2016년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의원발의되었던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새로 구성된 국회와 협의하여 고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문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103. 나아가 정부는 2020년 국가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을 위한 전문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2019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현재 고령자 등 치유가 시급한 피해자를 위하여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을 우선 시작하였으며, 추후 국립센터를 건립하여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메커니즘

104.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군 교도소, 외국인 보호소를 포함한 구금시설을 방문조사하고, 입회인 없이 수용자를 면담할 수 있으며, 진정을 접수하고 정책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실은 지난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4, para.123)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통계는 **부록<표17, 18>**와 같다.
105. 법무부 인권국이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사실은 지난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4, para.124) 법무부 소속 각종 구금·보호 시설(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방문 실태조사, 첩보 수집 등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사건을 인지하는 등 독립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인권침해 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 또는 징계 의뢰, 개선조치 요구, 국가배상 또는 법률 구조 안내, 제도개선 권고 등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106.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도 대검찰청에 감찰부, 고등검찰청에 감찰부 또는 감찰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감찰담당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두어 고문 등 가혹행위 발생 시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은 가해 혐의자들과 조직상 또는 위계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독립적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107. 고문 등 가혹행위(정신적 괴롭힘 포함)가 발생하거나 가혹행위 관련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위와 같은 독립적인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 등을 실시한 후 가혹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문 등 가혹행위는 현행 「형법」 제125조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보고에 대한 의견

108. 과거 일부 언론·시민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사과정에서 폭행을 동반한 강압수사, 독방 구금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이러한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14년 수사부서와 조직을 분리하고, 조사관의 범죄수사 자격·권한을 회수하였으며, 개방형 조사실을 설치하고, 조사기간 중 1인실 생활 관행을 폐지하는 등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109. 특히, 2014년 10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한 외부 변호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인권보호관이 독립적 지위에서 보호신청한 북한이탈주

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서 언제든지 조사실 및 생활실을 점검함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이 제기하는 인권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권보호관만 개봉 가능한 숙소별 건의함을 확인하여 상담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과 직권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수시로 면담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물론 인권보호관 면담을 신청한 북한이탈주민과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와 자격·업무내용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됨으로써 인권보호관 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이 제고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질의 13

지난 최종견해(31번 문단)와 관련해,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 및 방지를 위한 조치와, 군대 내 인권침해 가해자 대상 진정 접수 및 조사 시행 건수와 처벌 관련 최신 통계를 제공하길 바란다. 또한 제기된 진정의 기밀성 유지와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영창’에 수감된 병사 통계와 영창 수감 방식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 및 방지를 위한 조치

110. 정부는 군대 내에서 폭력·성희롱·성폭력·가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 군형법을 개정하여 병영내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시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 폭행 및 가혹행위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2016.3.29.)하여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6034호, 2018.12.24.)에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시 신고의무와 신고자 보호 조치토록 명시하는 등 군대 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111.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성인지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여 이를 진급심사 시에 반영토록 하였다. 나아가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및 성인지 원격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여(2018.9.3.) 군내 성인지적 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장병을 대상으로 성(性)관련 고충상담 및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처리지원을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폭력에 관한 장병들의 인식, 피해실태 등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수요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성폭력 근절 전담인력을 증원하였다.

112. 나아가 정부는 현재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대 내 인권침해 진정 처리 및 영창 관련 통계

113. 정부는 영창 집행에 대한 인권침해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집행 비율을 줄여왔다. 또한 2020. 2. 4.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법률 제16928, 2020. 8. 5. 시행)이 개정·공포되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8월부터 영창제도를 운영하지 않게 되므로 인권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14. 군대 내 인권침해 조사, 처벌 등의 통계, 최근 영창 집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 군대 내 인권침해 조사 및 처벌 통계〉

기간'16. 1. 1.~19. 10. 31./ 단위: 건수)

구분	연도	진정	진정 처리내역
		처리/접수	인용 전체 수(수사/징계의외 수)
국방부	2016	23/23	10(0/1)
	2017	24/24	15(0/2)
	2018	32/32	5(0/2)
	2019	12/12	1(0/0)

구분	연도	진정	진정 처리내역
		처리/접수	인용 전체 수(수사/징계의외 수)
육군	2016	18/18	2(0/0)
	2017	25/25	5(0/0)
	2018	29/29	8(0/0)
	2019	30/31 (1 건 : 진행 중)	6(0/1)
해군 (해병대 포함)	2016	3/3	3(0/0)
	2017	4/4	2(0/0)
	2018	7/7	3(0/2)
	2019	9/10 (1건 진행 중)	4(0/3)
공군	2016	11/11	1(0/0)
	2017	1/1	0
	2018	5/5	1(0/0)
	2019	6/5 (1건 진행 중)	2(0/0)

〈표 : 최근 5년간 영창 집행 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육군	13,696	11,910	10,185	8,468	6,666	3,765
공군	1,389	1,144	1,096	1,003	1,071	608
해군	259	358	369	478	571	335
합 계	15,344	13,412	11,650	9,949	8,308	4,708

진정의 기밀성 유지

115.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및 제52조에 따

라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을 한 사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또는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된다. 또한 동법 제45조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아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는 징계권자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신고자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14

지난 최종견해(41번 문단)와 관련해, 특히 인신매매에 대한 수요를 근절하는 등 인신매매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택한 조치와, 인신매매와 관련된 모든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가해자들은 적절하게 기소 및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취한 절차와,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길 바란다.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메커니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또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은폐하는 용도로 E-6 (예술행행) 비자가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조치와,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 근거해 자유롭게 작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취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인신매매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116. 대한민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취업과정 전반을 공공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향유할 수 있도록 입국 전·후 「노동관계법」 등을 포함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력상담센터(1개소)·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전국 44개소)를 통한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하여,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1,178명(근로감독관 911명, 산업안전감독관 267명)을 증원하였다. (부록 <표-19> 근로감독관 증원 현황) 또한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잠재적 노동착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정하여 장시간 근로 및 폭행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범위반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근로감독을 통해 21,525개소를 점검하여 총 57,447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였고, 2018년에는 26,082개소를 점검하여 70,009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였다.

117. 특히 인신매매 발생 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온 예술·홍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단속반 등을 통해 외국인 연예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E-6 비자 이외에도 사증면제협정으로 입국하여 인신매매 피해를 입는 사건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불법 유흥·마사지 업소 및 불법취업알선자 단속기간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년 5월에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알선자 집중단속, 19년 6월 유흥업소·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등 집중단속, 2019년 9월·11월·12월 불법유흥 마사지업소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였다. 나아가 2019. 11. 25.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하여 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과 MOU 체결을 통해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간(intergovernmental)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홍행(E-6) 비자 신청 시 영사인터뷰 의무화 등 비자심사 강화로 연예활동의 진정성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최초 입국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사전실시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18. 나아가, 법무부는 2020년부터 종전에 체류허가 업무 시 공연기획사 등을 통한 대리 허용으로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상황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외국인의 체류허가 심사 과정에서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예술홍행 비자 불법체류율이 40% 이상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 사증발급을 제한하며,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해당 외국인이 체류연장 등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자신청,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인권침해 권리구제 방법 및 관련 기관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지원을 위한 조치

119. 대한민국에서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의 성매매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형법 제12조에 따라 강요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120. 또한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및 여성가족부가 후원하여 펴낸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성매매범죄의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엄정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여성·아동 전담 검사를 대상으로 성매매사건의 형사절차 개관, 성폭력 피해자 식별 및 지원 등에 대한 집합교육인 여성·아동 전담검사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121. 또한 정부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법률지원, 숙식 제공과 조속한 귀국 지원을 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면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위치확인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가 수사단계나 출입국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누리콜센터와 연계하여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조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다.
122.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체류자격 없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역시 통보의무면제 제도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2018년 9월 통보의무면제 공무원의 범위를 전

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였다.

인신매매의 국내법상 정의 및 인신매매 가해자의 적절한 처벌을 위한 조치

123. 대한민국은 2013년 4월 5일 국가 형벌권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형법」에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개정·시행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개념을 법제화하였다. 기존에도 다양한 형벌 규정으로 인신매매 범행을 처벌하여 왔으나,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팔레르모 의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인신매매죄’를 신설(제289조)하였으며,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제296조의2)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형법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방조 행위도 독자적인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을 마련(「형법」 제292조)하였다.
124.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 목적 인신매매의 처벌 등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6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도 강제 매춘과 성적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25. 인신매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처하였다. 인신매매사범의 기소 통계는 **다음<표>**와 같다.

〈표: 인신매매사범 접수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5년	468	487	81	76	0	150	180
2016년	566	572	108	91	0	190	183
2017년	452	416	78	65	3	121	149
2018년	383	386	57	83	1	110	135
2019년	395	406	50	72	0	116	168

126. 나아가 정부는 「형법」상 인신매매의 정의가 협소하고, 인신매매 사범의 처벌이 미흡하다는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여성가족부의 주도 아래 관련 부처 T/F를 구성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정의 규정,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외국인 피해자 보호 제도, 인신매매 총괄·조정 기구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뒤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작업장 변경

127.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비자가 발급되는 제도의 성격상, 사업장 변경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128. 그간 우리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사업장 변경 제도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변경 외국인노동자수는 제도 시행 초기 대비 3배 이상 증가(2006년 18,867건→2019년 51,913건)하였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3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시를 개정하여, 성희롱, 성폭력, 폭행 등의 가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변경 사유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자세한 제도개선 경과에 대해서는 **부록 <표-20> 참조**) 다만, 사업장 변경을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고자 마련된 고용허가제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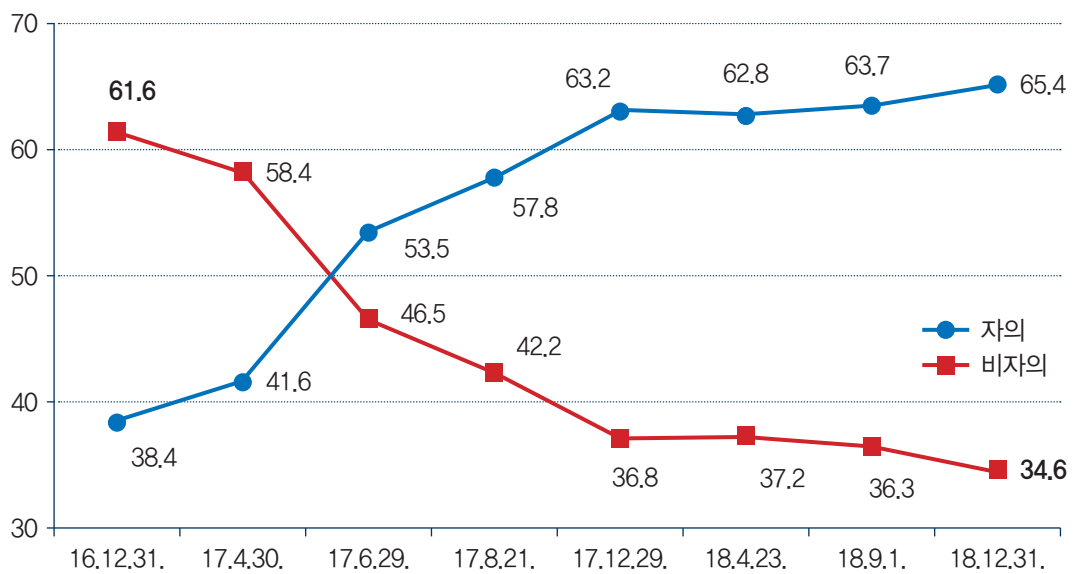
질의 15

지난 최종견해(29번 문단)와 관련해,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 절차가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대리인이 입원대상자의 바람과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정신병원 입원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적, 실질적 보호장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성과 비례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개인을 심각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써 가장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정신과적 구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
129. 정부는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절차를 개선하였다.
130. 우선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치료입원 전 2주간의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진단입원 기간 동안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①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②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일치된 소견을 제시한 경우에만 계속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31. 또한 법조인, 정신과 전문의, 정신질환자 가족, 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 결정 후 3일 이내에 입원 사실을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나아가, 개정 법률은 당사자의 의사가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입원적합성심사 시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위

원장 직권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대면조사 절차도 도입하였다.

132. 아울러, 비자의입원의 경우 최초 3개월까지만 입원이 가능하며, 입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법조인, 정신과 전문의, 정신질환자의 가족, 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2017.5.30.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비자의 입원 비율의 추이는 아래와 같다. 자세한 수치는 **부록<표-21>** 참조.



* 자의입원 유형은 자의입원·동의입원을, 비자의입원 유형은 보호입원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을 뜻함.

질의 16

지난 최종견해(35번 문단)와 관련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서의 유치장 등 구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예방적 구금을 포함해 피구금자, 구금 시설에서 사망한 자, 사망 원인, 사망 관련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길 바란다. 수감자를 징계하기 위한 독방구금 및 독방구금 최대 일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제 2항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란다.

과밀수용 해결 및 경찰서 유치장 개선을 위한 조치

133.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이전, 유희공간 리모델링·수용동 증축 등 수용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의 수용구분 조정 및 지방 분산 이송을 통해 수용 밀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및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는 등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은 2018년 114.5%에서 2019년 113.8%로 점진적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소년원에 대해서는 소년원생의 처우를 향상하고자 2013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시행해, 전국 11개 기관 중 5개 소년원의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개선하였다.
134. 경찰청은 2013년부터 매년 유치장의 수용 환경 개선을 실시하여, 2019년 기준 총 3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모든 유치장 화장

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였고, 2019년에는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하였다. 그 밖에도 유치인의 접견교통권 보장을 강화하고, 유치인보호관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유치인의 외부 병원진료를 보장하는 등 유치인의 수용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135. 또한 정부는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경찰서 대용감방을 모두 폐지하고, 2020년 내에 미결수용자 전원을 교정시설로 인수할 예정이다. 대용감방은 경찰서 관내 지역에 교정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 내에 미결수를 수용하는 단기 구금시설로, 대용감방에서 장기간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경우 교정시설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폐지 권고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하여 왔으며, 2020년 내에 현재 대용감방이 남아 있는 4개 경찰서의 수용자들까지 모두 인수할 예정이다.

수용자 사망 통계

136. 교정시설 사망자 및 사망원인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 부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수용자 사망사고에 교도관의 직무위반이 있는 경우 상급 감독기관인 지방교정청에서 사망경위, 근무자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 98건 중 유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가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외에는 전부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였다. 그 결과 자살 등 18건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되었고, 부적정한 근무가 드러난 3건에 대하여 관련 직원 징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 교정시설 내 사망자(사망원인 포함) 및 조사 결과 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합계	사망 원인							
		질 병							자살
		소계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간 질환	암	기 타 (감염성 질환 등)	
2017년	22	20	14		1	2	2	1	2
2018년	40	33	22	1	2	1	1	6	7
2019년	36	28	11		4	2	4	7	8

독방구금 및 보호장비 사용

137. 독방구금(금치)은 규율 위반의 경중에 따라 징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징별 중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138.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제99조까지 사용 요건, 남용 금지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캠코더, 바디캠 등 영상장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는 90일 이상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제183조는 매일 3회 보호장비 계속 사용 여부를 심사 및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매 시간 동정을 관찰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139. 수용자는 자신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또는 독방구금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장관 청원, 행정심판, 국가배상, 형사상 고소·고발 등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질의 17

지난 최종견해(33번 및 37번 문단)와 관련해, 구금된 자가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구금된 기간 동안 구금된 자의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길 바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구금기간 제한,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권, 송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가족과의 연락 등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구금 기간, 이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기 전 추방을 임시중지시키는 효력을 가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접견권

140. 대한민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의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경찰·검찰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변호인이 위법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되며, 이러한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는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한 변호인 참여 배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141.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대검찰청은 2017년 12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대검 지침)을 개정하여 변호인이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9년 5월에는 변호인의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하였다. 나아가 2019년 10월에는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

데, 주요 내용으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 확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 최소화,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직접적 구두변론 기회 전면 부여,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위 내용을 명문화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대검 예규)을 시행하였다. 2020년 1월에는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 규칙」(법무부령)을 개정 시행하여, 피의자 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 참고인 위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42. 특히 구금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변호인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추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보장하고 있다.

143. 나아가, 정부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11월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자와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중죄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국선변호인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보호

144.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보호·지원여부(정착금, 임대주택 등)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조사일 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도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 자유의사에 따라 개시되

고 종료될 수 있어 강제성 있는 구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145.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및 임시보호가 강제성 있는 구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임시보호 및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외부 변호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임시보호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여부 등을 감시하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과 1: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그간 국가정보원 내부지침으로 정해온 인권보호관의 업무, 자격, 임기, 독립적 지위 등을 2019.7.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146. 또한 정부는 2018년 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국내 입국 후 180일 이내였던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국내입국 후 9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2019년 6월 UN 자유권위원회에 제출된 NGO보고서는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기간 상한이 3개월로 축소되었으나 보호에 관한 결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여전히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 및 조사가 끝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보호센터를 퇴소하여 통일부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 입소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은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장관의 권한으로, 정착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임시보호 및 조사가 끝나면 보호 결정 전이라도 즉시 통일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생활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임시보호·조사를 종료하였음에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을 무기한 임시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47.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정원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임시보호기간 동안 외부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 또는 면회를 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임시보호기간은 국내 입국 후 60일 정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추방 전 추방을 임시중지시키는 효력을 가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

148.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한 사례는 없다.

질의 18

지난 최종견해(39번 문단)와 관련해, 출입국항을 포함하여 이민구금시설 내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해당 시설이 독립적인 정기적 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이민구금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아동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지,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길 바란다. 공항 및 다른 출입국항에서 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자가 구금되었다는 보고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

외국인보호시설 거주환경 개선 및 정기적 감독

149.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또한 보호외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보호소 내 담당 의사가 수시로 내부진료를 실시하며,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도 보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에는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3개 보호시설에 배치하였다. (진료실적 통계 **부록 <표-22> 참조**) 또한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주 5회 야외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한국어교육, 건강관리, 종교·오락 등을 포함한 「동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감프로그램 운영 내용 **부록 <표-23> 참조**) 더불어 위생사 자격을 소지한 위생원이 보호소 내 위생을 담당하도록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150.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또는 보호외국인의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보호시설을 방문조사와, 시설수용자를 면담할 수 있다. 법무부 인권국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호시설의 실태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보

호소 등 보호시설은 보호실 안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대사관 연락처 및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여 외부와 자유롭게 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고충처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불임금 해결 등 입소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특히 화성보호소의 경우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또는 노무사를 통해 진정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소송 제기 등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호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외국인 보호 기간의 단축

151. 정부는 출국준비를 마친 외국인은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하여 보호기간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단축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평균 보호기간은 9.6일로 10.1일에서 단축되었다. 나아가,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해,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를 단계별로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보호기간 연장 처분권자는 보호외국인과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호소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보호된 외국인의 계속 보호 여부는 2017년 4월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가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국명령을 활성화하여 외국인의 보호기간을 최소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52. 보호외국인에 대해 질병치료, 개인채권 회수, 국내 가족거주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금의 대안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절차적 통제 및 보호기간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호일시해제 심사 시 보호외국인이 노약자, 미성년자 등 「출입국관리법」상 특별보호대상자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무부 훈령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난민신청자, 소송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구금의 대안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동의 구금

153. 정부는「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14세 미만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는 최대한 자제하고, 형사범 등의 이유로불가피하게 보호되더라도 지명하여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장기보호를 방지하며,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특별보호방을 배정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의 보호 금지 원칙을 법률로써 명문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 또는 부모를 보호일시해제하여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보호 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 표 : 외국인 보호 기간별 미성년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54	70	55	78	69
1일 이하	9	13	4	7	6
10일 이하	33	47	35	54	46
11일 이상 20일 이하	7	6	12	16	9
21일 이상 30일 이하	2	4	4	1	4
31일 이상	3	—	—	—	4

- ※ 1일 이하는 보호되었으나, 인도적 사유 등으로 바로 보호해제한 경우임
 ※ 형사범을 위반하여 관련 재판을 받는 경우 부득이 31일 이상 보호되는 경우가 있음

공항 및 출입국항에서의 대기시설 운영

154. 대한민국은 공항 및 출입국항에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외국인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입국심사 결과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해야 하거나, 난민 신청 후 그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외국인을 위한 대기시설은 운영하고 있으

며, 동 시설들은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난민신청 결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장기간 공항에 머무른 가족의 사례가 있었으나, 동 사례는 입국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본인 의사에 따라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으나 출국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항에 구금된 것은 아니었다.

질의 19

사법부의 부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고,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민관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그 효과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사법부의 부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A. 법관의 책임성 강화

155. 대한민국 법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두고 있다. 윤리감사관은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정기감사, 수시감사, 윤리교육 등을 통한 부패 예방 등 법원 전체적인 감사업무를 주관한다. 2020년 3월에는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B. 감사기능의 객관성 및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한 제도

156. 법원 감사업무의 객관성·투명성·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이 포함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원감사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윤리 관련 사항, 법관의 비위 등 사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 등의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 사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징계청구권자 등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C.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노력

157.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퇴직자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직업윤리 및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침과 해설을 제공하는 등 사법부 구성원의 윤리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D.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조치

158. 대한민국 검찰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등이 재판을 청와대·국회·정부와의 협상 수단 등으로 활용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침에 반대하는 법관을 탄압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 및 신분보장을 침해한 사건 (이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판사 14명을 기소하였고,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59.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은 2018. 5. 31.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2018. 12. 27.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명의 법관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2019. 5. 9. 3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하여 추가 징계 청구를 하였다.

E.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발방지대책

160.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법원장이 아무런 견제 없이 독단적으로 하였다는 점과 그와 같이 정해진 결정사항을 판사들이 관료적 집행기관 내에서 무비판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이라고 진단하였다. 그 결과, 의사결정은 다수의 법관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에서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하고, 관료적 집행기관에서 법관들이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161. 구체적으로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의 폐지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

청하였다. 2019년 9월에는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로 수평적 회의체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였다. 또한 각급 법원에서 추천된 법관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공식기구화 하여 민주적·참여형 사법행정을 공식화 하였고다.

162. 또한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는 “비법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2월부터는 실질적 ‘승진’역할을 하여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중단하고, 해당 직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163. 그 외에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였고, 법관인사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사법작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통한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 및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164. 대한민국이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관임명제도를 규정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CPR/C/KOR/2005/3, para. 43)
16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국선변호인, 재정신청, 재심 등의 제도는 최초, 제2차, 제3차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CCPR/C/68/Add.1 ,paras. 198-214; CCPR/C/114/Add.1, paras. 43, 153; CCPR/C/KOR/2005/3, paras. 231~239)
166.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2015년 이후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5년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범죄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구술·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진술 보조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민관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및 그 효과

167.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
168.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9.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업무처리의 공정성이 향상되고,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패경험률이 하락(2016년 1.8% → 2019년 0.5%)하는 등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를 하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170. 201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 79.5%는 법 시행 이후 관

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대다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응답했다.

171. 「청탁금지법」 시행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민관의 부정한 유착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부패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민간에 의한 공직자등의 업무수행공정성 저해를 방지한다면, 2018년 4월 개정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요청하는 부정청탁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해충돌 상황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8가지 행위기준을 담은 일반법으로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72. 한편, 2015년 3월부터 개정·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민관유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를테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고위공직자(판·검사 포함)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과거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에서 기관 전체 업무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취업제한기간 이후 취업 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이력을 퇴직 후 10년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였다.
173. 나아가 2019년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2020년 6월 시행 예정)은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의 20

지난 최종견해(43번 문단)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모든 국익 목적의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이용자의 정보는 영장에 의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통신수사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확대하기 위해 택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
174. 현재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독립적 사법부의 사전 허가·승인절차 및 국회를 통한 감독체계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신수사를 집행하고 있다. 정보수사기관은 감청실시 이전에 범죄수사목적의 경우 지방법원 허가, 국가안보목적의 경우 내국인은 고등법원 허가, 외국인은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보수사기관은 국회 요청시 감청 허가건수, 집행건수, 당사자 통지건수 등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시설 및 통신업체의 감청 협조설비에 대해 현장 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불법감청을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175. 이용자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수사 초기 단서 확보 및 피의자 특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사항으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정보 제공 현황을 매년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등, 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한 통

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176.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인터넷 회선감청(패킷감청) 등 일부 통신수사의 경우 정보주체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에 비해 현행법상 신청요건 및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19년 3월 ①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간을 제한하고(기한 없음 → 원칙적 1년), 기지국 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 등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실시하며(보충성 요건 없음 → 신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범위를 확대하고(기소중지·수사 중 미통지 → 통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유에 대한 통지 신청권을 정보주체에게 부여하는(사유 미통지 → 통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법안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통신수사 투명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인터넷 회선감청(패킷감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사기관이 감청 후 법원의 승인을 받아 취득자료를 보관·사용하는 내용)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달 24일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회선감청(패킷감청) 집행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하였다.

질의 21

지난 최종견해(45번 문단) 및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CCPR/C/124/2, 12-13쪽), 당사국의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의 첫 번째 부칙에서 당사국이 제시한 정보 관련 주의사항(CCPR/C/KOR/CO/4/Add.1, 10-12 번문항)과 관련해, 다음을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길 바란다.

- (a) 병역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모두의 석방을 위한 조치. 이와 관련해 여전히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에 대한 최신 정보
- (b) 양심적 병역거부자 범죄 기록의 삭제, 보상 제공 및 개인정보의 비공개
- (c)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인정 및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대체복무 도입과 관련해 계류 중인 헌법소원 진행상황 또는 결과 및 대체복무 기간 및 선발 절차 등과 같은 헌법소원 내용에 대해 알려주길 바람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

17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8. 11. 1.)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19. 2. 28.까지 전원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2019년 11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수감 중인 수용자는 없다.

범죄 기록의 삭제 및 보상

178. 대한민국 정부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범죄기록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사건이 무죄 판결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 판결의 취지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79. 대한민국 정부는 2019. 12. 31.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하여, 가석방 중인 1명 남은 형 집행 면제, 형기 종료 출소자 1,878명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다.

대체복무제 도입 경과 및 헌법재판소 결정

180. 2018. 6. 2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정부에 2019. 12. 31.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였다. 또한 2018. 11. 1. 대한민국 대법원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처분이라고 보았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81.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민간분야 중 군복무 환경과 유사하나 집총의무가 없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복무기간 36개월은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 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182. 국방부는 2019년 4월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2019년 9월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12월에 의결하였다.
183.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도입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심사위원회 구성, 합숙시설 마련 등의 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 대체복무요원의 교정시설 대체복무가 실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비공개

184. 병무청은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질의 22

지난 최종견해(47번 및 49번 문단)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한 절차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개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법에 의거한 자의적 체포 및 구속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길 바란다.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185.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폐지할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전과, 성적지향 등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 내지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게 피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점, 한국 「형법」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할 수 있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보완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던 바 있으므로, 정부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 외국의 입법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186. 또한 대한민국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내용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수사 시, 이러한 고소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어 피해 진술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고려해서, 대검찰청은 각 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되,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

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토록 지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및 동법에 의거한 자의적 체포, 구속 보고에 대한 입장

187.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고,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188. 또한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확대해석 금지 등 엄격한 해석, 적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법률 및 판례(CCPR/C/KOR/4, para. 286–287)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속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 수는 2015년 40건, 2016년 17건, 2017년 14건, 2018년 3건, 2019년 3건으로, 최근 5년 동안 92.5% 감소하였다.

질의 23

지난 최종견해(55번 문단)와 관련해, 자유권 규약 제22조의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 교사, 해고된 직원 등 모든 부문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한 절차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 철회 및 공무원 등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보장

189.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 철회의 장애 사유가 되었던 국내법상 공무원, 교원 등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제한을 개선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0. 그간 정부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운영 근간을 이루고 있고 국민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점, 특수한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속에서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법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을 제정·운영해 왔다. 5급 이상 공무원은 대부분 사용자 범주에 포함되는 특성이 있고,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일사불란한 조직의 지휘체계 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며, 현직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해직자는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할 근무조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1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및 제98

호) 비준을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부,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고,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후 2019년 10월 「ILO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및 교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해고자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 및 퇴직 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직급 기준 공무원 노조 가입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단결권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자유권규약」, 「ILO협약」 등 국제기준에 더 부합하는 공무원, 교원, 해고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교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2013년 “노조 아님”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해직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바, 정부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직교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모든 부문에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된 모든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

192. 정부는 2019년 10월 민간기업 실업자 및 해고자의 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종전에 근로자의 법적 개념에 포섭되지 않았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표적 사례인 택배기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에 각각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으며, 2019년 4월에는 정수기 설치기사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나아가 향후 노동조합 및 정부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93.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5년에 합법적 체류자격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8월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전국외국인노동조합, 전국건설외국인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활동하고 있다.

질의 24

지난 최종견해(51번 문단)와 관련해, 정당 해산 조치를 극히 제한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택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또한 교원 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자유권 규약 제25조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하길 바란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2호와,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정지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이 자유권 규약 제25조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정당해산과 비례성의 원칙

194. 정당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선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헌법」 제8조 제4항, 「헌법」 제89조 제14호). 이러한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 해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 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 해산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3헌다1).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당해산제도는 정당해산이 극히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 금지

195. 교원은 학생을 지도하는 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자주성·중립성·공공성 등이 요구되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교육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편향성은 학생의 교육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집단적인 정치적 견해 표명은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생의 학습권 등을 감안하여 교원노조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2011헌가18, 2012헌바185 병합)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196. 「헌법」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공직선거법」§18①2).
197.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였던 (구)「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하여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5년에 현행 규정과 같이 개선된 점, 대한민국에서 법관의 선고형 결정은 법률과 양형기준에 엄격히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선거권의 일시적인 제한만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는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불합리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9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의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추이를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 제한

199. 피치료감호자는 대부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심신상실로 인해 징역형 없이 치료감호만 선고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치료감호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재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도 일부 공감하며, 「공직선거법」상 수형자 등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질의 25

지난 최종견해(53번 문단) 및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CCPR/C/124/2, 13-14쪽), 당사국의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의 첫 번째 부칙에서 당사국이 제시한 정보 관련 주의사항(CCPR/C/KOR/CO/4/Add.1, 13-18 번문항)과 관련해 (1) 집회참가자를 관리하는 경찰에 대한 훈련 (2) 자유권 규약 제21조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 이와 관련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인의 평화적 집회 권리 제한과 관련된 보고에 대한 의견 (3) 자유권 규약 준수를 위한 당사국의 강제력 사용 규제 검토 조치 (4) 69세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책임자 기소,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집회 주최측 및 참가자, 특히 언론인 및 인권옹호자가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관련 정보도 제공하길 바란다.

집회 관리 경찰에 대한 훈련

200. 모든 경찰부대에 대해 상·하반기 각 4~10주간의 ‘집중교육’ 기간을 지정하여 ①인권·안전교육 ②법과 원칙에 따른 현장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안전교육 시에는 외부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을 강사로 초청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훈련 시에는 모의 상황을 가정하여 부대원 스스로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한계 등을 도출하는 토론식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집중교육 외에도 각 부대별로 집회시위 현장의 인권 보호 방안,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적정 물리력 행사 등 인권·안전교육을 수시로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자유권규약 제21조 준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

201. 대한민국 20대 국회('16.5.30.~'20.5.29.)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이 총 22건 발의되었다. 집회 금지장소에 관한 법률안은 총 10건이었으며, 2020년 5월에는 국회·총리공관·각급 법원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기관의 헌법적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 법률 개정 이외에도, 경찰은 집회 신고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보완·제한 통고를 우선 검토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금지통고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집회 금지통고 비율은 신고 수 대비 0.01%에 불과하며, 금지통고 대상 집회 9건 중 6건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어 후순위 집회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이다. 야간집회의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야간 개최를 이유로 금지통고나 제한통고를 한 사례는 전무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법원 등 인근 집회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개정법률(2020년 5월)에 따라, 각 기관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LGBTI의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203. LGBTI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헌법과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동등하게 향유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의 행사 방해에 대해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8년 인천에서 개최된 제1회 인천퀴어축제에서 반대단체와의 충돌로 인해 혼란이 있었으나, 제2회 인천퀴어축제는 2019년 8월 인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지역인권단체의 원활한 협조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17년 이후 제주퀴어문화축제가 평화적으로 집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장소 등에 대해 관련부서가 협조하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의한 무력 사용 관련 규제 및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처리 경과

204. 경찰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소요사태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배치·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거리별 수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0년 1월 개정하였다.
205. 대한민국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 농민을 직사 살수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살수차의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2017. 10. 1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전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다. 2심 재판부는 2019. 8. 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9. 8. 13.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에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206.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2018. 1. 2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종결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액 4억 9천만원(약 41만 미국 달러)을 지급하였다.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특히 언론인 및 인권옹호자가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207. 언론인, 인권옹호자의 집회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만 원칙

에 따른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불법·폭력집회 등 집단행동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행정의 패러다임을 “집회시위의 관리”에서 “집회시위의 보장”으로 전환하고, 신고 절차나 진행과정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평화적 집회로 간주해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의 26

당사국 내 망명 신청자,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 통계를 제공하고, 이주민, 망명 신청자,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 근절과 출생등록 및 의료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관련 헌법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자유권 규약상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하길 바란다. 「난민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포함한 난민 지위 및 망명 인정 결정이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 통계

208. 2019년 12월 말 기준 난민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자 통계는 아래와 같다.

연도	신청	난민인정(보호)			불인정	철회
		소계	난민인정	인도적체류		
'94~'19	64,358	3,239	1,022	2,217	25,361	10,184

209. 2020년 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무국적자는 총 166명이며, 자세한 통계는 아래와 같다.

(단위 : 명)

구분	합계	귀화 후 원국적 미포기	입국시 무국적	국적* 취소	탈북 화교	월남 난민	기타**
장기 체류 (91일 이상 장기비자 입국자: 외국인등록)	105	19	29	29	11	10	7
단기 체류 (90일 이하 단기비자 입국자: 미등록 상태)	61	관광(B-2),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					

차별 및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210. 차별 및 혐오표현이 모욕·명예훼손 등 범죄에 이를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관련법에 불법정보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규정된 점은 질의 6.에 대한 답변과 같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차별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여 제재를 부과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리고 있는 사실은 질의 5번에 대한 답변과 같다. 한편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법안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혐오표현과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차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여는 데에 협력할 예정이다.
211. 나아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소통을 주제로 한 동영상 제작·배포하고, 상호 문화 이해에 관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외국인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이민자 미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함으로써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법정기념일로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국가기념행사 및 지역별 기념식을 시행해 오고 있다.

출생등록 및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

212. 정부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질의 27번에 대한 답변과 같다.

213.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를 거치는 동안 난민신청자로서 생계비 지원, 교육 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중 별도로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소득·자산, 주거, 자녀동반 또는 임신여부, 중대한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한다. 또한 「난민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 항목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고,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214. 난민인정자는 「난민법」 제30조 내지 37조에 따라 사회보장 혜택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다. 해외 난민캠프 등에 일시 체류하다가 국내 재정착을 희망하여 UNHCR의 추천으로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수용된 ‘재정착난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최장 6개월 동안 입소하여 한국어 및 한국사회 교육, 취업교육, 직업훈련, 건강검진 등 초기 정착지원 역시 받을 수 있다.
215. 특히 교육의 경우, 난민·무국적자 등 아동의 국적·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입학 및 편입학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해당 학생의 학교 조기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19년 326학급)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18년 4,309명)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정책학교(2019년 기준 643교)를 운영하여 다문화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원은 2018년 기준 133,794명에 달한다.
216.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인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지원 대상이다.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의 권리

217. 2018년 3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세계화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제2장의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변경하였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종차별 및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신설되는 기본권인 생명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그밖에도 현행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장애·연령·인종·지역’을 추가하여, 종전에 해석상 인정되던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18. 다만 2018년 5월 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난민법 개정안 마련 및 난민인정 절차의 개선을 위한 조치

219. 정부는 난민신청자 급증에 따라 난민심사관 확충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전국적으로 18명에 불과하였던 난민심사인력을 2019년 91명까지 증원하였다. 난민심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UNHCR 한국대표부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난민 면접과정에서 통역을 지원하기 위해 24개 언어 173명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 전에 난민인정절차, 통역이론 및 난민통역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위촉 후에는 위촉기간(3년) 중 보수교육 1회 이상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그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해외 사례 등 연구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질의 27

지난 최종견해(51번 문단)와 관련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뿐만 아니라 사망, 결혼,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220. 정부는 현재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준비 과정에 있다. 법무부는 2018년 11월 아동 관련 민간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자문단을 발족하였고,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자문단 회의를 통해 출생등록제 규율대상, 도입방식, 구비서류 및 절차, 신청방식 등의 쟁점들을 논의하였으며, 현재 법률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법안이 확정되면 법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법률안 국회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21. 또한 정부는 2019년 5월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정보를 국가기관에서 통보받음으로써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19년 4월 출범한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현재 출생통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논의를 통해 향후 도출되는 결과를 토대로 유관 부처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부 록

〈 표-1 : 연도별 한부모가족 관련 공공임대주택 지원현황〉

(단위 : 호, %)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세 임대	총 공급호수	202,489	35,509	37,848	38,573	53,126	37,433
	한부모가족	19,431	4,873	3,393	2,720	4,317	4,128
	계약률	10%	14%	9%	7%	8%	11%
매입 임대	총 공급호수	68,582	10,315	13,466	15,079	14,861	14,861
	한부모가족	5,703	1,390	1,452	1,148	1,001	712
	계약률	8.3	13.5	9.8	7.6	6.7	4.8
국민 임대	총 공급호수	81,035	25,958	26,842	7,366	9,554	11,315
	한부모가족	1,988	202	412	181	272	921
	계약률	2.5	0.8	1.5	2.5	2.8	8.1
영구 임대	총 공급호수	12,832	3,572	3,624	1,866	1,962	1,808
	한부모가족	552	139	256	98	58	1
	계약률	4.3	3.9	7.1	5.3	3.0	0.1
5년·10년 공공임대 ***	총 공급호수	70,102	19,244	22,063	14,390	13,358	1,047
	한부모가족	118	3	59	28	28	0
	계약률	0.17	0.01	0.27	0.19	0.21	—

* 공급실적은 매년 신규계약 실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15.6.8.)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말함

〈 표-2: 직장내 괴롭힘 진정 분야별 접수 현황 〉

업종별 (상위 5개 업종)			사업장 규모별			유형별 (상위 5개 유형)		
업종	건수	비율(%)	근로자 수	건수	비율(%)	전체	건수	비율(%)
제조업	607	18.1	50인 미만	1,923	57.5	폭언	1,638	48.9
사업시설 관리	492	14.7	50 ~ 99인	398	11.9	부당인사	912	27.2
보건사회 복지서비스	472	14.1	100 ~ 299인	424	12.7	따돌림 협담	456	13.7
도소매업	353	10.5	300인 이상	602	18.0	업무 미부여	115	3.4
숙박 및 음식점업	265	7.9	—	—	—	강요	113	3.4

〈 표-3: 직장내 괴롭힘 진정 처리 현황 〉

접수	처리 중	행정 종결				
		소계	취하	개선지도1)	검찰 송치2)	기타3)
3,347	608	2,739	495	22	1,312	910

- 1)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지도
- 2) 고소·고발 사건 및 신고·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신고된 건
- 3) 법률 시행일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정,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단순 행정 종결

〈 표-4: 차별·비하, 잔혹·혐오, 욕설 등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통계〉

위반내용	2016		2017		2018		2019		2020.3.		합계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차별·비하	3,022	2,455	1,356	1,166	2,638	2,352	1,886	1,406	273	201	9,175	7,580
잔혹·혐오	683	314	301	109	383	159	577	40	144	17	2,088	639
욕설	923	734	835	774	1,583	1,389	842	761	194	192	4,377	3,850
합계	4,628	3,503	2,492	2,049	4,604	3,900	3,305	2,207	611	410	15,640	12,069

※ 특정 인종·민족, 차별·혐오표현 등에 한정된 심의·시정요구 통계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

〈 표-5: 역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현황 〉

구분	총의원수(a+b)			지역구(a)			비례대표(b)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제16대(2000)	273	16	5.9	227	5	2.2	46	11	23.9
제17대(2004)	299	39	13.0	243	10	4.1	56	29	51.8
제18대(2008)	299	41	13.7	245	14	5.7	54	27	50.0
제19대(2012)	300	47	15.7	246	19	7.7	54	28	51.9
제20대(2016)	300	51	17.0	253	26	10.2	47	25	53.1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

〈 표-6: 여성대상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검찰의 대응 (2016 ~ 2019) 〉

연도	내용
2016	여성·아동범죄 대책 T/F 구성 및 운영('16. 2. ~ 7.)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개최('16. 3.)
2017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개최('17. 4.)
	성폭력 수사매뉴얼 등 개편 TF팀 구성·운영('17. 5.)
	아동·장애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준수 지시('17. 8.)
	몰래카메라 촬영·유포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준수 지시('17. 8.)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 및 수사매뉴얼 재정비('17. 12.)

연도	내용
2018	「성폭력 수사매뉴얼」 일선 청 배포 및 상향된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등 지시('18. 2.)
	여성·아동대상 범죄 등 전담검사 지정 현황 파악 및 주요 지침 송부,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지시('18. 2.)
	전국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세미나 개최('18. 3.)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시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면밀검토 지시('18. 5.)
	성폭력 등 무죄사례 연구 TF팀 구성·운영('18. 5.)
	대검 형사부장, 여성·아동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문 간담회 실시('18. 9. ~ 11.)
	전국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검사 및 수사관 합동워크숍('18.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 간 MOU 체결 및 포럼 개최('18. 12.)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 및 카메라등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 개정 시행 '18. 12.)
2019	전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19. 2.)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매뉴얼 송부 등 수사체계 점검('19. 3., '19. 8.)
	여성아동 전담검사 타겟형 교육 실시('19. 3.)
	절대적 복종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지시('19. 6.)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19. 7.)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개최('19. 7.)
	성폭력·아동학대 무죄사례 분석집 발간, 배포('19. 8.)
	'19년도 여성·아동 대상 범죄 타겟형 교육 실시('19. 10.)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19. 10.)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아동 공동연구 결과 발표('19. 11.)
	불법 촬영·유포사건 엄정대응 지시('19. 11.)
	성폭력 수사 매뉴얼, 성범죄 판결분석과 수사시 유의사항 및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책자 배포('19. 12.)
2020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범죄 전담검사 지정에 따른 매뉴얼(업무지침 등) 송부('20. 3.)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지시('20. 3.)
	전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20. 3.)
	전국18개 지검 및 6개 대규모 지청에 성착취 영상물 사범 전담수사팀 설치('20. 3.)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개정·시행('20. 4.)

〈표-7: 「가정폭력 방지 대책」 주요내용 및 개선사항〉

	기 존	개 선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 응급조치로 가·피해자의 '분리'만 가능하여 격리가 어려움	• 유형에 '현행법 체포'를 추가하여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 격리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조치의 실효성 낮음	•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제고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 유치'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추진
	• 응급조치 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응급조치 시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요청할 수도 있음을 통보
	• (긴급)임시조치 청구권자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	• 가정구성원도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징역 또는 벌금 부과로 제재 강화
	• (긴급)임시조치 중 접근금지는 장소 기준	• 사람 기준으로 변경
	• 피해자보호명령은 퇴거 등 격리,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변경 시 합산 최대 2년	• 최대 1년, 연장·변경 시 합산 최대 3년으로 변경
	• 내부 지침이 있으나, 보다 구체화 필요	• 범죄유형별·단계별 처리 지침 마련
	• 재범위험성조사표 활용도 저조	•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체 개선안 마련, 조사항목, 후속조치 등 개선
	• 112 시스템 신고이력 보관기간 1년	• APO시스템과 연계하고, 신고이력 보관기간 확대(1년→3년)

	기 준	개 선
가해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 관련 규정 없음	• 유죄판결 선고 시 수감·이수명령 병과 규정 신설
	• 관련 규정 없음	• 수감명령 불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이수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성행교정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지침 상, 중하지 않은 사안 시 가능	• (실태 분석 후)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은 배제하는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가정폭력범죄 유형) 주거침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추가
	• 관련 규정 없음	•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 신설
피해자 지원	• 1366, 가정폭력상담소 인력부족 등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 미흡	• 인력 확충을 통해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 내실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모두 비공개로 운영	• 운영 모형 다양화
	• 관련 사업 없음	• 새일센터 등과 연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사업 없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 주민등록 열람제한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시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이용 서류는 증빙으로 인정되고 1366센터는 인정 안 됨	• 1366 센터 이용 서류도 인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 관련 사업 없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배포,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 시 * 개인정보 노출 관련 2차 피해 사례 등 포함
	• 관련 사업 없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신설

〈표-8: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내용별 실적〉

(단위 : 건, %)

연도	계	가정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이혼	부부 갈등	가족 문제	성폭력	성매매	성상담	중독	기타*
2017	317,936	171,975	145,961	21,005	24,865	24,636	26,112	339	3,428	2,831	42,745
	100%	54%	46%	7%	8%	8%	8%	0.1%	1%	1%	13%
2018	394,192	219,459	174,733	21,299	28,968	27,735	41,885	739	3,829	3,241	47,037
	100%	55.7%	44.3%	5.4%	7.3%	7%	10.6%	0.2%	1%	0.8%	11.9%

* '18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상담 포함

〈표-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개소수	입소정원(명)	상근종사자수(명)		
			계	상담원	비상근 자원봉사자
2017	66	1,108	308	272	36
2018	66	1,078	332	292	40

〈표-1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실적〉

(단위 : 건, %)

연도	계	지 원 내 용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적지원	자립지원	동반아동 지원	기타 (가해자지원 등)
2017	123,223	55,739	3,530	19,162	7,629	25,022	12,141
	100	45.2	2.9	15.6	6.2	20.3	9.9
2018	169,682	89,796	5,151	21,188	9,564	31,328	12,655
	100	52.9	3.0	12.5	5.6	18.5	7.5

〈표-11: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

구분 연도	피해 유형(명)					지원 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 치료	동행 서비스	사회적 지원 등
2014년	28,487	20,693	5,517	239	2,038	260,005	92,610	62,584	47,488	31,577	3,493	22,253
2015년	28,253	20,218	5,584	188	2,263	277,200	98,986	64,958	52,989	33,948	4,118	22,201
2016년	26,878	19,134	5,135	151	2,458	313,523	102,880	73,051	57,441	30,858	4,722	44,571
2017년	27,225	19,423	4,817	171	2,814	361,457	114,927	87,213	56,380	34,619	5,119	63,199
2018년	27,450	20,449	4,147	182	2,672	398,690	125,347	100,929	58,227	35,866	5,902	72,419

〈표-12: 성폭력피해 상담소 현황〉

연도별	개소수	종사자수			상담실적			개소당 평균상담 실적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자	계	성폭상담	기타상담	
2014	154	1,001	417	584	146,750	89,975	56,775	953
2015	159	1,169	530	639	158,188	98,729	59,459	995
2016	167	1,379	549	830	158,029	101,028	57,001	946
2017	167	1,465	577	888	180,572	111,123	69,449	1,081
2018	170	1,451	622	829	241,343	154,378	86,965	1,420

〈표-1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연 도	개소수	입소정원	종사자수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
2014	29	310	153	139	14
2015	30	353	179	150	29
2016	30	363	166	150	16
2017	30	361	172	146	26
2018	31	365	165	161	4

〈표-1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연도	총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 법적 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지원	기 타
2014	56,960	26,015	2,448	7,369	3,425	5,144	12,559
2015	93,012	50,046	2,260	11,560	6,444	9,163	13,539
2016	97,566	49,942	1,018	8,807	7,204	10,661	19,934
2017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2018	120,675	62,831	1,314	8,911	10,813	17,005	19,801

〈표-15: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 실적〉

(단위 : 건)

구 분		처리									
		처리 건수	구조					기타			
			계 (구조건수)	민·가사			형사	기각	이송	취하	상담
				소계	소송 구조	소송 전 구조 등					
가정폭력	2017	7,966	2,285	2,285	2,161	124	—	—	175	48	5,458
	2018	7,366	2,108	2,108	1,943	165	—		164	45	5,049
성폭력	2017	885	431	258	256	2	173	5	2	18	429
	2018	1,134	764	357	356	1	407	1	5	42	322

〈 표-16: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구조 실적〉

(기간: 2014~2019. 6.)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인 원	사 건	구조금액
2014	2,227	2,225	89,643
2015	2,273	2,271	120,954
2016	2,013	2,010	114,853
2017	1,921	1,916	113,557
2018	1,664	1,659	98,591
2019. 6.	725	725	40,955

〈 표-17: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
(기간: 2016~2019. 9.)

(단위: 건)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합계	1,004	346	284	229	145
검찰	26	11	9	2	4
경찰	978	335	275	227	141

〈 표-18: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 처리 현황〉
(기간: 2016~2019. 9.)

(단위: 건)

종결 년도	구분	합계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권고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전체	993	54	17	0	7	30	427	12	484	16
	검찰	24	3	3	—	—	—	10	—	10	1
	경찰	969	51	14	—	7	30	417	12	474	15
2019 ~ 9월	소계	133	5	3	0	1	1	52	0	75	1
	검찰	2	—	—	—	—	—	1	—	1	—
	경찰	131	5	3	—	1	1	51	—	74	1
2018	소계	255	14	6	0	2	6	108	4	128	1
	검찰	8	2	2	—	—	—	2	—	3	1
	경찰	247	12	4	—	2	6	106	4	125	—
2017	소계	243	15	4	0	2	9	111	1	111	5
	검찰	7	1	1	—	—	—	4	—	2	—
	경찰	236	14	3	—	2	9	107	1	109	5
2016	소계	362	20	4	0	2	14	156	7	170	9
	검찰	7	—	—	—	—	—	3	—	4	—
	경찰	355	20	4	—	2	14	153	7	166	9

〈표-19: 근로감독관 증원 현황〉

구분			2016	2017.8.	2018.3.	2018.9.	2019.8
근로감독관 정원(명)			1,747	1,946	2,255	2,520	2,942
	본부		48	48	48	48	48
	근로개선		1,291	1,450	1,690	1,902	2,213
	산업안전		408	448	517	570	681
증원 인원(명)			52	199*	309**	265	413
	직무별	근로개선	52	160	240	212	300
		산업안전	0	40	69	53	113

〈표-20: 외국인노동자 대상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경과〉

관련 규정	주요 내용
'14.4월 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변경 사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 하되, 증빙이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자체 확인 또는 타 기관(부서)의 조사판 단 결과를 토대로 처리 • 사용자의 이탈신고 시 외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이의제기 기회 부여 • 소송 등으로 최종 판단 시까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될 경우 사업장 변경 우 선 진행
'15. 9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외국인노동자 간 사업장 변경 관련 갈등발생시 권익보호협의회 소 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
'18.3월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가 자율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한 숙소 정보 중 숙소 유 형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19.1월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3일 이내) 사 업장변경제도 도입 • 숙소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가해자의 범위를 사용자 외에 사용자, 직 장 동료,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 • 사업장 변경 허용 요건 중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와 같은 재량적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요건을 명확화
'19.7월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의2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 우, 사용자가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 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변경 사유로 추가

〈표-21: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현황〉

시점	입원 환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소계	친족 등	시·군· 구청장	
'16. 12. 31.	69,162 (100%)	26,545 (38.4%)	－ －	42,523 (61.5%)	39,586 (57.2%)	2,937 (4.2%)	94 (0.1%)
'17. 4. 30.	66,958 (100%)	27,877 (41.6%)	－ －	38,977 (58.2%)	36,269 (54.2%)	2,708 (4.0%)	104 (0.2%)
'17. 6. 23.	66,688 (100%)	30,536 (45.8%)	5,150 (7.7%)	29,002 (43.5%)	29,002 (43.5%)	－ －	2,000 (3.0%)
		35,686 (53.5%)					
'17. 8. 21.	67,605 (100%)	31,066 (45.9%)	8,023 (11.9%)	26,166 (38.7%)	26,166 (38.7%)	－ －	2,350 (3.5%)
		39,089 (57.8%)					
'17. 12. 29.	66,658 (100%)	31,274 (46.9%)	10,822 (16.2%)	22,050 (33.1%)	22,050 (33.1%)	－ －	2,512 (3.8%)
		42,096 (63.2%)					
'18. 4. 23.	66,523 (100%)	30,171 (45.4%)	11,623 (17.5%)	22,169 (33.3%)	22,169 (33.3%)	－ －	2,560 (3.8%)
		41,794 (62.8%)					
'18. 9. 1.	67,429 (100%)	30,274 (44.9%)	12,682 (18.8%)	21,677 (32.1%)	21,677 (32.1%)	－ －	2,796 (4.1%)
		42,956 (63.7%)					
'18. 12. 31.	66,027 (100%)	30,085 (45.6%)	13,073 (19.8%)	20,123 (30.5%)	20,123 (30.5%)	－ －	2,746 (4.2%)
		43,158 (65.4%)					

〈표-22: 외국인보호소 내 의료인력 및 진료실적〉(기간 : 2019년)

(단위: 명)

구 분	의 료 인 력				진 료 실 적			
	의사	간호사	공중 보건	심리 상담사	진료연인원	일평균 진료인원	외래진료	심리상담
계	3	3	0	0	22,217	29.8	184	590
화성보호소	1	1	0	0	10,673	43	118	238
청주보호소	1	1	0	0	6,407	25.8	28	149
여수사무소	1	1	0	0	5,137	20.7	38	203

※ 일평균 진료인원 : 진료연인원 ÷ 근무일수(휴무일 제외 근무일수)

※ 심리상담사 등 의료사업 관련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표-23: 동감프로그램 운영 내용〉(2019년 상반기)

【화성보호소】

구분		시행횟수	참여자
문화체험	전통예절	49	838
	국악공연	47	1,408
	한국무용	44	1,026
	한글강습	34	976
건강관리	요가	46	1,069
	이발·미용	21	820
계		241회	6,137명

【청주보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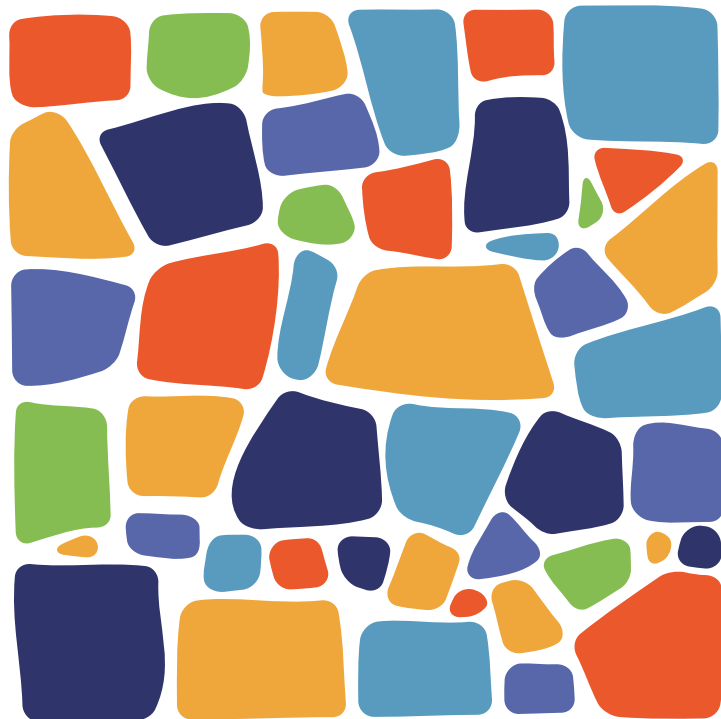
구분		시행횟수	참여자
건강관리	요가	46	601
	피부미용	25	436
	이발	12	121
	생활건강	23	354
	종교	41	186
계		147회	1,698명

【여수사무소】

구분		시행횟수	참여자
문화체험	한글강습	46	820
건강관리	요가	43	804
	이발·미용	22	236
종교·오락	노래교실	18	382
	종교활동	49	847
계		178회	3,089회

【인천청】

구분		시행횟수	참여자
건강관리	요가	33	328
	아·미용	24	339
	방문진료 (외래진료포함)	27	238
계		84회	905명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 -
(영문본)



법무부

Issue 01

National Action Plan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Government”) established the 3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18-2022, hereinafter “NAP”) in August 2018. The 3rd NAP, drafted through two public hearings and 18 meetings in participation with relevant civil societies and ministries, contains policy tasks to implemen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hereinafter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hereinafter “Committee”). Major tasks include a review of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n improvement in legality and responsibility of law enforcement at the scene of rallies, a guarantee of peaceful demonstrations under the principle of non-application of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and a revision to the laws on anti-discrimination. Also included in the recommendations by treaty bodies, including the Committee as appendices, the 3rd NAP may be referred to when public officials execute policies.

Information on Implementation of Concluding Observations Not Included in List of Issues Prior to Submission

2. Regarding Article 17(c)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the Government operates various policies to support single-parents, including unmarried mothers, such as educational expense support and allowances for self-support and guaranteeing the right to learn. The *Manual on Consultation with Teenage Single Parents for Teachers* was prepared and distributed to schools at every level to protect the right to learn of single mothers and eradicate discrimination by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teenage single mothers. Dedicated welfare facilities are being operated for teenage single parents, including single mothers, to juggle childcare, study, and prepare for self-support. The Government also subsidizes low-income single-parent and grandparent families for childcare. The Government prioritizes single-parent families when offering various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details, see Appendix Table-1).

3. Regarding child allowance in paragraph 17(c)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the Government does not offer it in a discriminatory manner just for the reason of being born to a single mother. The child allowance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fundamental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in 2018. At that time, it was given to children under six years of age from households in the bottom 90 percent of the income bracket. But the policy has been improved to provide it to all children under age seven.

4. Regarding paragraph 35(c)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most articles in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hereinafter “Mandela Rules”) were reflected in the laws related to correction and are currently being executed in the field. Specific steps the Government has brought to formulate imprisonment policies into line with the Mandela Rules since 2015 are as follows:

(a) Regarding Rule 58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the Government has adopted “smart meetings” under which requesters may easily have a meeting with convicted prisoners using a smartphone since February 2016, expanding prisoners’ rights to contact the outside world and supporting family recovery. With more servers, smart meetings may soon become accessible to unconvicted prisoners.

(b) Regarding Rules 24 through 35 (Health-care services), 42 correctional institutions as of September 2019 offer remote medical services to help prisoners access hospitals outside of the institutions. Prisoners have undergone an annual medical examination with 22 items since 2005, while the number of items was increased to 31 in 2019. The annual number of prisoners who had a medical examination in 2018 stood at 38,943, an increase from 20,643 in 2005.

(c) Regarding Rules 12 through 17 (Accommodations), th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improved facilities and living environments by installing LED lights and upgrading the heating system and toilets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across the nation. The Government will continuously put efforts into reflecting the Mandela Rules in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comprehensively.

Measures to Implement the Committee's View on Optional Protocols

5.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s views o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Covenant"), the Government has translated the views into Korean and published them in the official gazette since 2005. Furthermore,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o enact the Human Rights Framework Act (hereinafter "HRFA") as its National Agenda. The Act will contain a domestic implementation mechanism for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cluding the Committee's views. Notwithstanding, the full compli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may not be probable given a practical limitation that the views can hardly invalidate contradicting final and conclusive decisions of Korean courts.

6. To implement the view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design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to pursue freedom of conscience and "military obligation" by forming an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holding public hearings, and conducting public opinion polls. As a result, it enacted a bill to adopt an alternative service. The details of the bill and other implementation measures may be referred to as the answer to Issue 21.

Issue 02

Development of a Legal Framework to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Laborers in the World of Work

A.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7. The Government amended the *Labor Standards Act* (hereinafter "LSA") in July 2019 to protect workers from workplace harassment. The amended Act defines workplace harassment as "behaviors that employers or employees cause physical or mental suffering to other employees or deteriorate the work environment beyond the appropriate scope by taking advantage of superiority in rank, relationship, etc. in the workplace" and prohibits such behaviors. When an employer receives a report on or is aware of workplace harassment, the employer shall, without delay, investigate the case. If workplace harassment is verified, the employer shall take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Ac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reinafter "MOEL") designated labor inspectors dedicated to workplace harassment in 47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authorities and has operated eight specialized counseling centers across the nation from 2020. As of March 31, 2020, 3,347 petitions on workplace harassment were received, while 2,739 were processed. For detailed statistics, see Appendix Table-3. The Government plans to enhance the relevant policies to ensure that employers comply with the legal obligations to investigate harassment complaints and take adequate measures promptly.

B. Protection of Customer Service Employees

8. The Government amend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ereinafter “OSHA”) in October 2018 to make employees providing services for customers (hereinafter “customer service employees”) legally protected from harassment such as verbal abuse by customers. According to the amended Act, any employer shall take preventive measures such as posting a notice asking customers not to use verbal abuse. In case a health problem occurred or is highly likely to occur with a customer service employee due to verbal abuse or violence by a customer, the employer shall immediately suspend operations to separate the victimized employee from the place of danger or provide a break, support treatment, and counseling if necessary.

C. Expans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9. To fulfill workers’ right not to be threatened with their life and safety within their workplace, the Government wholly amended the OSHA in January 2019.

10. The amended Act revised the definition of the persons protected under the OSHA, now including specially-employed laborers, e.g., “gig” workers, and delivery workers. The Government will keep striving to expand the scope of the persons protected given newly-formed labor relations follow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11. The amended Act prohibited in-house sub-contracting on specific hazardous work to prevent passing on risks to sub-contracted laborers and enhanced the liability of contractors with practical control and management authority over workplaces to prevent accidents of sub-contracted laborers. The scope of the places where contractors shall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have been expanded into 21 dangerous places that contractors control and manage.

12. The Government took measures to protect workers at the industrial site as follows: The *Guidelines 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Recess Facilities at Places of Business* were drafted and distributed in August 2018 for workers who hardly take a break due to the lack of recess areas. The guidelines for outdoor workers exposed to heat or coldness were also handed out. Small “unlicensed construction works” not formerly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e now eligible. The Government also reduced the burden of proof of laborers and eased requirements in approving occupational disease to be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13. Furthermore, the Government inspects whether or not workplaces that employ many foreign laborers provide health and safety education and protective equipment and take health and safety measures, including medical examinations. It also provides instructors (interpretation provided) so that foreign laborers are given customized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education focusing on practical exercise and case studies about hazardous factors (falling, crashing, caught in, etc.) before getting a job. Health and safety materials translated into 16 languages were released.

D. Efforts to Improve Labor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14. To protect foreign laborers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the Government drafted the *Guidelines on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Form 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Sectors* (hereinafter “GSEC,”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in October 2015, and fisheries industry in April 2017) to secure their working and recess hours and holidays.

15. The foreign manpower allocation method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hereinafter “EPS”) was revised to promote the labor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in January 2020, encouraging employers to improve labor

conditions by granting higher advantages to those following the GSEC. In addition, as the places of business in which an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or of which accommodation facilities do not meet the standards get greater disadvantages, the system makes such businesses difficult to be allocated with foreign laborers and, as a result, induces employers to strengthen their efforts.

Specific Cases in which Local Courts Cited Provisions of Covenant

16. With continuous improvements in the domestic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number of judgments applying or referr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reases overtime. Major recent cases are as follows:

(a) On November 1, 2018, regarding whether or not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s a “justifiable ground” provided in Article 88(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reinafter “MSA”),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s “justifiable grounds” on the basis that General Comments No.22 of the Committee stipulates tha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can be derived from Article 18” of the Covenant, and on the basis that the Covenant has an identical effect as that of a domestic law pursuant to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2016Do10912) as an opinion concurring with the majority.

(b) On September 21, 2018, the Daegu High Court, regarding the Plaintiff’s argument that not being able to take a graduate school exam scheduled on Saturday for a religious reason constitutes grounds for a make-up exam, accepted the argument thereof by stating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and Article 18 of the Covenant to which Korea is a signatory also guarantees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Such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shall be highly respected compared to other basic human rights given their nature” (2018Nu3005).

Major Matters Not Included in Answers to List of Issues Prior to Submission among Other Develop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mprovement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17. Th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Court”) introduced a statement-assistanc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by amending the applicable laws on February 3, 2016. The system thereof contributes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access justic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Court also installed the One-Stop Platform, or a “justice-access center,” which may systematically introduce and associate various legal aid and even pro bono activities within as well as outside of the Court at the Suwon Court Complex and also at the Jeonju District Court.

18. With the intent of preventing elder abuse, the Government amended laws in 2018 to make human rights education mandatory for persons who establish and operate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or long-term care institutions, have institutions such as welfare facilities employ a person obliged to report elder abuse, make care hospitals provide education on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make it an obligation to report elder abuse.

Issue 03

19.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OK”) amend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hereinafter “NHRCA”) on February 3, 2016 to secure diversity in the composition of commissioners for human rights (hereinafter “commissioners”) and procedural transparency in appointing commissioners. Candidates and opinions shall be collected from various social groups to guarantee

transparency. Specific qualifications for commissioners were also set, including enabling human rights advocates to be appointed based on their career.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ereinafter “NHRC”), the provision under which no commissioner shall assume any legal responsibility for his/her remarks mad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was inserted. The amended Act also stipulates that when the NHRC is set forth, independent and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NHRC’s duties shall be prioritized as much as possible.

Issue 04

General Framework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 The Government prepared a separate chapter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when drafting the 3rd NAP. This chapter includes a specific agenda, including promoting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laborers abroad, and securing the safety of consumer products. The Government is gradually implementing the tasks. It plans to incorporate more effective policy tasks in developing the 4th NAP,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at sai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NAP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will also be considered, review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option as it may be less reflective of the interdependency of various human rights policies than the comprehensive NAP.

21. The Government is developing the *Guidelines on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Business Management*, an instruction for companies to imple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the field. The Guidelines are intended to express the Government’s expectations on businesses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hereinafter “human rights-based business management”).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institutionalize the disclosure of non-financial (ESG) information gradually. To seek practicality of remedy procedures, the Government put a priority on adopting a class-action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only to the securities sector and the consumer damage sector. In May 2020, the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MOJ”) and the NHRC also signed an MOU to research innovating laws and policies to widespread human rights-based business management.

22.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expansion of human rights-based business management, starting from public institutions. All ministries and metropolitan municipalities decided to review human rights-based business management when assessing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ir supervision. Such measures of assessment were adopted in compliance with a recommendation by the NHRC.

Policies Regarding Sustainable Management

23.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domestic companies to reflect responsibilities fo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ir busine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also investigates the level of sustainable management, includ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policies, and provides consulting on the items with poor performance for each company. To support such policies, the Government amended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under which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y designate “support centers for sustainable management” to promote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enterprises efficiently.

Policies Regarding Ethical Management

24. The Government has published the Business Ethics Briefs, a webzine, since 2005, providing about 7,400 persons in companies and economic organizations with

the latest information on integrity and ethical management. The guidance for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ISO37001) was also produced and distributed to companies in 2017. The Government also developed a website of the “corporate integrity management e-learning center” in 2017 where corporate employees and executives easily access business ethics anytime, anywhere, with 13 animation and video contents uploaded.

Improvement Regarding NCP

25. The Government amended the operating rules of National Contact Points (hereinafter “NCP”) in February 2017 and November 2018, which recommend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comply with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ereinafter “GME”). First amended was the number of commissioners increased to include external experts as non-governmental commissioners with the latter amendment stipulating the candidate recommendation process. The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currently consists of four ex-officio governmental commissioners and four appointees of non-governmental commissioners. The Government will also hold meetings, seminars, and briefing sessions on the GME and remedy for victims from multinational companies’ overseas activities.

Measures Taken to Ensure Victims of Corporate Activities Obtain Appropriate Remedies

26.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Korean companies expanding to South East Asia, the Government announced government-wide countermeasures in December 2019 to promote fair labor management and human rights-based business management abroad. The countermeasures are mainly about having local missions serve as a control tower on the labor and human rights issues of companies operating there through establishing an office dedicated to such mission in major local missions, actively supporting CSR activities of companies and providing more information such as local labor laws.

Issue 05

Steps Taken to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 Minorities and North Korean Refugees

27. In order not to spread discriminatory perceptions against specific race, ethnicity, nationality, and others through mass media,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hereinafter “KCSC”) deliberates the content of broadcast programs aired pursua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ereinafter “AKCSC”). Especially under Article 31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of the *Regulations on Broadcast Deliberation* (hereinafter “RBD”), the KCSC deliberates a broadcast program that incite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specific race, ethnicity, nationality, and others and punishes the responsible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and person. Furthermore, the KCSC makes a request for correction on information online after deliberating discriminatory expressions against specific groups with no grounds. For statistics, see Appendix Table-4.

28. The Government unfolds a campaign raising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to eradicate discrimination based on all grounds underlying cultural difference such as race, religion, language, region, gender, and generation. With the “Rainbow Bridge Project” started in 2012,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programs to give minorities more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culture and promote mutual communication and exchange (Diversity Theatre Festival, Diaspora Film Festival, etc.). Until 2019, a total of 224 programs have been operated in 26 regions across the nation, and about 290,000 persons have participated. The Government designates a “day of cultural

diversity”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holds a nationwide week-long event from May 21 to 27 every year to promote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29.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integrate into the society withou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the Government helps them join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 (Hanawon) and settle down by providing basic social adaptation education and money to encourage settlement from when they arrive in South Korea.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closely coordinate to support them after they move into their residences. Specifically, the Foundation of Support for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nd Local Adaptation Center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ereinafter “MU”) support the settlement, improve the awarenes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provide psychological and legal counseling. North Korean refugees are given equal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Government operates the system giving the refugees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support payment, and special admission to colleges.

30. In order for adolescents from North Korea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and to be given formal education, the Government provides customized education support, such as transfer to formal school, one-on-one mentorship for adapting to education, and everyday life, care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counsel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primary and middle school dropout rates of those students decreased from 10.8% in 2008 to lower than 3% recently. Also, with education for general students to understand North Korea, the Government endeavor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y grow together as members of society.

Other Steps Taken to Comba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31. In 2016,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ereinafter “MOGEF”) and the KCSC, a broadcast deliberation institution, signed an MOU and put efforts into raising awareness on gender equality via mass media. As a result, the RBD was amended to include gender equality content in 2017. Currently, the KCSC deliberates a broadcast program that incite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specific gender and punishes the responsible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and person. The Government strive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by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of conventional media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cable TV) as well as new media from a gender-based perspective and launching media literacy education.

32. In ord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or excluded in the world of work, workplace education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came mandatory in May 2018. Accordingly, all business owners and employees shall receive “workplace education for improving awaren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ce a year, for at least one hour.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n 2017, the number of business entities required to implement the education was 4.02 million, while the number of employees subject to the education reached as many as 21,627,000.

33. The Court has launched a “window for socially disadvantaged persons including the disabled, foreigners, and North Korean refugees” at 2-6 courts every year since 2014, and has allocated counselors with legal expertise to provide preferred counseling and legal aid services. It also implements the *educational program for raising awarenes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very year for the members of courts at every level to stamp out discrimination.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culture within the judiciary, a judge training course by career has been required to include gender-sensitive education since March 2016.

Progress in Review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34. The Constitution and a number of individual laws stipulate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s what is described in the Fourth Periodic Report (CCPR/C/KOR/4, para. 376-377). The 3rd NAP, established in 2018, includes the task of “revising the laws on anti-discrimination to protect the right to equality.” On June 29, 2020,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n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prohibiting any direct or indirect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based on 23 grounds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religion, and political belief. On June 30, the NHRC announced a similar draft of the “Equality Act” and recommended its legis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will fully support such legislative discussions and deliberate ways to effectively amend the current legal framework by examin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eign legislations, and domestic laws.

Sanctions against Acts of Discrimination and Remedies for Victims

35. Under the SCA, as every citizen may claim damages to the court when public officials or private persons entrusted with public duties inflict damage by intention or negligence in performing their official duties, in violation of the statutes, a victim may claim state compensation to the court when a public agent is involved in unlawful discriminatory acts. Pursuant to domestic laws, all citizens may claim damages to the court when their rights are infringed and damaged due to illegal acts by intention or negligence of other private persons.

36. Apart from that, those who violate individual laws stipulating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shall be sanctioned. For example,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receive remedy against direct or indirect discriminatory acts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The Act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commits malicious discriminatory act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face criminal punishment. Regarding compensation, the Act also includes the provision for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to discriminators that there was no intention or negligence for discrimination. In case of abus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dvocacy agencie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ive med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and legal aid that victims need.

37.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hereinafter “EEA”), an employer that commits gender-based discrimination regarding age limit, retirement, and dismissal of his/her employees, fails to provide equal pay for equal-value work, and dismisses or takes any other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an employee due to childcare leave may face criminal punishment.

Issue 06

Measures Taken to Protect the Rights of LGBTI

38. Discrimination, hate speech, and violence which amount to crimes such as insult, defamation, and assault are held accountable under the laws. The fact that these crimes are committed because of discrimination constitutes a “blamable motive” in the determinants of judicial sentencing. For online hate speech,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tipulates “defamatory information” and “repetitive information that incites fear or anxiety” as illegal information, and therefrom stipulates the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39. To prevent the propagation of prejudice against specific gender or sexual minorities through mass media, the KCSC deliberates the content of broadcast programs aired pursuant to the AKCSC. In particular, Article 21 (Human Rights Protection), Article 29 (Social Integration), and Article 30 (Gender Equality) of the RBD stipulate that a broadcast program shall not violate human rights unfairly, and the KCSC deliberates a broadcast program that incite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specific gender and others and imposes sanctions against the responsible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and person.

40. The *Unit Management Directive* (hereinafter “UMD”), a directive to root ou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within the military, prohibits battery, cruel treatment, insults, abuse, sexual harassment, violence, and others against LGBTI. Occurrences require an immediate report and has the responsible person severely punished. Under the Directive, forcing soldiers who came out of the closet to be discharged or to use Camp Green or hospitalization to isolate them shall be prohibited. Furthermore, commanders should make human rights education for soldiers include LGBT rights pursuant to the Directive.

41. Grounded on the applicable law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reinafter “MND”) assigns counselors specialized in resolving soldiers’ sexual harassment grievances. Sexual minorities in the military are equally given protection for be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systematic post-management by counselors, while the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is kept in secrecy. Such protection and post-management for victims include counseling for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introduction to the reporting procedure regarding sexual violence cases and medical institutions for treatment of victims, and services that include counselors accompanying victims when they attend an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ors and a witness examination at the court.

42. The Government improved the *Measures on Treatment and Management of Accommodated Sexual Minorities* to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April 2020 in cooperation with the NHRC, having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inmates’ gender identity and physical sex attributes and opinions from inmates themselves, medical specialists, and other civil experts.

Facilitation of Access to Legal Recognition of Gender Reassignment

43. The Court deleted the consent statement of parents, which has been a required attachment in the application for gender reassignment set forth in the *Guidelines on Proceedings of Cases of Application to Gender Reassignment Permits of Transsexuals, etc.*

Measures in Connection with Military Criminal Act

44.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prohibits discrimination grounded on sexual orientation (Article 253 of the UMD). The crime of indecent act provided in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hereinafter “MCA”) is only applicable in the case of indecent acts disrupting military discipline. The Armed Forces carefully enforces the MCA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the homosexuality of soldiers according to Article 253 of the UMD.

45. The statistics of the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Article 92-6 of the MCA for the past five years is as follows:

Category	Total	Prosecution					Others (in trial)
		Non-prosecution	Others (under investigation, transfer to civilian justice system)	Suspension of Imprisonment	Suspension of Execution	Not Guilty	

Category	Total	Non-prosecution	Others (under investigation, transfer to civilian justice system)	Prosecution				
				Imprisonment	Suspension of Execution	Fine	Suspension of Sentence	Not Guilty Transfer Others (in trial)
2015	6					2	2	2
2016	8					1	2	5
2017	28	16		1		5	1	1 4
2018	11	9				2		
2019	4	4						

46. The provision of the MCA regarding the crime of an indecent act is intended to maintain military disciplin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so found it constitutional several times. However, as some point out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crime of an indecent act are not clear and discriminatory factors against homosexual persons exis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cently in the process of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The Government will take action based on the subsequ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prevent discriminatory punishment, the MND and the Armed Forces minimize indictment for the crime of an indecent act by strictly deciding whether or not to constitute the crime at the stages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Issue 07

Effort to Combat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ld of Work

47. 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eradic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workplace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Firstly, the Government announced and has pushed forward the *Measures to Solve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 collaboration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in July 2018. Based on the 2018 survey of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circles, an intensive labor inspection was carried out against the doubtful business places which seem to have engaged in employment discrimination. The Government has newly established and operated an Anonymous Reporting Center for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since September 2018 and plans to introduce corrective measures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in workplaces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cluding suspending the discriminatory act, adjusting working conditions, and providing an adequate level of compensation (up to triple damages).

48. Secondly, the Government strives to eradicate gender discrimination in working conditions by guaranteeing equal pay for equal-value work. The gender wage gap in the Republic of Korea mainly originates in structural factors, including career interruption due to childbirth, higher ratio of female low-wage workers, and unfair wage discrimination. In response, the Government designates compani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subject to proactive employment improvement measures (AA), and requires all those business places to submit their wage status. The Government will have the business with poor performances in AA participate in a mandatory consulting process including interviewing the CEO from 2020. Furthermore, from January 2019, the provision on criminal punishment against employer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value work is applicable to the whole business place.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introduce the “corporate wage distribution disclosure system” which discloses wage information of private companies.

Measures Taken to Increase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49. As for the presence of women in politics, the amended *Political Parties Act* increased the number of fema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city, provincial, and metropolitan councils as described in the Third Periodic Report (CCPR/C/KOR/2005/3, para. 69). The ratio of fema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continuously increased from 5.9% in the 16th National Assembly (in 2000) to 17%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2016). For statistics on the number of female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see Appendix Table-5.

50. In seeking gender equality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has adopted a quota system for gender-equal employment that sets the target ratio of men and women. The Government has also built the Improvement Plan for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2018-2022) with challenging but viable targets aimed at engaging more women in high-ranking positions. Specific efforts include expanding a “female human resources DB” pool and using it to recommend female candidates for government committee members and open positions. The result was full achievement of goals set for 12 fields in 2019, and notably, early achievement of the 2022 goals in six areas, including senior executives of public organizations (21.1%) and directors of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20.8%). For details, see table below. Besides, the Government adopted the level of “women’s authority in decision making” as an index in major governmental assessments.

Table: 2019 Departmental Implementation of Improvement Plan for Female Representation in Public Sector

Position	2019						
	2018 Record (%)	Goal (%)	Record (%)	Achievement Rate (%)	2020 Goal (%)	2021 Goal (%)	2022 Goal (%)
1. High-ranking Public Official	6.7	7.2	7.9	109.7	8.2	9.6	10.0
2. Director of Central Gov’t	17.5	18.4	20.8	113.0	21.0	22.5	25.0
3. Director of Local Gov’t	15.6	15.9	17.8	111.9	18.6	20.0	21.0
4. Senior Executive of Public Organizations	17.9	18.4	21.1	114.7	21.8	22.4	23.0
5. Manager of Public Organizations	23.8	24.1	25.1	104.1	25.4	26.6	28.0
6. Manager of Local Public Corp.*	6.9	8.1	9.1	112.3	9.3	9.6	10.0
7. Professor of National Univ.	16.6	17.0	17.3	101.8	17.5	18.1	19.0
8. Principal & Vice Principal	42.7	43.0	44.1	102.6	44.3	44.7	45.0
9. Military Officer	6.2	6.7	6.8	101.5	7.4	8.1	8.8
10. Police Officer	11.7	12.6	12.6	100.0	13.4	14.2	15.0
10-1. Manager (added)	5.9	6.1	6.1	100.0	6.3	6.6	7.0

Position	2019						
	2018 Record (%)	Goal (%)	Record (%)	Achievement Rate (%)	2020 Goal (%)	2021 Goal (%)	2022 Goal (%)
11. Coast Guard	12.0	12.6	12.7	100.8	13.2	13.8	14.4
11-1. Manager (added)	2.2	2.3	2.5	108.7	2.6	2.7	2.8
12. Gov't Committee	41.9	40.0	43.0	107.5	40.0	40.0	40.0

* (2018) Local Public Corporations with 300 or more employees (25) → (2019) All Local Public Corporations (151)

51.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over all listed corporations (2,148 companies) as of the first quarter in 2020, findings showed that the ratio of female executives was a mere 4.5% and only 33.5% of those enterprises had one or more female executives. Therefore, the Government expanded efforts to enhance female representation to the private sector. In March 2019, the Government signed an agreement on the *Partnership for Gender-Equal Inclusive Growth* with 10 economic groups and has pursued joint projects. The Government has also unfolded a campaign to enter into autonomous agreements with companies which voluntarily seek seating more women at the executive level, and this resulted in the signing of 19 agreements with 71 companies by July 2020. It also provided corporate CEOs with lectures about gender diversity to raise awareness and conducted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current gender ratio of executives in all listed corporations and barriers in increasing the number of female executives in major industries. Furthermore, customized consulting for better gender balance has been provided from November 2019, and at the end of the year, 27 companies were supported. As such, the Government is calling for actual change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Issue 08

Measures for Rigorous Law Enforcement on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52. The Government amend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hereinafter “SADV”) to specify that a police officer on the scene may arrest a flagrant offender and to impose criminal punishment, not a fine, on those who violate any tentative measures, including a restraining order. Also, victim protective orders newly include “restraining the right to visit the perpetrator’s child” and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of the crime of domestic violence shall face criminal punishment unless not complying with the order for a lecture. The prosecutors adopted the *Guidelines on Investigating Domestic Violence Cases and Victim Support* under which those who are habitual offenders, those who used a deadly object, and those who recommitted domestic violence with two or more previous records within the past three years shall be detained during the investigation in principle.

53. The statistics of the prosecution of persons who violated the SADV is as follows:

Category	Receipt	Total	Prosecution	Non-prosecution	Refer to Other
----------	---------	-------	-------------	-----------------	----------------

Year	dispositi on		Claim for summ ary order		No suspici on	Suspendi on of Indictm ent	Crime not establi shed	No right of arrange ment	Dismissal	the competen t court of home protectio n cases		s*
	47,007	46,545	1,748	2,222						11	18,207	
2015	47,007	46,545	1,748	2,222	1,245	4,802	63	17,316	11	18,207	931	
2016	54,191	53,237	1,793	2,734	1,500	4,510	67	21,185	11	20,311	1,126	
2017	47,036	46,912	1,609	2,880	1,450	3,779	57	17,998	14	17,184	1,941	
2018	39,183	39,188	1,550	2,618	1,440	2,852	73	14,584	13	14,253	1,805	
2019	53,364	53,238	1,840	3,153	2,178	3,798	69	19,380	16	19,818	2,986	

*Others: Stay of prosecution, stay of indictment due to absent witness, refer to the competent court of home protection case, prostitution protection case and child protection case and another competent court.

54. The statistics of trials for the violation of the SADV is as follows:

Category	No. of proceeded cases (No. of persons)								
	No. of received cases (No. of persons)	Total	Imprisonme nt	Suspensio n of execution	Pecuniary punishment	Suspension of execution (pecuniary punishment)	Suspensio n of sentence	Acquittal	Decision of transfer, etc.
2015	25	22	4	4	9	-	-	-	5
2016	56	49	4	20	21	1	-	-	3
2017	41	42	7	12	20	-	1	-	2
2018	63	51	10	17	18	2	2	-	2
2019	63	64	17	19	21	-	-	1	6

Note: 1. Materials about the “violation of the SADV” out of offenses other than criminal code at first instance criminal trial; 2. Suspension of execution (pecuniary punishment) has been applied since January 2018.

Table: Home Protection Cases

Category	Decision				
	Receipt	Total	Protective disposition	Non-disposition	Others
2015	20,131	16,868	8,917	7,319	632
2016	22,482	21,802	11,368	9,792	642
2017	18,971	20,622	11,562	8,802	258
2018	19,739	18,448	10,936	7,310	202
2019	23,699	23,139	13,360	9,579	200

Measures for Rigorous Law Enforcement on Perpetrators of All Acts of Violence against Women

A. Development of Legal Framework

55. In January 2019,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newly inserted the provision to punish a person who has illicit sex with or commits any indecent act against a child or youth aged 13 to 16 by taking advantage of his/her destitute conditions. Furthermore, in May 2020, the age of statutory rape was increased from a child under the age of 13 to 16 to expand the protection of minors.

56. For more stringent punishment against sexual crimes by taking advantage of being in a superior position, the statutory punishment against the crimes of sexual intercourse and an indecent act through occupational fraudulent means or by a threat of force and against rape was strengthened in 2018 and 2020. In March 2020, the SASC was amended to strengthen punishment against acts including producing and distributing deep fake videos.

B. Investigators' Policies for Rigorous Law Enforcement

57. As new types of violence against women, such as digital sex offenses, have emerged, and the types of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have been in the loophole of the existing system have risen up to the surface, investigators have endeavored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and to punish the perpetrators.

58.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ereinafter "SPO") instructed and educated a strict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by organizing and operating a taskforce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holding a joint workshop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providing capacity-building education to prosecutors dedicated to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It also plans to respond to the digital sex offenses severely by making a drastic improvement in the standard for case processing of persons who commit a crime related to videos of sexual exploitation (enforced on April 9, 2020; see Appendix Table-6).

59. The police have also put efforts to ensure safety for wom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hereinafter "KNPA") established a team led by the Director of Women Safety in May 2019 to eradicate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first half of 2018, all the District Police Agencies across the nation launched the Investigation Team Dedicated to Cyber Sex Offenses and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on Crimes against Women. It also mounted an intensive crackdown on malignant crimes against women, including sex offenses, domestic violence, etc., in the first half of 2018. In the second half of 2018, with the Special Crackdown on Criminals of Cyber Sex Offenses, a total of 3,847 criminals who distributed illegal pornography were arrested, 150 DNSs were blocked, and 92 webpages were shut down. In 2019, the Intensive Crackdown on Webhard-Cartels was also carried out.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an intensive crackdown along with expanding personnel providing training on gender sensitivity.

Measures of Redress Granted for Victims

A. Policies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60.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reventive Measure against Domestic Violence in late November 2018, focusing on four areas: (i) the safe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 victims; (ii)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and prevention of repeated crimes; (iii) support for the victims; and (iv) preventing and raising awareness on domestic violence (for details, see Appendix Table-7).

61. In 2019, the Government allocated 8.4 billion KRW of their government budget to 128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which provide consultation, temporary protection, treatment and recovery, legal aid, and accompanying victims to investigations (for details on the work of the centers, see Appendix Table-8). Furthermore, as of 2018, 66 shelters across the nation are under operation to support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o be protected in a stable place, with 314 rental houses given to them to live in cohabitation.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ho leave the shelters are subsidized with self-reliance allowances and medical expenses (for the status of shelters and their performance, see Appendix Table-9, 10).

62. The MOJ specifies the Special Rules for Immigrants through Marriage Victimized by Domestic Violence in the *Immigration Act* (hereinafter “ImA”) (Article 25-2 of the ImA) and marriage migrants whose marriage is severed due to domestic violence are permitted to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less of whether they raise a child.

B. Victim Protection Policie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Any Form

(a) Legal Framework

63. As explained in the Fourth Periodic Report (CCPR/C/KOR/4, paras. 70, 77), the ROK enacted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building a foundation for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ing policies. The Government also amended the *Civil Act* to susp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of the minors who were sexually infringed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until they reach an adult age.

(b) Policies for Supporting Victims

64. The Government provides services to victims, including consultation, temporary protection, treatment and recovery, legal aid, and escorting to investigators, at various support facilities.

65. Specifically, when victims of violent crimes, including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incur an injury, criminal injury relief funds or medical subsidies for physical injury are granted, and medical expenses for mental status and living, school and funeral expenses are also given if necessary. For victims of violent crimes and their families, the “Smile Center,” an institution that provides psychological treatment to heal trauma caused by criminal injuries, is being operated. As of now, 14 centers across the country are operated based on the national treasury, and its numbers are on the rise every year.

66. Especially for persons victimized by sex offenses,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ion, the Government operates the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Sexual Violence Victims (Sunflower Center) providing a one-stop service including counseling, treatment, legal aid, and investigation support 24 hours a day and seven days a week. As of the end of 2019, 39 Sunflower Centers are in operation and received 26,585 cases. The total number of services provided was 413,177, a 3.6%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for specifics, see Appendix Table-11).

67. Considering the diversity and distinctiveness of the damag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more facilities supporting self-reliance of the disabled which provide self-reliance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job information for the disabled victimized by sex offenses.

68. Since 2018, the Government has operated the “Digital Sex Offense Victim Supporting Center” which provides counseling, support for investigation (evidence collection), deleting the data and the introduction of legal and medical support for those injured damaged by online sex offenses. For migrant women who are vulnerable due to a language barrier and unstable status, the Government provided

counseling and support in 2019 through the five newly established counseling offices for migrant women victimized by violence.

69. The Counseling Office for Sexual Violence also provides counseling, referrals to medical institutes, shelter, and legal aid institutions, and escorting to investigations and trials. In addition, shelters are being operated especially for victims of sex offenses who have difficulties in normal school or social life offering residence, food, counseling, self-reliance education, and job information (for the status of the Counseling Offices and shelters, see Appendix Table-12, 13).

70. The Government also provides free legal aid in civil, domestic, and criminal cases (for the statistics of legal aid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see Table-14, 15). Furthermore, victims may receive free litigation aid via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hereinafter “KLAC”) and primary legal counseling from Legal Home Doctors (attorneys-at-law) dispatched to 65 regions across the nation (for the records of legal aid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by the KLAC, see Table-16).

Measures Taken to Raise Awareness about Domestic Violence

71. The Government amend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on July 30, 2013, to broaden the scope of institutions required to provid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by including all government agencies.

72. Especially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Institute of Justice offers professional education every year for prosecutors called the “professional course on the investigation of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including a course on domestic violence. Courts at every level have also given the “educ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prostitution, sex offenses, and domestic violence” twice a year since 2014.

73. To make every citizen recognize that physical assault, emotional violence, and economic control constitute domestic violence, the Government designated the Day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Bora Day: 8th of every month) and the Week for the Elimination of Domestic Violence (November 25-December 1 every year) while raising public awareness against domestic violence by running a campaign and airing a video about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via mass media and YouTube.

Steps Taken to Adopt Comprehensive Strategy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in Any Form

74. The *Framework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specif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otect and support victims and stipulates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ursuit of policie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was enforced in December 2019. The Act encompasses gender-based violence in all its forms by defining violence against women as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that infringes the right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fety, etc.” Pursuant to the Act, the 2020 1st basic pla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and its annual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established.

75. The Government puts forward an enactment or an amendment to the applicable laws to combat various violence against women and to fix loopholes. In February 2018, the Government disclose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Damage from Stalking and Dating Abuse* and prepared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inal Stalking, etc.* (hereinafter “APCS”) in November 2020. The legislation of the APCS specifies the “definition” and the “type” of criminal stalking and has the perpetrator face the enhanced punishment. Under the

Act, the police may take emergency measures including separation of the alleged offender from the victim, while the court, when a possible repetition of the crime is acknowledged, may take a tentative measure including a restraining order and a ban on communicating with the victim. The Government will complete its effort to legislate the bill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which started its term in 2020.

Measures Taken to Comba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 Legal Framework

76. The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to comba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based on the EEA. In particular, it strengthened employers' obligations with the amendment to the EEA in 2017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e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n April 16, 2019. The revisions newly insert the obligation of employers to take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nd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in the case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against the reporter or the victim. The Center for Anonymous Report of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has operated since March 2018.

B. Policies and Measures

77. The Government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Measures to Comba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the Workplace* in collabo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in November 2017. Also, a Government-wide Committee to Combat Sexual Harassment, Violence, and Digital Sex Offenses in participation with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was launched. Furthermore, for the prompt remedy of victims, counseling centers for equality in employment run by civil organizations were increased in numbers to address local differences in accessibility (15→21 centers). The state party also plans to introduce corrective measures that can be imposed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cluding the suspension of a disadvantage inflicted on a victim and enabling adequate compensation. Additionally, it plans to amend the EEA to have the CEO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as a perpetrator of sexual harassment, to address the issue that if a perpetrator is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only indirect sanctions, such as a disciplinary action, is applicable under the current EEA.

78. In addition, to strengthen monitoring, the grounds for special labor supervision on the business places where scandalous workplace sexual harassment occurred were stipulated in September 2019. The Government also imposes corrective measures and penalties on the business places which provided no educ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79. The public sector takes various measures against sexual harassment by providing education and operating an in-house office dedicated to eradicating workplace sexual harassment. When the MOGEF reviewed educ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the public sector, 99.8% of 17,556 public institutions provided such education as of the end of 2019, and most of the institutions already established guidelines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within the organization (99.9%) and the counseling window for such victims (99.6%). Furthermore, an independent report center for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s run outside the institutions, supporting them to handle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cases not resolved on their own.

Measures Taken to Combat Use of Spycams in Public Bathrooms in a Manner Infringing on Women's Privacy

80. The Government agencies jointly announce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Damage of Digital Sex Offenses* in September 2017. It

revised the concept of “publicly used places” subject to the prohibition of intrusion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into “any publicly used place used by many and unspecified people including a toilet, public bath, bathroom, sweating room, breastfeeding facilities, and dressing room” under the SASC in September 2017, to specify that an intrusion upon a public toilet for sexual purposes may face punishment. The Act was also amended and implemented to put heavier punishment on the acts unlawfully taking and distributing photographs and to punish the persons who distribute its duplicates.

Steps Taken to Comply with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Abortion

81.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on the crime of abortion provided in the CrA. Since then, the relevant Ministries have collected opinions of stakeholders and experts, held meetings and operating advisory bodies in various fields, and consequ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bill including the time periods, ground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for legal abortion in November 2020.

82. Before the laws are amended, the Government trie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abortion and hire more professional counselors in the Counseling Office for Emergency Pregnancy to help address physical and mental difficulties after the operation. Furthermore, more contraception education will be provided for adolescents out of schools and adults.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consider allowing the use of medicine for a spontaneous loss of a pregnancy as the aforementioned legislation takes place.

Issue 09

83. Article 2 (Definitions) of th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hereinafter “CTA”) enacted and implemented on March 3, 2016 defines “terrorism” as any of the following conduct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foreign government, or to cause it to conduct any affair which is not obligatory on it or threaten the public. The definition of “terrorism” in the CTA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gains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also incorporated Article 28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untering terrorism (A/HRC/16/51), which the Committee mentioned in the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and Article 3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66 (2004).

- (a) Killing a human or posing a risk to a person's life by causing bodily injury or arresting, confining, kidnapping, inducing, or taking hostage of a person
- (b) Any of the following conduct engaged in an aircraft
 - (i) Crashing, capsizing, or damaging an aircraft in flight, and any other act of destruction that may endanger the safety of an aircraft in flight
 - (ii) Hijacking an aircraft in flight or forcing its flight by violence, threat, or any other means
 - (iii) Impeding the safe flight by damaging aviation facilities related to the flight or by impeding the operation of such aviation facilities
- (c) Any of the following conduct related to a ship or a marine structure
 - (i) Destroying a ship or marine structure in operation or inflicting damage thereon to the degree that endangers the safety thereof

- (ii) Seizing a ship or marine structure in operation or coercing a ship to operate by violence, threat, or any other means
- (iii) Destroying, seriously damaging, or causing the malfunction of any equipment or facilit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 ship with intent to endanger the safety of the ship in operation
- (d) Placing, detonating, or using in any other way a biochemical, explosive, or incendiary weapon or device made to cause death, serious injury, or serious material damage or having such power on any of the following vehicles or facilities
 - (i) Vehicles used by the public for transporting humans or goods, such as trains, trams, and motor vehicles
 - (ii) Facilities or roads used for the operation of the vehicles falling under subitem (i), parks, stations, and other facilities used by the public
 - (iii) Facilities to supply electricity or gas, waterworks supplying drinking water for the public, facilities for the use of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facilities provided for common use or used by the public
 - (iv) Facilities for processing, transporting, or storing of raw materials of oil, flammable gas, coal, other fuels, etc. to manufacture or refine them or to make fuel therefrom
 - (v) Structures, aircrafts, and ships to which the public can have access, excluding the facilities falling under subitems (i) through (iv)
- (e) Any of the following acts related to nuclear materials, radioactive materials, or nuclear facilities
 - (i) Harming human lives, bodies, or property, or otherwise disturbing public safety by destroying a nuclear reactor
 - (ii) Endangering human lives or bodies by wrongfully manipulating radioactive materials, etc., a nuclear reactor and its related facilities,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 (iii) Accepting, carrying, possessing, keeping, using, transporting, remodeling, disposing of, or dispersing nuclear materials
 - (iv) Emitting radioactive materials or exposing radiation by destroying or damaging nuclear materials or nuclear facilities or causing such destruction or damage, or by impeding normal operation of nuclear facilities

84. Cyber terrorism is not included in the definition provision of the current CTA, and there exists no domestic law which puts aggravated punishment specifically on cyber terrorism or allows disposition beyond the laws and regulations on criminal investigation.

85. It is ensured that the counter-terrorism act and its practice are applicable to terrorism alone with Article 2 of the CTA clearly and specifically defining terrorism, terrorist groups, terrorist suspects, an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suspected terrorists, such as their entry or departur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elecommunications, shall b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ovided in other laws including the ImA, the *Customs Ac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etc. Additionally, the Government handles the crime of terrorism pursuant to the procedure provid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CPA”) which prescribes due process regarding arrest or detention, access to counsel, presumption of innocence, special protection of minors, and the *non bis in idem* principle.

86. There are comprehensive mean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event the risks of arbitrary interference with privacy, including the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 to prevent the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affected by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the provision of aggravated punishment when public officials of intelligent and investigative institutions make false accusations, commit perjury, or forge evidence of the crime of forming terrorist groups.

Issue 10

87. The Government respects the purpose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hat the State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of persons, and has not executed the death penalty since 1997, recognized as a *de facto* abolitionist stat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as the death penalty is a significant issue related with the foundation of the punitive authority of the state, the Government plan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public opinion about the death penalty, its function in terms of criminal justice, overseas trends, and related recommendations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Issue 11

Efforts to Prevent Suicides

88. The Government has formulated a five-year basic plan to prevent suicides since 2004. The Government drafted the *Master Plan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s* in 2018 with the participation of 19 ministries. The Plan includes 62 tasks in six areas as of 2019. The Plan was based on five years of thorough research on 70,000 persons who died by suicide. It is mainly about the following: i) to nurture “life guardians against suicides” in local communities in identifying the persons at high risk, ii)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security services and mental health services, iii) to intensify examination on depression within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iv) to ensure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including a hotline devoted to suicide prevention, v) to prohibit the online distribution of harmful information about suicide, vi) to expand post-management on persons who attempted suicide, and vii) to take measures to prevent suicides by groups at high risk for suicides.

89.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is continuously expanded. For effective government-wide policie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Suicide Prevention Policy Committee in which the Prime Minister serves as the chairperson, joined by 12 ministries and related civil experts. It plans to address the fundamental cause of suicide by enhancing social security and support for high-risk groups. It also conducted two complete surveys on every death by suicide (first: 2013-2017, second: 2018-2019) to identify the underlying cause. Based on the findings thereof, the Government will enhance its crisis intervention given each risk factor and inherent vulnerability of target groups.

Statistics on Number of Suicides

90. The updated disaggregated statistics on the number of suicides is as follows (announced in September 2019).

Suicide Rate and Number of Deaths in Suicide by Gender and Age in 2018 (persons per 100,000 persons, persons)

	Gender										Age
	Men	Women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or over
Total											

	<i>Gender</i>										<i>Age</i>	
	<i>Total</i>	Men	Women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or over
Suicide Rate	26.6	38.5	14.8	0.0	5.8	17.6	27.5	31.5	33.4	32.9	48.9	69.8
No. of Deaths in Suicide	13,670	9,862	3,808	0	301	1,192	1,998	2,676	2,812	1,880	1,664	1,147

91. The status of suicides in the military is as follows:

		2016	2017	2018	2019
No. of Deaths in Suicide		54	51	56	62
Gender	Men	52	50	56	60
	Women	2	1		2
Age	20~29	34	37	37	43
	30~39	12	6	9	10
	40 or over	8	8	10	9

Issue 12

Punishment on Torture and Ill-Treatment

92. Article 125 of the CrA punishes an act of violence or cruelty against a criminal suspect or others, committed by a person who performs or assists activities concerning judg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The provision classifies all acts of torture or ill-treatment as criminal offenses, as “violence” mean the exercise of force and “cruelty” means all kinds of acts inflicting mental or physical pain. As torture may also be punished under Article 124 (Unlawful Arrest and Unlawful Confinement) of the CrA, Article 4-2 (Aggravated Punishment of Arrest, Confinement, etc.)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hereinafter, “AAP”) and others, the Government will closely review if a new provision defining torture is necessary.

93. The status of torture or ill-treatment cases investigated and prosecuted upon receipts including litigation between 2014 and 2018 is provided in the Table below.

Table: Status of Receipts including Litigation and Prosecution related to Torture or Ill-Treatment (2014-2018)

								<i>Proceedings</i>
	<i>Receipt</i>	Total	Detained	Claim for formal trial		Claim for summary order	Non-prosecution	Etc.
				Not detained				
2014	(1)	403	399	0	3	0	392	4
	(2)	970	955	0	1	0	885	69
	(3)	0	0	0	0	0	0	0
	(4)	171	190	0	0	0	178	12
2015	(1)	402	450	0	0	0	443	7
	(2)	853	877	0	1	0	798	78

		Claim for formal		trial		Claim for		Non-prosecution	Etc.
		Receipt	Total	Detained	Not detained	summary order			
	(3)	0	0	0	0	0		0	0
	(4)	123	153	0	0	0		153	0
2016	(1)	463	451	0	0	0		442	9
	(2)	885	881	0	2	0		811	68
	(3)	3	3	0	0	0		3	0
	(4)	165	157	0	2	0		144	11
2017	(1)	564	595	0	0	0		572	23
	(2)	1,017	1,043	0	1	0		923	119
	(3)	0	0	0	0	0		0	0
	(4)	103	124	0	1	0		112	11
2018	(1)	703	721	0	0	0		650	71
	(2)	1,021	1,051	0	2	0		911	138
	(3)	5	5	0	0	0		5	0
	(4)	119	122	0	1	0		117	4

Limits on Use of All-Night Interrogations

94. The KNPA prohibits all-night interrogations in the *Rules on Criminal Investigation*, a KNPA directive, to protect human rights under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The prosecutors also have enacted *Investigative Rul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MOJ Ordinance) on October 2019 which “prohibits investigations after 9 p.m. in principle” and allows such investigation only for exceptional cases when a “written request” by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and permission by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of the relevant prosecutors’ office is issued.

Remedies Provided for Victims of Criminal Torture Including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95. The Constitution and domestic laws guarantee the right to claim adequate compensation of the victims of torture or ill-treatment and the bereaved families, and accordingly, the victims or their families may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criminal compensation, crime victim relief fund, or civil damage compensation. Nonetheless, there are no official statistics on state compensation paid specifically to the victims of torture.

96. Under the procedure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hereinafter “CVPA”), the victims of criminal torture may be provided with financial support, including medical expenses, psychological treatment at the Smile Center, and legal aid. They may also receive litigation aid and primary legal counseling with Legal Home-Doctors dispatched across the nation. Nonetheless, there are no official statistics specifically on torture victims but on crime victims in general.

97. Furthermore, the Government selected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s for torture prevention and victim support” as part of its National Agenda. To that end, the MOJ commissioned research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n torture prevention and remedies, including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laws of foreign countries, and drafted the *Bill on Tortur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Torture Victims based thereon and plans to put forward the legislation procedure.

98. The Government commenced the project supporting professional treatment service for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struggling from mental and physical trauma caused by state violence in 2020. It conducted the commissioned *Research on the Measures to Establish the National State Violence Trauma Treatment Center* in 2019 and built the Center based on the result. As of 2020, it started the project supporting treatment for the elderly who urgently need treatment.

Independent Mechanism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99. The authority of the NHRC as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is explained in the last Periodic Report (CCPR/C/KOR/4, para.123). The statistics of relevant petitions received and proceeded by the NHRC between 2016 and September 2019 is shown in Appendix Table-17, 18.

100. The Human Rights Bureau of the MOJ is operat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 Reporting Center as mentioned in the last Periodic Report (CCPR/C/KOR/4, para.124). It conducts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when a human rights violation, including torture and ill-treatment, is suspected throughout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including a survey, on-site inspection, and intelligence collection, on various detention and protection facilities under the MOJ (prison, detention center,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immigration office, juvenile detention center,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etc.); and may take remedy measures, including requests for criminal investigation, disciplinary action, guiding the victims to state compensation and legal aid,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institutions, when an act of human rights violation is acknowledged.

101. Prosecutors' Offices at every level also have an Inspection Department or prosecutors in charge that investigate responsible public officials when ill-treatment occurs, which operates as an independent mechanism in no organizational or hierarchical relations with alleged perpetrators.

102. When acts of ill-treatment or torture (including mental harassment) is acknowledged, as Article 125 of the CrA stipulates the punishment on acts of cruelty, such acts are investigated by prosecutors and then indicted to the court. Such acts are also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pursuant to the applicable laws.

Comments on Report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t Centre for Protection of DPRK Defectors

103. Some civic groups had raised an allegation about suppressive inspection and solitary confinement in the process of temporary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remove any such risks, the Centre for Protection of DPRK Defectors (hereinafter "Centre") reformed the procedures by separating the criminal inspection department from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North Koreans in 2014, suspending the authority to inspect crimes from the investigator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installing an open investigation room, and removing the practice of staying in a single room.

104. In particular, since October 2014, the Centre has appointed external lawyers recommend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as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hereinafter "the officers"). With independency, they give advice on human rights protection of North Korean applicants for protection, and engage in human rights protection activi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employees of the Centre. To be specific, the officers inspect the investigation and living rooms in the Centre and deal with peti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raised by North Korean defectors. They also have the authority to meet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fter checking the suggestion box which can be opened only by them and to regularly talk with the defectors who applied for counseling. The authority and duties of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are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hereinafter “NKA”).

Issue 13

Measures Taken to Address and Prevent Human Rights Abuses in the Military

105. To prevent violence, sex offenses, ill-treatment, and others in the military, the Government amended the MCA in 2016 to punish violence and intimidation between soldiers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victim. The standard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violence and ill-treatment is newly established on March 29 to have stricter sanctions. Furthermore,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hereinafter “FAMS”) obligates training soldiers on human rights and the remedy procedure, etc. and stipulates the duty to report the case of violence or harsh treatment and the measure to protect the informant.

106. The MND has conducted mandatory training to prevent major types of violence since 2013. Training on gender awareness and equality has also strengthened and its completion is considered in promotions. It also established the *MND Gender Equality Committee* on September 2018, including external experts to raise gender awareness in the military. An Investigation on Sex Offenses in the Military was conducted in 2019 to diagnose the perception of soldiers, damage status, and needs for improved policies. And, more public officials specialized in addressing sexual violence were hired.

107. The Government selected the installation of the “Offic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Military” as part of its National Agenda, and is trying to launch the Office under the NHRC.

Statistics on Number of Complaints Received and Soldiers Detained in “Guardhouse”

108.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was amended to abolish detention in guardhouses in August 2020. The MND, accordingly, no longer detains people in guardhouses.

109. Statistics on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n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military and the status of guardhouse detention recently executed are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Statistics on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n Human Rights Violation in Military (period: 01/01/16-31/10/19 / Unit: case)

	Year	Complaints	Results of Complaints Proceeded
		Proceeded/Received	No. of Complaints Accepted (No. of Requests for Investigation/Disciplinary Action)
MND	2016	23/23	10(0/1)
	2017	24/24	15(0/2)
	2018	32/32	5(0/2)
	2019	12/12	1(0/0)
Army	2016	18/18	2(0/0)
	2017	25/25	5(0/0)
	2018	29/29	8(0/0)
	2019	30/31	6(0/1)

		Complaints	Results of Complaints Proceeded
	Year	Proceeded/Received (1 in proceedings)	No. of Complaints Accepted (No. of Requests for Investigation/Disciplinary Action)
Navy (Marine Corps. Included)	2016	3/3	3(0/0)
	2017	4/4	2(0/0)
	2018	7/7	3(0/2)
		9/10	
	2019	(1 in proceedings)	4(0/3)
Air Force	2016	11/11	1(0/0)
	2017	1/1	0
	2018	5/5	1(0/0)
		6/5	
	2019	(1 in proceedings)	2(0/0)

Table: Status of Guardhouse Detention in Past Five Years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rmy	13,696	11,910	10,185	8,468	6,666	3,765
Air Force	1,389	1,144	1,096	1,003	1,071	608
Navy	259	358	369	478	571	335
Total	15,344	13,412	11,650	9,949	8,308	4,708

Confidentiality of Complaints

110. Pursuant to the FAMS, the Government keeps the informant who files a report or petition confidential. A person who discloses the informant's personal information or any facts implying the informant's identity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No person shall give any job-related disadvantage, such as disciplinary measure, etc., to any informant by reason of the report, etc. The *Directive on Punishment against Soldiers and Civilian Military Employees* requires disciplinary action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in cases where a person violates the rules by giving the informant disadvantageous treatment, or disclosing his/her personal information.

Issue 14

Measures Taken to Prevent and Eradicate Trafficking in Persons

111. The Government striv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trafficking and labor exploitation, by having public institutions manage the overall process of employing immigrant workers. It provides employment education, including labor rights laws, before and after they arriv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m to recognize their rights as well as transl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through the Counseling Center for Foreign Workers and the Korea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44 centers). For effective monitoring, it increased 1,178 labor inspectors between 2017 and 2019 (see Appendix Table-19). They pre-select business places with higher potential to exploit labor of vulnerable persons and conduct labor inspections on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long work hours, violence, and minimum wage. When any violation is detected, employers face rigorous disposition, including criminal punishment. As a result, 22,574 and 26,082

places of business were inspected and a total of 58,692 and 70,009 violation cases were detected in 2017 and 2018, respectively.

112.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men granted with Art and Entertainment (E-6) visas, due to high concerns over possible trafficking, a joint crackdown group of ministries, including the KNPA, has conducted random inspection and crackdown on entertainment businesses where migrant entertainers are working. The MOJ, to prevent and eradicate trafficking against immigrants, not only with E-6 visa but under the Visa Exemption Agreement, operates the regular crackdown period on unlawful entertainment and massage businesses and illegal employment mediators. In November 2019, the Government signed an MOU with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to encourage orderly immigration, and intergovernmental efforts will be continued to address the issue by signing MOUs with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13. Furthermore, to address difficulties in recognizing trafficking cases caused by agencies, such as a performance organizer representing foreigners in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stay, the MOJ abolishes the provision on agency of administrative task. Also, the foreigner who visits the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period of stay is required to complete the list of indicators identifying the victims of trafficking and to check whether being covered by health insurance. The MOJ will step up the effort by distributing guidance on seeking a remedy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of related NGOs to immigrants who file for issue of visa, foreign registration, or an extension of period of stay.

Mechanisms to Identify and Support Victims of Trafficking

114. In the ROK, prostitution by the victims of sexual trafficking as well as compelled actions provided in Article 12 of the CrA is not punishable.

115. The prosecutors actively utilize the “Indicators of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published by the NHRC and the “Guidelines on Human Rights Protection of Victims of Prostitution” sponsored by the MOGEF in inspection of the crime of prostitution. It also provides collective education for prosecutors dedicated to women and children on criminal procedures and identifica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twice a year.

116. The Government supports foreign victims of sex trafficking to receive counseling, medical and legal services, residence, etc. Victims of trafficking who meet the requirements under the CVPA may receive financial support, including medical expenses, psychological treatment at the Smile Center, and legal aid from the KLAC. They may temporarily stay in a protection facility and victims in danger of retaliation may be given GPS trackers. For communication of foreign victims during the investigation or the immigration process, the Government provide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through Danuri Helpline and a person to accompany the victim to the investigation in trust.

117. Under the ImA, any public official that finds an undocumented resident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However, to prevent the situation where an undocumented foreigner cannot report criminal injury in fear of expulsion or where a crime occurs taking advantage of such a situation, the obligation to notify is exempted when remedying of an injury is deemed to be priority for the foreigner. Foreign victims of trafficking are also subject to the exemption. The Government expanded the scope of the rule to the whole officials and amende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ImA* to clarify the legal grounds therefor.

Definition of Trafficking and Measures Taken to Punish Perpetrators of Trafficking Appropriately

118. The ROK introduced the crime of comprehensive trafficking in persons in the CrA on April 5, 2013. The provision on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289) was newly inserted to implement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hereinafter “Palermo Protocol”), and considering that trafficking constitutes crimes against humanity, the provision on universality (Article 296-2) was also inserted to punish a foreigner who committed trafficking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OK. Meanwhile, the punishment on trafficking in children for the purpose of sex act is separately set forth in the APCY enforced in June 2013. The APST also stipulate punishment on forced prostitution and sexual trafficking.

119. Furthermore, in reflection of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on the narrow definition of trafficking under the CrA and insufficient punishment on perpetrators, the Government is preparing a draft of the “Act on Prevention of Traffic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It organized a taskforce led by the MOGEF in 2020 to draft the bill and will submit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after examining the definition of trafficking in the international norms, the protection for victims of trafficking including foreigners, and the needs to establish an inter-ministerial coordinating body.

120. Persons who committed trafficking have been strictly treated with detention in principle. The statistics on prosecution of trafficking criminals is shown in Table below:

Table: Status of Trafficking Cases (unit: person)

	<i>Receipt</i>	<i>Disposition</i>	Claim for formal trial		Claim for summary order	Non-prosecution	<i>Etc.</i>
			Detained	Not detained			
2015	468	487	81	76	0	150	180
2016	566	572	108	91	0	190	183
2017	452	416	78	65	3	121	149
2018	383	386	57	83	1	110	135
2019	395	406	50	72	0	116	168

Change in Employer under the EPS

121. When a migrant worker is, under social norms, not able to continue to work in the business on grounds not attributable to the worker, change in employer is permitted regardless of the number of times pursuant to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However, in other cases, a limit on change of workplace, to some extent, is inevitable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in which a visa is issued to a foreigner in assumption with an employment contract with a certain employer.

122.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roved the system by expanding the grounds for workers to change their employer and not to be counted as a change of busines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With such an improvement,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ho changed their employer has more than tripled (18,867 cases in 2016→51,913 cases in 2019). Especially in 2018 and 2019, the official notice on the *Reasons for Changes of Business Places Which is Not Attributable to Foreign Workers* was amended for three times to expand the scope of sexual harassment, sex offenses, and sexual violence (for specifics, see Appendix Table-20). However, allowing a change in employer without any limits may hinder

the fulfillment of the purpose of the EPS to supply foreign workers to the firms in difficulty hiring domestic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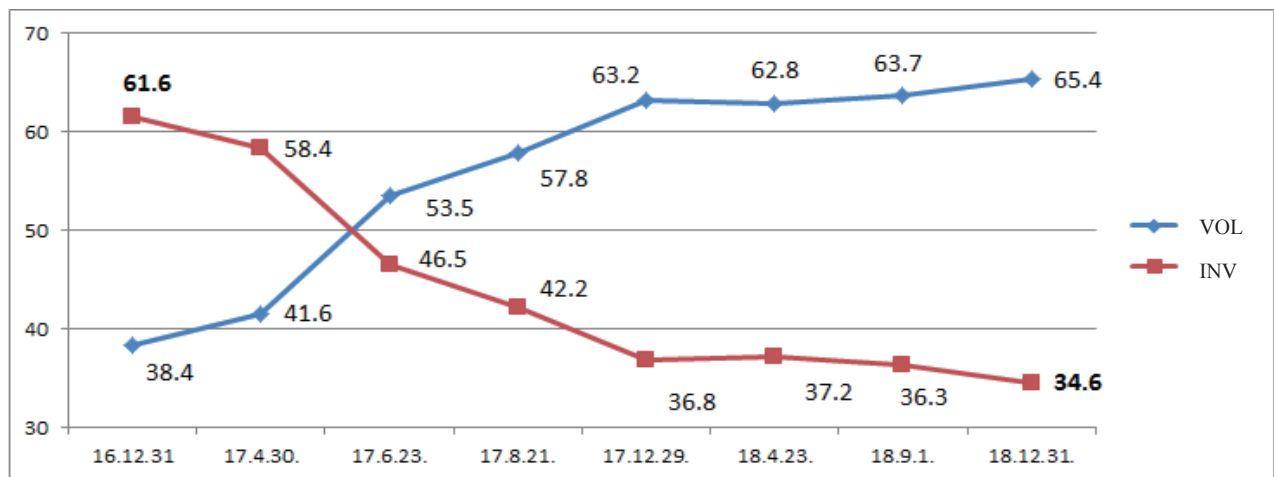
Issue 15

123. The Government wholly amended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16, improving the procedure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mental patients.

124. To strictly follow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system of diagnostic hospital admission for two weeks prior to hospitalization, and allows continuous hospitalization only where there is a consensus among two or more psychiatrists during the period of diagnostic admission on i) necessity for inpatient care and ii) necessity for hospitalization because the person is likely to harm his/her own health or safety or that of another.

125. It also introduced the system that a Committee for Examination on Legitimacy of Admission, comprised of legal professionals, psychiatrists, a mentally-ill person, and his/her family members, examines the legitimacy of hospitalization. The head of a psychiatric institution shall give notice to the Committee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hospitalization, and the Committee shall report its decision within one month. Under the amended Act, the investigators of the Committee may interview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face to face, upon request or by the power of the head of the committee, to better respect the will of the hospitalized.

126. The initial period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shall not exceed three months, and deliberation of a Mental Health Deliberation Committee, comprised of legal professionals, psychiatrists, a mentally-ill person, and his/her family members, is required to extend the hospitalization perio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Act on May 30, 2017, the ratio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mong the total in-patients in psychiatric institutions is changed as below. For detailed figures, see Appendix Table-23.



* Voluntary hospitalization refers to voluntary or consented admission to a hospital while involuntary hospitalization includes protective hospitalization (by legal guardians) or administrative hospitalization.

Issue 16

Steps Taken to Reduce Overcrowding and to Improve Detention Conditions in Police Cells

127. To address overcrowding, the MOJ is establishing and moving correctional facilities, remodeling underused places, and enlarging accommodating buildings. It also tries adjusting the classifi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located in major cities and scattering inmates to other provinces. It puts efforts to reduce overcrowding by giving more opportunities of parole to exemplary prisoners, socially marginalized persons (patients, the disabled, the elderly, etc.), and persons who committed a crime to make ends meet. As a result, the occupancy rate to capacity has diminished from 114.5% in 2019 to 113.8% in 2018. For better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with modernization of facilities from 2013, the living quarters of five out of the total eleven juvenile reformatories across the nation were rebuilt to house four or less people from the previous 10 to 15 people.

128. The KNPA has improved the accommodation environment of 34 detention rooms between 2013 and 2019. In 2018, it made restrooms at all detention rooms human rights-friendly, and in 2019, reception rooms for counsels were built. The applicable rules were revised to guarantee the right to meet and communicate with visitors and counselors and medical treatment at a hospital and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detainee protection officers.

129. The Government shut down all substitute cells of the police station which raised worries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ll the unconvicted inmates will be transferred to correctional facilities by 2020. A substitute cell is a short-term detention facility keeping unconvicted inmates within the police station when there exists no correctional facility within its jurisdiction and the human rights institutions including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have recommended its end. The Government has moved inmates at substitute cells to newly built correctional facilities and plans to transfer all the remaining inmates at four substitute cells within 2020.

Statistics on Number of Persons Who Have Died in Detention

130. The number of persons who have died in places of detention and the causes of death is as follows. When an inmate die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is ordered by prosecutors to take steps, including an autopsy. When the death of the inmate is attributable to the violation of duties of prison officers, the regional correction headquarters, a superior supervisory institute, implements on-site investigation on the deaths and what exactly the officers did on duty. For the last three years, out of 98 deaths in detention, an autopsy was performed for every case to clear up any doubts about the cause of death unless bereaved families refused to consent or doctors saw it unnecessary. Among which,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for 18 cases, including suicide, and for three cases in which unreasonable line of work was spotted, sanctions, such as discipline, were imposed on the officials.

Deaths in Detention (with Cause of Death) and Investigation Findings (unit: person)

Category	Total	Cause of Death	
		Disease	Suicide

Year		Subtotal	Cardiovascular	Digestive	Respiratory	Liver Disease	Cancer	Others (Infectious Disease, etc.)	de
2017	22	20	14		1	2	2	1	2
2018	40	33	22	1	2	1	1	6	7
2019	36	28	11		4	2	4	7	8

Use of Solitary Confinement and Protective Devices

131. According to the resolut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solitary confinement for up to 30 days is imposed based on the gravity of the violation, and when there are grounds for aggravation, up to 1/2 of the period may be increased. The MOJ is looking for ways to shorten the maximum perio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32. As for the use of protective devices, the requirements are strictly set in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hereinafter “CIIA”). Camcorders, body cameras, and other video equipment have to be used in principle when using protective devices or compulsory force. Article 18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requires the corrective institutions to record and review three times a day whether protective devices were used, and they are also obliged to observe and record the status of inmates wearing a protective device every hour.

133. Inmates may, when considering the use of solitary confinement or protective devices against them to be unlawful and unfair, take various steps to seek remedy by raising a complaint to the NHRC, a peti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an administrative trial, a state compensation, a criminal accusation, and others.

Issue 17

Detainee’s Access to Counsel

134. In the ROK, the right to counsel is guaranteed in any type of criminal investig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suspect is in custody, provided that it may exceptionally be limited when the counsel unlawfully hinders the investigation. The reasons for such limits are clearly specified in the *Rules on Access and Participation of Counsel* and the *Operating Guidelines on Participation of Counsel in Interrogation of a Suspect*, preventing any inappropriate exclusion of counsel.

135. The SPO amended the Operating Guidelines above in December 2017 to insert the provision under which counsel may raise an appeal against unfair interrogation during the interrogation, and enforced the *Guidelines on Meeting and Communicating of Counsel with Suspect, etc.* in May 2019 which thoroughly reiterate the counsel’s right to meet and communicate with detainees. In October 2019, it announced the measures mainly about minimizing the limits on participation of counsel in investigation, granting counsel opportunity to make a direct oral statement to prosecutors. Stipulating these measures, in November 2019, the *Operating Guidelines on Participation of Counsel in Interrogation and Investigation* (SPO’s Established Rules) was enforced. In January 2020,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Rules* (MOJ Ordinance) were revised to allow counsels to take notes without restriction during interrogation and to clarify the reasons to limit the participation of counsel as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n accomplice to an escape and damage to an important witness.

136. Especially for detainees,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whereas Article 84 of the CIIA regulates that a correctional officer may not take part in a meeting with counsel, and that time and frequency of the meeting shall be unlimited.

137. The Government submitted an amended bill of the *Legal Aid Act* and the CPA under which a court-appointed defense attorney is provided when minors, those of deaf and hard-of-hearing and the mentally and physically disabled or felony suspects convicted of capital punishment, life imprisonment or longer imprisonment than three years are arrested.

Rights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138. The investig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ereinafter “NIS”) is an administrative procedure to determine whether to protect and support them pursuant to the NKA, not for punishment. The Government deems temporary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not as forced detention since it may be commenced or ended on the free will of the defectors who applied for the protection.

139. Nevertheless, the NIS helps the defectors fully receive the assistance of legal experts in the process of temporary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by appointing external attorneys as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to monit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ensure the defectors in need of legal assistance to receive one-on-one counseling.

140. The Government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KA* in February 2018 to shorten the period of temporary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had been up to 180 days from their entry to “up to 90 days from their entry in principle.” The NGO report submitted to the Committee in June 2019 states that “even though the revisions reduced the maximum investigation period to three months, indefinite detention is still possible with no limit of the period for decision on protection” but this is not true. Upon the end of the temporary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at the NIS’s Centre, the defectors leave to the Hanawon operated by the MU. The determination on whether to protect North Korean defectors falls under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Unification, not the NIS, and is made while they are living in the Hanawon. Accordingly, upon the end of the temporary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they immediately start to live in the Hanawon, so indefinite protection is not possible. The actual period of temporary protection for the defectors is about 60 days on average.

141. Pursuant to the established NIS’s internal guidelines mandat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KA, North Korean defectors may contact their family members via phone call or meeting during the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Taken to Ensure that Review of Deportation Has Suspensive Effect Before North Korean Defectors are Deported to Third Countries

142. North Koreans who applied for temporar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NKA have never been deported to the third countries.

Issue 18

Improvement of Conditions of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and Regular Monitoring

143. F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foreigners under detention, an in-house physician regularly conducts medical consultations, and they are allowed to receive

external treatment if they want. Psychology counselors have been dispatched to three detention facilities since April 2019 (see Appendix Table-2). The foreign detainees can exercise outdoors, five times a week, and the *Donggam Program* offers various courses for mental relief (for the details of the Program, see Appendix Table-22). A certified hygienist manages the overall sanitary in the facility. The Government also allows foreigners to use a PC with Internet access at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from August 2018.

144. The NHRC may investigate claims of a human rights violation or a discriminatory act by its authority or by request of a detained foreigner, and may visit detention facilities and meet detainees any time if needed. The Human Rights Bureau of the MOJ also regularly inspects the detention facilities. Immigration and other detention facilities install a public telephone and provide contact information on the Embassies and on the remedy institutions. Some facilities also designate officials to help foreigners address their grievances such as overdue wages before they go back to their country. In particular, the Hwaseong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helps the detainees get paid by raising a petition directly or via a labor attorney to the MOEL and aids the remedy procedure afterwards including litigation.

Limit on Period of Immigration Detention

145. As of 2019, the detention period on average was 9.6 days, a decrease from 10.1 days. The following measures are taken to shorten the detention period. The procedure applied when the protection period of longer than three months which requires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was strengthened. Starting from 2020, a person with the authority to extend of detention period must have a direct meeting with a detainee and listen to the opinion of the detention facility. Whether to prolong the protection period of a foreign detainee for one year or longer shall be deliberated once agai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on Long-Term Immigration Detention including independent experts.

146. A temporary lift of detention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detention for a detained foreigner with humanitarian reasons such as illness, the need to collect debt, or to meet family memb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n MOJ Directive, the *Regulations on Processing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is undergoing amendment under which preferential consideration in the lift would be whether such detained foreigners are the elderly or minors who are eligible for special protection under the ImA. The Government will put more efforts to implement an alternative to detention for refugee applicants and litigation performers.

Detention of Children

147. Pursuant to the *Rules on Immigration Detention*, the Government strictly restricts the detention of children aged 14 and under and restrains the holding of those aged 18 and under as much as possible. It also prevents long-term detention even of those who are inevitably detained for a criminal offense through a regular meeting with a specially-designated public official, and inevitably detained children shall be given special care, including by designating a special room with subsidiary facilities. The period of detention is also minimized by temporarily lifting the detention of the child or the parent. The ImA is being revised to stipu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detention of criminal minors. The detention period of foreign children is shown in Table below:

Table: Status of foreign minors by detention period (unit: person)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54	70	55	78	69

	2015	2016	2017	2018	2019
One day or shorter	9	13	4	7	6
10 days or shorter	33	47	35	54	46
Between 11 and 20 days	7	6	12	16	9
Between 21 and 30 days	2	4	4	1	4
31 days or longer	3	-	-	-	4

* “One day or shorter” refers to the case where the detention is lifted right after the detention is imposed

* There exist some cases where those tried in violation of the criminal code are unavoidably detained for 31 days or longer

Waiting Facilities in Airports or Other Ports of Entry

148. There is no detention facility for foreigners, including refugee applicants at airports or other ports of entry, run by the Government. Nonetheless, there exist open facilities where foreigners who have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as their entry is rejected or who are awaiting a decision on their refugee status can stay for a while. Recently, a family who was not referred to the refugee status screening procedure had to stay at an airport for a long time, however, it cannot be said the State detained them at the airport as they failed to meet the legal requirements for entry and they did not make a departure even though they could depart to another country based on their will.

Issue 19

Measures Taken to Address Corruption in Judiciary

A. Strengthening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of Judges

149. The Court has the Inspector General for Judicial Ethics under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ereinafter “NCA”). The Inspector General supervises inspections and corruption prevention over the members of judiciary. To enhanc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inspection, the *Court Organization Act* was amended to openly recruit the Inspector General and to put the bureau directly under the Chief Justice.

150. The Court operates the Public Service Ethics Committee of Supreme Court (hereinafter “PEC”) and the Court Inspection Committee (hereinafter “CIC”) in which external committee members are included to secure objectivity, transparency, and neutrality. The PEC deliberates the cases related to judicial ethics referred by the Chief Justice, irregularities of judges, etc. The CIC deliberates the inspection cases drawing public attention including the cases of bribes, sex offenses, etc., and then, passes along the results to the persons entitled to request disciplinary action and recommends necessary actions.

B. Institution and Efforts to Strengthen Integrity

151. The judiciary institutionalizes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property, blind trust of stocks and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a retired person by relevant institutions to improve integrity of its members. It also continues its efforts to raise ethical awareness by offering education on occupational ethics and corruption prevention and provide guidelines and interpretation to judges and court public officials.

C . Measures against “Abuse of Authority of Judicial Administration”

152. The Prosecutors indicted 14 former and incumbent judges, including the former Chief Justice, in the case where judges of the NCA used trials as a means to negotiation with Cheong Wa Dae (Presidential Offic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while suppressing other judges opposed to them, thereby infringing judicial independence (hereinafter, “Judicial Power Abuse Case”), and the case is currently under review of the court.

153. In response to the Judicial Power Abuse Case, the new Chief Justice announced a public apology on May 31, 2018, imposed disciplinary action on eight judges on December 27, 2018 and requested additional disciplinary action on 10 current judges, including three chief judges of high courts and seven chief judges of district courts, on May 9, 2019.

154. The Court considers the cause of the Judicial Power Abuse Case that the Chief Justice could arbitrarily make decisions on judicial administration with no checks while judges unquestioningly accepted such a decision in a bureaucratic manner. Therefore, it revised its system to ensure that decisions on judicial administration are made transparently in a collegiate decision-making agency in participation of multiple judges and external figures and that judges do not work at a bureaucratic institute for the Chief Justice.

155. To be specific, it launched the “Judicial Development Committee” engaging multiple external figures to identify initiatives for reform, and requested the changes to the laws to implement the initiatives including establishing the Judicial Administration Council, a collegiate decision-making organization. In September 2019,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dvisory Council, a horizontal, standing advisory group on judicial administration was installed. And it officially recognized National Judicial Representative Forum comprising judges from local courts, thereby officializing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judicial administration. Efforts are also being made to have no more full-time employed judges at the NCA, a bureaucratic judicial administration institute, after 2023.

156. The scheme in which judges themselves recommend candidates for a chief judge has been adopted. The scope of disclosure of judgment documents is extended in pursuit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through proper monitoring on judicial action.

Measures Taken to Guarantee Independence of Judiciary and Right to Fair Trial and Due Process

157. The Constitution and the COA guarantee the independent status of judges as explained in the Third Periodic Report (CCPR/C/KOR/2005/3, paras.43).

158. The Government’s efforts and the mechanisms of court-appointed defense attorney, application for an adjudication, reopening of proceedings, etc. to protect the right to a fair trial are stated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CCPR/C/68/Add.1, paras. 198-214; CCPR/C/114/Add.1, paras. 43, 153; CCPR/C/KOR/2005/3, paras. 231~239).

159. Maj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guarantee a fair trial have been made since 2015 as follows: i) in 2015, the Regulation on Criminal Procedure was amended to provide grounds for criminal victims to freely make statements on the case orally or in writing; and ii) with the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tatement-assistance system to help the socially marginalized go through litigation was adopted to realize *Prinzip der Parteigleichheit*.

Impact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Other Anti-Corruption Measures

160.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ereinafter “ISGA”) enforced in September 2016 has made the country take a step forward in transparency.

161. The purpose of the ISGA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etc.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hibiting any improper solicitation made to public officials, etc. and by prohibiting public servant, etc. from receiving money, goods, etc.

162. The updated result of the survey on integrity condu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ereinafter “ACRC”) shows that the enforcement of the ISGA substantially curtailed the practice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s the rates of corruption experience was reduced (1.8% in 2016 → 0.5% in 2019). According to another survey in 2018, 70.7 percent of entrepreneurs evaluated that the ISGA also makes positive effects on corporate culture. The result shows that the SMEs has been reducing unnecessary expenses for offering recreation, etc. to authorities, and increasing expenses needed for sales increase after the ISGA enforcement.

163. The ACRC’s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ISGA in 2019, 87.7% of the general public saw the ISGA improving social awareness and practices. 79.5% responded that they now perceive offering and receiving solicitation, entertainment, or gifts of public servants, which had been standard practice, as an “improper act.” Most of the public servants answered that they clearly perceive the impacts of the ISGA on anti-corruption from reduced solicitation and expenses for food, gifts, and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in connection with their duties.

164. In addition to the ISGA, the Government implements various policies to prevent corruption. While the ISGA prevents impediment to fairness of public duties by the private sector,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Servants amended in April 2018 expressly prohibits improper solicitation of a public servant to a civilian. This intends to root out a public servant’s act that seeks advantage of his/her status and authority. The Government also prepares for the enactment of the *Interest Conflict Prevention Act for Public Servants* including eight code of conducts to prevent public servants from seeking private interests.

165. In the meantime,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hereinafter “PSEA”) amended in March 2015 strengthened the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a retired public servant as follows: i) the period of employment restriction of a retired public servant is extended from two to three years after his/her retirement, ii) senior executive public servants is restricted from being employed by corporates relevant to any duties of the organization he/she belonged to, which is expanded from the duties of the department the person has been affiliated to, and iii) senior executive public servants shall openly report the employment history for ten years from his/her retirement. Furthermore, the PSEA amended in December 2019 (to be enforced in June 2020) allowed each organization to restrict high-level officials in a department likely to involve conflicts of interest from acquiring stocks of relevant companies. Additionally, when a retiree makes solicitation to an incumbent public servant, not only the recipient but also anyone with knowledge of the fact may report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Issue 20

166. National investigators, including the NIS, prosecutors, and the police, are executing telecommunications investigations under strict requirements in the PCSA. Before performing wiretapping, 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agencies are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from district courts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in cases for

national security, they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high courts, and when the concerned party is a foreign national, obtain approval from the President. Upon the request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agencies shall file a report on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were permitted, approved, implemented, or notified, while the National Assembly may conduct on-the-spot inspection of wiretapping facilities. Persons who conducted illegal wiretapp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rom one to ten years.

167. User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to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only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harm to a trial, an investigation,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r national security,” and is being collected proportionally to the minimum extent only when it is inevitable to find a clue at the initial stage of investigation or to specify a suspect. The provision of user information is monitored as telecom businesses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wice a year, and the Ministry reviews the report and their data management practices.

168. The Government enforced the amended PCSA in December 2019, which now i) restricts the total period of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no limit → one year), ii) allows investigation of base stations only as a last resort when it is otherwise impractica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such as preventing the execution of a crime, arresting the criminal, or collecting the evidence, iii) expands the scope of notification to the information holder (no notification when charges dropped or during investigation → notification), and iv) grants information holders the authority to apply for notification about the grounds of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This raised transparency of telecommunications investigation and strengthened the supervisory system over investigators. The amended PCSA for stricter control over packet wiretapping (under which investigators may store and use acquired materials given approval from the court) was enforced in March 2020.

Issue 21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Who Remain in Prison

169.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on November 1, 2018, all the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released on parole by February 28, 2019. As of November 2019, no persons are imprisoned for conscientious objection.

Expunction of Criminal Records and Compensation

170. The Government has taken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expunging criminal records under the applicable laws such as the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When a case is finalized with acquittal, the suspect may claim compensation for the detention period against the Government and apply for the announcement on the intent of the not guilty decision to restore his impaired reputation via Internet, etc.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in the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171. The Government granted 1,879 conscientious objectors a special parole by exempting one on parole from executing the rest of the punishment, releasing 1,878 from disqualification for appointment as an executive or a public official.

Progress in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172.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on Article 5 Categories of Military Service of the MSA which does not stipulate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original court’s decision which had found conscientious objectors guilty with it

interpreting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justifiable ground” for military objections on November 1, 2018.

173.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MND prepared a measure of alternative service for 36 month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of which working condi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military but where persons are not obliged to take up arms. The period of 36 months was set as the same with the period for others subject to alternative service, such as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public health doctors, etc. who require 34-36 months. The Act on the Assignment and Performance of the Alternative Service was enforced in June 2020.

No Public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174.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of military service dodgers from July 2015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in the MSA, however, it no longer discloses the list of conscientious objectors.

Issue 22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175. Decriminalizing defamation and abolishing imprisonment for relevant cases need to be carefully reviewed comprehensively considering not only freedom of expression but a potential risk to the victim’s rights as the crime of defamation serves as a restriction against defaming a person by alleging his/her personal information, i.e., criminal record, and damaging his/her daily life and thereby functions to protect privacy of victims. And when the alleged facts are correct and for public good, the accused is not punished under the CrA to resp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several bills were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improvement, the Government will support the legislative discussion on defamation considering freedom of speech, a possible gap in victim protection, foreign legislations,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176. To prevent indiscriminate accusation for defamation, the Prosecutors have a system to dismiss a case without investigation when the suspicion at issue is not worth being punished. And when investigating a case where a victim of a sex offense is accused for defamation, considering that such an accusation causes secondary damage on the victim and psychological pressure thereby disrupts his/her statement of damage, the SPO ordered each office to meticulously review whether a behavior of alleging facts about his/her damage constitutes the grounds for justification (Article 310 of the CrA), for sex offense cases related to the Me Too movement.

Comment on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Reports of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under the Act

177.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ecognize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necessity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hereinafter “NSA”). The NSA includes the element of crime that “with the knowledge of the fact that it may endanger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and is applied only to the cases “with a clear risk that actually damages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precedent of the court.

178. Article 1(2) of the NSA stipulates the principle of strict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by prohibiting an overly-broad interpretation thereof. Based on the Act and the precedents (CCPR/C/KOR/4, paras. 286-287), the Government protects the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publication to the most extent and prevents the occurrence of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by limitedly applying the act only

when there is a “clear risk that actually damages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Indeed, the number of cases indicted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NSA was 40 in 2015, 17 in 2016, 14 in 2017, 3 in 2018 and 3 in 2019, a 92.5% decrease for the last five years.

Issue 23

Withdrawal of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Covenant and Guarantee of Labor Force including Public Officials to Join Trade Unions

179. The Government seeks to address the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public officials, teachers, etc. to join trade unions under domestic laws, which hindered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180. The Government enacted and has enforce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Unions (hereinafter “APOU”)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eachers’ Unions (hereinafter “ATU”) as special acts, in reflection of the fact that public officials are in a special position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and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on th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The APOU and the ATU have not been applied to (i) public officials in grade 5 or higher, most of whom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employers, (ii) fire officers who perform duties directly linked to the lives of persons and are specially required to be under a strict order, and (iii) the fired,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or teachers in active duty, without working condition to be improved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181. Nonetheless, the Government selected the ratification of the ILO Convention as National Agenda in 2017, and sought to revise the laws to ratify the Convent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Nos. 87 and 98).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hereinafter “ESLC”), comprised of the Government, management, and labor, led a social discussion between July 2018 and May 2019. The Government submitted the agreement on the ratification of the ILO Conven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APOU and the ATU to the National Assembly in October 2019. The aforesaid amendments, mainly about fulfilling the right to assembly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allows retired public officials, fire officers, and college faculty to join unions and deletes the restriction on joining union based on public officials’ ranks. As a result, the ATU was amended to allow college faculty to establish and join unions.

Measures Taken to Enable All Sectors of Labor Force to Join Trade Unions and to Remove Any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of Trade Unions

182. The Government drafted a bill that enables the unemployed and the fired from private companies to join labor un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October 2019. It also tries to protect labor rights of specially employed workers, e.g., gig workers, who have not corresponded to the legal concept of workers as one of the National Agenda. The Government issued a certificate of establishment to the labor union of delivery service workers, a typical example of the specially employed, twice in November 2017 and February 2018, and also issued the one to the union of workers who provide water purifier installation service in April 2019. The ESLC will continue discussion on improving labor rights of specially employed workers.

183. In the meantime, the labor rights of foreign workers are also protected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their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foreign workers, regardless of their visa status, may establish or join a labor union in 2015, and the Government accordingly issued a certificate of establishment for a labor union comprised of migrant workers in August 2015. As

of now, various migrants' trade unions including the 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Trade Union, the Migrants' Trade Union and the Migrants' Construction Trade Union are actively operating.

Issue 24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184. Basically, a political party shall be assessed from election by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but the Government may bring an action against i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the political party infringe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Article 8(4), Article 89, subparagraph 14 of the Constitution). Regarding such an a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even if all requirements are fulfilled, a decision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 could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only where there is no alternative means, and where social benefits that could be gained through such a decision exceed the disadvantage incurred by the decision to dissolve the political party. As such, the ROK has the institution under which a political party may be dissolved only as an exceptional and last-resort means, and of which process fully reflec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ohibition of Teachers' Union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y

185. As teachers are required to seek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performing their duties, the Constitution and laws stipulat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eachers. Considering that teachers' political partiality may affect the right to education of students, as well as their collectiv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 may have a great ripple effect, fully allowing political activities of teachers' unions may disrupt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Denying of Right to Vote to Persons Sentenced to Imprisonment

186.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reinafter "POEA") disfranchises a person who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prison labor for at least one year but whose sentence execution has not been terminated nor decided to be exempted.

187. The current POEA only temporarily restricts the right to vote only for thos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t least a year. The provision was improved as the current one in 2015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decided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on the former POEA which had completely and uniformly restricted the right to vote of prisoners, through a thorough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It also needs to be considered that the judges in the ROK decides a term of imprisonment strictly grounded on the laws and the Sentencing Guidelines deliberated by the independent Sentencing Commission. Thus, the Government observes that the current POEA, which only temporarily restricts the right to vote based on the sentence, has reasonable grounds and is deemed not as an unjustifiable restriction.

188.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ontinues to pay attention to the recommendations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will submit an amendment opinion of the POEA, if necessary.

Denying the Right to Vote to Persons Sentenc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189. According to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e right to vote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custody terminates. To observe whether such a restriction is justifiable, it shall be noted that the persons sentenc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e those who had

committed a felony and were sentenced to the disposition given their mental abnormalities. However the MOJ understands that the view that restoring their right to vote may help their return to society has its reason, and sees the necessity of an in-depth discussion.

Issue 25

Training of Riot Police

190. A four- to ten-week “intensive training” period is designated, each half year, to train all police units in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safety to simulation training for on-site response, step by step. The human rights and safety education is provided by external lawyers and the NHRC’s investigators invited as lecturers. The simulation training is a discussion-based course during which unit members work on response methods over a set situation for themselves and draw the legal grounds and limits thereof. Apart from the intensive training, each unit is repeatedly given human rights and safety education about 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scene of demonstrations and exercise of an appropriate level of force i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teps Taken to Amend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o Ensure Compliance with Article 21 of the Covenant

191.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May 30, 2016-May 29, 2020), 22 amendment bill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ereinafter “ADA”) were proposed to balanc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public security. In May 2020,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ed Act which no longer prohibits a protest near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all levels of courts but secures it unless it impedes the function and role of such institutions.

192. Along with the amendment, the police minimizes the issue of banning demonstrations even if the report thereon contains a flaw, but instead considers a notice of supplementation or restriction first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ssembly to the fullest. As a result, the demonstrations issued with a banning notice in 2018 account for as few as 0.01% of the reports, while six out of nine cases were notified with the ban just because two or more demonstrations were reported to be held at the same time and same place, so the ones reported later were banned. As for an assembly at night, no demonstration has been banned or restricted just for the reason being held at night since January 2017.

Right to Peaceful Assembly of LGBTI Persons

193. As a citizen of the ROK, LGBTI persons equally enjoy the right to assembl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ovenant. The police supported the Queer Culture Festival to be unfolded peacefully by mobilizing its force and equipment against the opposition of some groups. While a conflict with an opposition group confused the First Incheon Queer Culture Festival held in 2018, the Second Festival was successfully held thanks to the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s including the Incheon Police Agency and regional human rights group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cooperated with the Jeju Queer Culture Festival to be permitted to report an assembly without causing a potential conflict and to use a place therefor since 2017.

Regulations on Use of Force by Police and Investigation into Death of Farmer Baek Nam-Gi

194. For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human rights, the *Regulations on the Standards for Using Dangerous Police Equipment* were amended in January 2020. The amendment strictly specified the requirements for the deployment and use of a water cannon so that it would be no longer used in the scen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only used in the face of urgent danger, such as civil unrest or direct attack on the nation's important facilities, and at the behest of a commissioner of district police agency. And it also strengthened the standard for water pressure by distance.

195. The prosecutors considered the case where farmer Baek Nam-Gi took a direct hit from the water cannon, fatally injured and died on November 14, 2015 to be an abuse of public power that seriously damaged a citizen by violating the operation guidance of a water cannon and neglecting the relevant order and supervision, and indicted the former commissioner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e former chief of Seoul's fourth riot battalion and two officers who operated the water cannon trucks for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n October 17, 2017. All the defendants were convicted in the second trial on August 9, 2019. The former commissioner appealed on August 13, 2019 and the Supreme Court proceeding is currently in progress, while the rest of the defendants are finalized with conviction.

196. A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that the bereaved family of farmer Baek Nam-Gi filed against the Government was finalized with the ruling of recommending a compromise on January 22, 2018, and the Government paid the bereaved family with KRW 490 million (about USD 410,000) as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cluding the solatium.

Measures Taken to Ensure that Organizers of or Participants in Demonstrations, in Particular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Criminalized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197. The SPO guarantees a peaceful assembly and only addresses unlawful and violent collective behavior. It listens to the general public even when investigating unlawful and violent actions by heeding to the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comprised of local citizens. Meanwhile, the KPNA shifted its paradigm of police administration from "crowd control"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assembly" and is deeming a demonstration of which registration or progress has a minor flaw to be a peaceful one.

Issue 26

Statistics on Number of Refugee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Stateless Persons

198. Statistics on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refugee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s of the end of December 2019 is as follows:

<i>Recognition (Protection)</i>						
<i>Year</i>	<i>Application</i>	<i>Subtotal</i>	<i>Recognition</i>	<i>Humanitarian stay</i>	<i>Non-recognition</i>	<i>Withdrawal</i>
1994~2019	64,358	3,239	1,022	2,217	25,351	10,184

199. The number of stateless persons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s 166 in total as of the end of February 2020, and the statistics thereon is broken down as follows:

(unit: person)

	Total	Non- renouncement of original nationality after naturalization	Statelessness when arrived	Revocation of nationality	Overseas Chinese who escaped from the North	Refugees who came to the South	Others
Long-term stay (long-term visa for at least 91 days: foreign registration)	105	19	29	29	11	10	7
Short-term stay (short-term visa for up to 90 days: non-registered)	61						
				Entry with tourism (B-2) or short-term visit (C-3)			

Measures Taken to Combat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200.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which amount to crimes being punishabl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ISPs regarding spread of such speech are the same as the answer to ISSUE 06. The fact that the KCSC deliberates and corrects broadcast program or online speech that incite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corresponds to the answer to ISSUE 05. Meanwhile, in June 2020, the NHRC recommended the enactment of an *Equality Act*, which prohibits a labeling or an advertisement which expresses or incites hatred and discrimination caus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suffering. The Government will support relevant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201. Article 18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for taking necessary measures such as education and promotion to make sure that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been committed to addressing discrimination and hatred through better understanding of foreigners by producing and distributing videos on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creating educational content for mutual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ulture and educating public officials. The government is celebrating the legally designated "Together Day" through national and local events.

Measures to Ensure Access to Documentation and Basic Services

202. The Government's plan to introduce a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elaborated in the answer to ISSUE 27.

203. Refugee applicants are eligible for subsidization of living costs and provision of education and residential facilities during refugee screening. Living costs are granted, within the assigned budget, mainly to the vulnerable in consideration of income, assets, whether being with a child or pregnant and whether having a serious disease, for up to six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their refugee application. Pursuant to the *Refugee Act* (hereinafter "ReA"), they may be given basic medical examination and if needed costs for emergency medical support.

204. Recognized refugees are granted social security services and basic living security pursuant to the ReA. "Refugees desiring re-settlement" who had stayed at an overseas refugee camp and desired to settl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entered thereto recommended by the UNHCR may join an immigration center for up to six months after their arrival and receive early settlement support, including education on the Korean language, vocational training, and a medical examination.

205. Especially for educa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SEA* includes grounds for admission to school to ensure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or immigrant status, have access to education. For their earlier adaptation, Korean language classes (326 classes in 2019) are operated for intensive courses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hile college students' mentorship programs (4,309 persons in 2018) help them develop basic academic skills. All schools are recommended to provid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t least two hours a year to encourage students to embrace multiculturalism and policy schools (643 schools as of 2019) incorporate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ir curriculum for its further expansion. The number of teachers who completed training on multicultural education reached as much as 133,794 as of 2018.

Rights Afforded to Non-Citizens in Amendment Bill of Constitution

206. The *Amendment Bill of Constitution* proposed by the President of the ROK in March 2018 expanded the scope of the holder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from "citizens" to "persons." Accordingly,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was changed from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o "basic rights and duties," and the subject to human dignity,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the right to equality, the right to liberty, the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and collective punishment,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academic, and artistic freedom, the right to petition, and the right to justice was also changed from "citizens" to "persons." In addition, the grounds fo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which has only been recognized upon interpretation, "race" is explicitly stipulated by adding "disability, age, race, and region" to the existing grounds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207. The amendment bill above was presented to the plenary session in May 2018 but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take a vote thereon due to a lack of quorum.

Information on Draft Amendment Proposal of ReA and Measures Taken to Improv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208. As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is rapidly increasing, the Government endeavors to establish a system satisfying international norms. The number of refugee officers was increased from as few as 18 in 2015 to 91 in 2019. I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HCR Representative in the ROK, the Government continues to provide capacity building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interview. There are 173 interpreters for 24 languages with a specific qualification to support refugees in the course of interview, and the interpreters are educated on the procedure of recognizing refugees and practice of refugee interpretation, and are required to take continuing education at least once during the period of service (three years). The Government also seeks to amend the ReA to repair its defects in the enforcement based on opinions of experts and research on foreign cases.

Issue 27

209. The Government is currently preparing for the legislation to introduce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The MOJ held a forum to introduce such a system in participation of independent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November 2018. In December 2018, it launched an advisory grou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comprising eight external experts including attorneys-at-law and professors, and had ten meetings. At the meetings, they discussed the subject o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the measure to introduce it, necessary documents and procedure, and the way to apply therefor, and now the bill is being drafted. The finalized bill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210. Meanwhile, the Government publicly announced in May 2019 that it would introduce a "birth notification system" under which a Government agency is

notified of childbirth information by medical institutions to strengthen capacity to identify and protect children at risk.

Appendix

<Table-1: Status of public rental housing related to single-parent families by year (2016~2019)>

(unit: house, %)

Type		Total	2015	2016	2017	2018	2019
Lease on a deposit basis	Total*	202,489	35,509	37,848	38,573	53,126	37,433
	Single-parent families	19,431	4,873	3,393	2,720	4,317	4,128
	Contract rate	10%	14%	9%	7%	8%	11%
Buy-to-rent	Total	68,582	10,315	13,466	15,079	14,861	14,861
	Single-parent families	5,703	1,390	1,452	1,148	1,001	712
	Contract rate	8.3	13.5	9.8	7.6	6.7	4.8
National rental	Total	81,035	25,958	26,842	7,366	9,554	11,315
	Single-parent families	1,988	202	412	181	272	921
	Contract rate	2.5	0.8	1.5	2.5	2.8	8.1
Permanent rental	Total	12,832	3,572	3,624	1,866	1,962	1,808
	Single-parent families	552	139	256	98	58	1
	Contract rate	4.3	3.9	7.1	5.3	3.0	0.1
5□10-year public rental**	Total	70,102	19,244	22,063	14,390	13,358	1,047
	Single-parent families	118	3	59	28	28	0
	Contract rate	0.17	0.01	0.27	0.19	0.21	-

*The number of contracts newly concluded each year

**5□10-year build-to-rent public housing specially supplied to single-parent families under the *Rules on Housing Supply* amended and enforced in 2015.

<Table-2: Petitions received on workplace harassment by sector (as of March 2020)>

Business segment (top 5)			Size of business			Type (top 5)		
Business segment	No. of petitions	Rate (%)	No. of employees	No. of petitions	Rate (%)	Type	No. of petitions	Rate (%)
Manufacturing	607	18.1	Fewer than 50	1,923	57.5	Verbal abuse	1,638	48.9
Management of business facilities	492	14.7	50~99	398	11.9	Unfair personnel transfer	912	27.2
Health, social, welfare service	472	14.1	100~299	424	12.7	Bullying, slandering	456	13.7
Wholesale and retail	353	10.5	300 or more	602	18.0	No provision of duties	115	3.4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265	7.9	-	-	-	Coercion	113	3.4

<Table-3: Petitions processed on workplace harassment (as of March 2020) >

Receipt	Processing	Administrative closure				
		Subtotal	Withdrawal	Guidance for improvement ¹⁾	Referral to prosecutors ²⁾	Others ³⁾
3,347	608	2,739	495	22	1,312	910

1) To conduct an investigation and guide to take a proper measure

2) Accusations and cases reported for unfair treatment against a victim

3) Administrative closure of the petitions for the cases occurred prior to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Act or in places of busines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Table-4: Statistics of deliberation and requests for correction on discriminatory, degrading, cruel, hate and insulting expressions by KCSC>

(unit: case)

Violation	2016		2017		2018		2019		Mar. 2020		Total	
	(1)	(2)	(1)	(2)	(1)	(2)	(1)	(2)	(1)	(2)	(1)	(2)
Discriminatory, degrading exp.	3,022	2,455	1,356	1,166	2,638	2,352	1,886	1,406	273	201	9,175	7,580
Cruel, hate exp.	683	314	301	109	383	159	577	40	144	17	2,088	639
Insulting exp.	923	734	835	774	1,583	1,389	842	761	194	192	4,377	3,850
Total	4,628	3,503	2,492	2,049	4,604	3,900	3,305	2,207	611	410	15,640	12,069

(1) deliberation; (2) requests for correction

* Statistics of deliberation and requests for correction on discriminatory and hate expressions against a certain race and ethnicity are not under management

<Table-5: Fema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tal (a+b)			Constituency (a)			Non-constituency (b)		
	Total	Women	Rate	Total	Women	Rate	Total	Women	Rate
16th NA (2000)	273	16	5.9	227	5	2.2	46	11	23.9
17th NA (2004)	299	39	13.0	243	10	4.1	56	29	51.8
18th NA (2008)	299	41	13.7	245	14	5.7	54	27	50.0
19th NA (2012)	300	47	15.7	246	19	7.7	54	28	51.9
20th NA (2016)	300	51	17.0	253	26	10.2	47	25	53.1

*Sourc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Election Statistics*

<Table-6: Prosecutors' response to crimes against women (2016~2019)>

Year	Action
2016	Launched and operated a taskforce to respond to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Feb.~Jul. 2016)
	Held a joint workshop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to respond to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Mar. 2016)
2017	Held a joint workshop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to respond to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Apr. 2017)
	Launched and operated a taskforce to reform the investigation manual for sex offenses (May 2017)
	Ordered to comply with the strengthened "standards for processing cases" of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Aug. 2017)
	Ordered to comply with the strengthened "standards for processing cases" of persons who committed a crime of secretly taking and distributing photographs (Aug. 2017)
	Amended the guidelines and reformed the investigation manual following the amendment to the SASC (Dec. 2017)
2018	Distributed the <i>Investigation Manual on Sex Offenses</i> to prosecutors' offices and ordered to stick to the strengthened standards for processing cases (Feb. 2018)
	Identified the status of prosecutors specialized in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distributed important guidelines and ordered to strictly respond to the relevant crimes (Feb. 2018)
	Held a seminar for chief prosecutors investigating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at prosecutors' offices across the country (Mar. 2018)
	Amended the investigation manual on sex offenses and ordered to closely review the application of the grounds for justification when investigating crimes of defamation by alleging facts (May 2018)

	2018)
	Launched and operated a taskforce for research on acquittal of sex offenses, etc. (May 2018)
	Held briefing sessions by the criminal chief prosecutor at women and children's advocates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Seoul Crisis Intervention Center for Women and Children,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Sep.~Nov. 2018)
	Held a joint workshop with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specialized in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such as sex offense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Nov. 2018)
	Signed an MOU between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SPO and held a forum (Dec. 2018)
	Amended the standards for processing cases of sexual intercourse and harassment by the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and shooting and circulating photos, etc. (Dec. 2018)
2019	Held a teleconference for chief prosecutors specialized in cases involving women and children across the nation (Feb. 2019)
	Designated prosecutors devoted to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and reviewed the investigation system such as sending manuals (Mar., Aug. 2019)
	Provided targeted education for prosecutors devoted to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Mar. 2019)
	Ordered to strengthen the standards for processing cases of sex crimes in absolute obedience relationships (Jun. 2019)
	Amended the guidelines on processing sex offense cases and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victims (Jul. 2019)
	Held a joint forum of the SPO and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Jul. 2019)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 analysis on acquittal cases of sex offenses and child abuse (Aug. 2019)
	Provided 2019 targeted education on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Oct. 2019)
	Held a teleconference for chief prosecutors specialized in cases involving women and children (Oct. 2019)
	Published the result of joint research on women and children by the SPO and th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Nov. 2019)
	Ordered to strictly respond to cases of illegal photo shooting and circulating (Nov. 2019)
2020	Distributed the manual (work guidelines, etc.) for prosecutors designated to be responsible for crimes including sex offenses, etc. against women and children (Mar. 2020)
	Ordered to strictly respond to cases including circulation of unlawfully taken videos of sexual exploitation (Mar. 2020)
	Held a teleconference for chief prosecutors specialized in cases involving women and children across the nation (Mar. 2020)
	Launched a team investigating persons who committed the crime of taking unlawful videos of sexual exploitation at 18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and six large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Mar. 2020)
	Amended and enforced the standards for processing crimes of videos of sexual exploitation (Apr. 2020)

<Table-7: Details and improvement of *Preventive Measure against Domestic Violence*>

	Before improvement	After improvement
Protection of safety and human rights of victims	Isolation between a perpetrator and a victim is difficult as an emergency measure only allows their separation	As the type subject to the measure now includes a "caught in the act," a perpetrator shall be quickly separated from a victim
	The violation of an emergency and temporary measure is subject only to an administrative	A perpetrator may be detained in a detention facility under the improved measure to raise

	fine, which leads to low effectiveness of such a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an emergency and temporary measure
	A victim is notified of being able to apply for a temporary measure when an emergency measure is taken	A victim is notified of being able to apply for an order for victim protection and a measure for physical safety
	A person entitled to request a (emergency) temporary measure shall be the victim and the legal representative	The family members of a victim may also be protected
	An administrative fine shall be imposed upon the violation of a temporary measure	A stricter restriction including imprisonment and fine shall be imposed
	A restraining order under a (emergency) temporary measure shall be based on a place	The order shall be based on a person
	A victim protection order shall include an isolation such as eviction, a restraining order (of telecommunication) and a restriction on exercise of parental rights	A restriction on the right to visit their child is added
	The period of a victim protection order shall be up to six months, or up to two years in total when it is prolonged or changed	The period is changed into up to one year, or up to three years in total when it is prolonged or changed
	There exists internal guidelines which need to be specified	The guidelines on processing crimes by type and stage are prepared
	A table for investigating changes of repeated crimes is not utilized well	Its own improvement measure to encourage its use is prepared; investigation items and follow-up measures are improved
	The reporting records in the 112 system shall be stored for one year	The reporting records shall be connected with the APO system; the period for storage is extended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gainst perpetrators and prevention of repeated crimes	No relevant regulation	The regulation on concurrent imposition of an order to attend and complete a course in case of conviction is newly inserted
	No relevant regulation	When not implementing an order to attend and complete a course, a perpetrator shall face cancell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and criminal punishment, respectively
	Suspension of prosecution on the condition of counseling may be decided when needed for behavioral correction *under the guidelines, it may be applied to not-that-serious cases	(After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the system would be improved with the amendment to the guidelines under which cases of serious domestic violence and with higher chance of repeated crimes shall be excluded from the subject
	(Type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ntrusion upon habitation, etc. shall not be included	The crimes provided in Article 319 (intrusion upon habitation, refusal to leave), Article 320 (special intrusion upon human habitation), Article 322 (attempts) of the CrA and Article 14 (taking photographs by using cameras) of the SASC are added
	No relevant regulation	“Counseling at a counseling office, etc.” is newly inserted to the types of a temporary measure
Support for victims	On-site counseling, etc. is not provided well due to lack of manpower at 1366 and a counseling office for domestic violence	The quality of on-site counseling and case management is improved by expanding manpower
	All the facilities for protect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e operated in secret	The operation model shall be diversified
	No relevant project	A independence-supporting program shall be operated in association with the Career

		Development Center for Career Interrupted Women, etc.
	When restricted to inspect resident registration and to receive certified and abridged copies, a victim may be recognized with documents on using a counseling office for domestic violence and a protection facility but not the 1366 center	The documents of using the 1366 center shall be recognized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Rules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No relevant project	The introduction booklet on support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s produced and distributed; the cases of secondary damage related to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included in the course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to foster professional instructors
	No relevant project	A counseling office for migrant women victimized by violence is newly established

<Table-8: Results of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offices >

(unit: case, %)

Year	Total	Domestic violence	Others								
			Subtotal	Divorce	Marital conflict	Family affairs	Sex offenses	Prostitution	Sex counseling	Addition	Others*
2017	317,936	171,975	145,961	21,005	24,865	24,636	26,112	339	3,428	2,831	42,745
	100%	54%	46%	7%	8%	8%	8%	0.1%	1%	1%	13%
2018	394,192	219,459	174,733	21,299	28,968	27,735	41,885	739	3,829	3,241	47,037
	100%	55.7%	44.3%	5.4%	7.3%	7%	10.6%	0.2%	1%	0.8%	11.9%

* Include stalking and dating abuse since 2018

<Table-9: Status of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unit: facility, person)

Year	No. of facilities	No. of persons staying therein	No. of regular workers (person)		
			Total	Counselor	Non-regular volunteers
2017	66	1,108	308	272	36
2018	66	1,078	332	292	40

<Table-10: Results of support by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unit: case, %)

Year	Total	Details of suppor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Investigative and legal support	Medical support	Support for independence	Support for a child accompanied	Others (support for a perpetrator, etc.)
2017	123,223	55,739	3,530	19,162	7,629	25,022	12,141
	100	45.2	2.9	15.6	6.2	20.3	9.9
2018	169,682	89,796	5,151	21,188	9,564	31,328	12,655
	100	52.9	3.0	12.5	5.6	18.5	7.5

<Table-11: Record status of service used at Sunflower Centers>

Year	Type of damages (person)					Details of support (case)						
	Total	Sex offenses	Domestic violence	Prostitution	Others	Total	Counseling	Medicine	Investigative and legal support	Psychological treatment	Accompanying service	Social support, etc.
2014	28,487	20,693	5,517	239	2,038	260,005	92,610	62,584	47,488	31,577	3,493	22,253
2015	28,253	20,218	5,584	188	2,263	277,200	98,986	64,958	52,989	33,948	4,118	22,201
2016	26,878	19,134	5,135	151	2,458	313,523	102,880	73,051	57,441	30,858	4,722	44,571
2017	27,225	19,423	4,817	171	2,814	361,457	114,927	87,213	56,380	34,619	5,119	63,199
2018	27,450	20,449	4,147	182	2,672	398,690	125,347	100,929	58,227	35,866	5,902	72,419

<Table-12: Status of counseling offices for victims of sex offenses>

(unit: case, person)

Year	No. of offices	No. of workers			No. of counseling cases			Avg. no. of counseling cases per office
		Total	Regular workers	Non-regular volunteers	Total	Counseling on sex offenses	Counseling on other issues	
2014	154	1,001	417	584	146,750	89,975	56,775	953
2015	159	1,169	530	639	158,188	98,729	59,459	995
2016	167	1,379	549	830	158,029	101,028	57,001	946
2017	167	1,465	577	888	180,572	111,123	69,449	1,081
2018	170	1,451	622	829	241,343	154,378	86,965	1,420

<Table-13: Status of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of sex offenses>

(unit: facility, person)

Year	No. of facilities	No. of persons staying therein	No. of workers		
			Total	Regular workers	Non-regular volunteers
2014	29	310	153	139	14
2015	30	353	179	150	29
2016	30	363	166	150	16
2017	30	361	172	146	26
2018	31	365	165	161	4

<Table-14: Results of support for victims of sex offenses>

(unit: case)

Year	Tot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Investigative and legal support	Medical support	Support for school affairs	Support for independence	Others
2014	56,960	26,015	2,448	7,369	3,425	5,144	12,559
2015	93,012	50,046	2,260	11,560	6,444	9,163	13,539
2016	97,566	49,942	1,018	8,807	7,204	10,661	19,934
2017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2018	120,675	62,831	1,314	8,911	10,813	17,005	19,801

<Table-15: Records of free legal aid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ex offenses, etc.>

(unit: case)

		Processing									
		No. of cases processed	Remedy					Others			
			Total (no. of remedy cases)	Civil and family procedure			Criminal procedure	Dismissal	Referral	Withdrawal	Counseling
				Subtotal	Remedy under procedure	Remedy before procedure, etc.					
Domestic violence	2017	7,966	2,285	2,285	2,161	124	-	-	175	48	5,458
	2018	7,366	2,108	2,108	1,943	165	-	-	164	45	5,049
Sex offenses	2017	885	431	258	256	2	173	5	2	18	429
	2018	1,134	764	357	356	1	407	1	5	42	322

<Table-16: Records of legal aid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by KLAC>

(unit: person, case, KRW million)

Year	Persons	Cases	Amount for relief payment
2014	2,227	2,225	89,643
2015	2,273	2,271	120,954
2016	2,013	2,010	114,853
2017	1,921	1,916	113,557
2018	1,664	1,659	98,591
Jun.2019	725	725	40,955

<Table-17: Statistics of petitions received on torture and ill-treatment by NHRC>

(unit: case)

	Total	2016	2017	2018	Sep.2019
Total	1,004	346	284	229	145
Prosecutors	26	11	9	2	4
Police	978	335	275	227	141

<Table-18: Statistics of petitions proceeded on torture and ill-treatment by NHRC>

(unit: case)

Year of closure	Category	Total	Remedy of rights					Rejection	Referral	Dismissal	Suspension of investigation
			Subtotal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to impose a disciplinary action	Closure with settlement	Resolution during investigation				
Total	Total	993	54	17	0	7	30	427	12	484	16
	Prosecutors	24	3	3	-	-	-	10	-	10	1
	Police	969	51	14	-	7	30	417	12	474	15
2019~Sep.	Subtotal	133	5	3	0	1	1	52	0	75	1
	Prosecutors	2	-	-	-	-	-	1	-	1	-

	ors										
	Police	131	5	3	-	1	1	51	-	74	1
	Subtotal	255	14	6	0	2	6	108	4	128	1
2018	Prosecut ors	8	2	2	-	-	-	2	-	3	1
	Police	247	12	4	-	2	6	106	4	125	-
	Subtotal	243	15	4	0	2	9	111	1	111	5
2017	Prosecut ors	7	1	1	-	-	-	4	-	2	-
	Police	236	14	3	-	2	9	107	1	109	5
	Subtotal	362	20	4	0	2	14	156	7	170	9
2016	Prosecut ors	7	-	-	-	-	-	3	-	4	-
	Police	355	20	4	-	2	14	153	7	166	9

<Table-19: Status of increase in labor inspectors>

		2016	Aug.2017	Mar.2018	Sep.2018	Aug.2019
Prescribed no. of labor inspectors (person)		1,747	1,946	2,255	2,520	2,942
By duty	Head office	48	48	48	48	48
	Labor improvement	1,291	1,450	1,690	1,902	2,213
	Industrial safety	408	448	517	570	681
Increased no. thereof (person)		52	199	309	265	413
By duty	Labor improvement	52	160	240	212	300
	Industrial safety	0	40	69	53	113

<Table-20: Improvement progress of institution on business place change for migrant workers>

Provision	Content
Amendment to the guidelines in Apri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grounds for changing a place of business shall be acknowledged based primarily on evidence materials submitted by the migrant When an employer reports desertion of a migrant worker, the worker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of appeal via phone call or text When it is expected to take a long time until the final determination due to trial, etc., the business of place may be changed first
Amendment to the <i>Operating Rules of Councils for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i> in September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conflict over changing a place of business between an employer and a migrant worker may be resolved by the Sub-Committee of the Councils for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Amendment to the Public Notice in March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en an employer who had a migrant worker stay in a vinyl greenhouse does not comply with an order for correction to voluntarily correct the situation, the worker shall be allowed to change the business of place When the type of accommodation of which an employer informed a migrant worker upon the application for the employment permit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the worker shall be allowed to change the business of place
Amendment to the Public Notice in January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 emergency system for changing a business place (within three days) is introduced for the case where an employer committed a sex offense to a migrant worker When the standards for accommodation facilities are not satisfied, a migrant worker shall be allowed to change the business of place The scope of perpetrators of unfair treatment against migrant workers is expanded to include employers, colleagues,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etc. Discretionary standards such as “when it is difficult to keep the employment relationships anymore” among the requirements for permit for changing a

	business place are deleted, and such requirements are specified.
Amendment to the Public Notice in July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grounds for changing a business place include the following cases: (i) an employer does not comply with the standards for a dormitory provided in Article 55~58-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SA; (ii) an employer does not inform a migrant worker of information on a dormitory; or (iii) provides the information different from the fact and does not correct it

<Table-21: Statistics of medical workers and treatment records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in 2019>

(unit: person)

	Medical workers		Treatment records			
	Doctors	Nurses	Annual total no. of persons treated	Daily avg. no. of persons treated	Outpatient treat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Total	3	3	22,217	29.8	184	590
Hwaseong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1	1	10,673	43	118	238
Cheongju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1	1	6,407	25.8	28	149
Yeosu Immigration Office	1	1	5,137	20.7	38	203

*Daily average number of persons treated: Annual total number of persons treated÷number of working days
(number of working days excluding holidays)

<Table-22: Operating status of “Donggam Program” in immigration centers in 2019>

[Hwaseong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Number of times provided	Participants
Cultural experience	Traditional etiquette	49	838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47	1,408
	Korean dance	44	1,026
	Korean language	34	976
Healthcare	Yoga	46	1,069
	Haircut, beauty care	21	820
Total		241 times	6,137 persons

[Cheongju Immigration Processing C]

		Number of times provided	Participants
Healthcare	Yoga	46	601
	Skincare	25	436
	Haircut	12	121
	Everyday healthcare	23	354
	Religion	41	186
Total		147 times	1,698 persons

[Yeosu Immigration Office]

		Number of times provided	Participants
Cultural experience	Korean language	46	820
Healthcare	Yoga	43	804
	Haircut, beauty care	22	236
Religion, recreation	Singing class	18	382
	Religious activity	49	847
Total		178 times	3,089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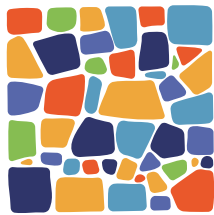
[Incheon Immigration Office]

		Number of times provided	Participants
Healthcare	Yoga	33	328
	Haircut, beauty care	24	339
	Haircut, beauty care	27	238
Total		84 times	905 persons

<Table-23: Status of In-patients in Psychiatric Institutions>

Time	In-patients	Voluntary Hospitalization	Consented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by Legal Guardians			Administrative Hospitalization
				Subtotal	Relatives, etc.	Head of Si, Gun or Gu	
Dec. 31 2016	69,162 (100%)	26,545 (38.4%)	-	42,523 (61.5%)	39,586 (57.2%)	2,937 (4.2%)	94 (0.1%)
Apr. 30 2017	66,958 (100%)	27,877 (41.6%)	-	38,977 (58.2%)	36,269 (54.2%)	2,708 (4.0%)	104 (0.2%)
Jun. 23 2017	66,688 (100%)	30,536 (45.8%)	5,150 (7.7%)	29,002	29,002	-	2,000
		35,686 (53.5%)		(43.5%)	(43.5%)		(3.0%)
Aug. 21 2017	67,605 (100%)	31,066 (45.9%)	8,023 (11.9%)	26,166	26,166	-	2,350
		39,089 (57.8%)		(38.7%)	(38.7%)		(3.5%)
Dec. 29 2017	66,658 (100%)	31,274 (46.9%)	10,822 (16.2%)	22,050	22,050	-	2,512
		42,096 (63.2%)		(33.1%)	(33.1%)		(3.8%)

Apr. 23 2018	66,523 (100%)	30,171 (45.4%)	11,623 (17.5%)	22,169 (33.3%)	22,169 (33.3%)	-	2,560 (3.8%)
		41,794 (62.8%)					
Sep. 01 2018	67,429 (100%)	30,274 (44.9%)	12,682 (18.8%)	21,677 (32.1%)	21,677 (32.1%)	-	2,796 (4.1%)
		42,956 (63.7%)					
Dec. 31 2018	66,027 (100%)	30,085 (45.6%)	13,073 (19.8%)	20,123 (30.5%)	20,123 (30.5%)		2,746 (4.2%)
		43,158 (65.4%)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처: 법무부 인권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홈페이지 : www.moj.go.kr

편집·인쇄 : 동광문화사 02-503-5165